

P000 | 2017. 12.

식품산업의 신성장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식품산업진흥정책방안
마련 연구

최지현·이용선·박기환·최종우·허성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최지현 | 명예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이용선 | 선임연구위원 | 제2, 3장 집필

박기환 | 선임연구위원 | 제3장, 부록 집필

최중우 | 부연구위원 | 제3장, 부록 집필

허성윤 | 연구원 | 제2, 4장 집필

정책연구보고 P000

식품산업의 신성장산업화를 위한 증장기 식품산업진흥정책방안 마련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0000. 0.

발행인 | 000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000

ISBN | 979-11-6149-000-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0000000000)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5
3.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여건 전망

1. 식품산업의 현황과 구조 변화 15
2. 식품제조업의 경영분석 24
3. 식품산업의 여건 전망 28
4. 시사점 35

제3장 제2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추진성과와 당면과제

1. 2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기본방향 37
2. 주요과제별 성과와 당면문제 39

제4장 식품산업의 혁신성 및 정책성과 평가

1. 혁신성 평가 89
2. 정책성과 평가 106

제5장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방안

1. 계획수립 절차 124
2. 기본방향 125
3. 비전 및 정책목표 129
4.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과제 및 주요 내용(안) 135

부록

1. 일본의 식품산업정책	160
2. 유럽의 식품산업정책	175
3. 미국의 식품산업정책	185

참고문헌	189
-------------------	-----

표 차례

제1장

<표 1-1> 연구협의회 및 전문가 간담회 추진 현황	12
-------------------------------------	----

제2장

<표 2-1> 식품산업 산업분류별 현황	16
<표 2-2> 식품산업 전체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현황 ...	17
<표 2-3> 식품산업 부문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현황	18
<표 2-4> 식품산업 업종별 출하액 연도별 추이	22
<표 2-5>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 추이	23
<표 2-6> 식품제조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25
<표 2-7> 식품제조업 업종별 주요 경영지표 비교	26
<표 2-8> 식품제조업 기업규모별 주요 경영지표 비교	26
<표 2-9> 식품제조업 업종별 경영규모 지표(2016년 업체당 평균)	27
<표 2-10> 식품제조업 업종 및 기업규모별 연구개발집약도	27
<표 2-11> 식품제조업 업종 및 기업규모별 광고선전비 비중	28
<표 2-12> 잠재성장률 추이	29

제3장

<표 3-1>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40
<표 3-2> 산업별 연구개발비 추이	40
<표 3-3>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 접속자수 누계	47
<표 3-4> 식품산업의 쌀소비량 총량추정 통계치 비교	49
<표 3-5> 식품산업분야 모태펀드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	50

<표 3-6> 식품관련산업분야 모태펀드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	51
<표 3-7> 2015년 외식 및 한식관련 성과지표의 달성도	56
<표 3-8>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현황	57
<표 3-9> 수출지원사업 단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59
<표 3-10> 수출지원사업 예산 집행 미달 사업 현황	61
<표 3-11> 한식진흥 관련 예산 집행 현황	63
<표 3-12>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65
<표 3-13>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66

제4장

<표 4-1> 산업혁신지표(SIS) 항목별 구성	90
<표 4-2> 제조업 산업혁신지수 분석결과(1)	94
<표 4-3> 제조업 산업혁신지수 분석결과(2)	96
<표 4-4> 서비스업 산업혁신지수 분석결과(1)	101
<표 4-5> 서비스업 산업혁신지수 분석결과(2)	103
<표 4-6> 응답대상 구분별 유효 표본 수 및 비중	106
<표 4-7> 분야별 표본 수 및 비중	107
<표 4-8> 응답대상 수혜업체들의 수혜 사업 종류와 비중	107
<표 4-9> 제2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분야별 평가	108
<표 4-10>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 평가	111
<표 4-11>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분야 평가	113
<표 4-12> 농식품 수출 확대 분야 평가	115
<표 4-13>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분야 평가	117
<표 4-14> 외식산업,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분야 평가	119
<표 4-15> 농업과 연계로 인한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도 평가	121
<표 4-16> 식품제조·가공산업 분야의 성장에 기여도 평가	121
<표 4-17> 중소식품/전통식품산업 분야의 성장에 기여도 평가	122
<표 4-18> 외식산업분야의 성장에 기여도 평가	122

<표 4-19> 농식품 수출증대에 기여도 평가 123

제5장

<표 5-1>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안)에 대한 우선순위 154

<표 5-2>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의 세부과제별 중요도 155

<표 5-3> 식품산업 혁신 인프라 확충의 세부과제별 중요도 156

<표 5-4>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지원의 세부과제별 중요도 ... 157

<표 5-5>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의 세부과제별 중요도 158

<표 5-6>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의 세부과제별 중요도 158

부록

<부표 1> 독일의 맥주 교육 연구기관 160

<부표 2> 독일의 급식 표준인증제도 161

<부표 3> USDA의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 167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	14
------------------------	----

제2장

<그림 2-1> 식음료제조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와 노동생산성 추이	20
<그림 2-2> 종업원 규모별 종사자 1인당 매출액	21
<그림 2-3>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21
<그림 2-4> 연령대별 인구 수	29
<그림 2-5> 향후 5년간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칠 이슈	31
<그림 2-6> 최근 5년 대비 향후 5년 생산액 전망	32
<그림 2-7>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식품산업의 고용 영향에 대한 예상 · 33	
<그림 2-8> 향후 5년간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분야	33
<그림 2-9> 향후 5년간 투자 예상	34

제3장

<그림 3-1> 2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기본방향	38
<그림 3-2> 농식품 수출 실적 추이	60

제4장

<그림 4-1> 제조업 업종별 혁신지수 비교	98
<그림 4-2> 식품 산업과 제조업(평균) 혁신지수 비교	99
<그림 4-3> 서비스업 업종별 혁신지수 비교	104
<그림 4-4> 식품 산업과 제조업(평균) 혁신지수 비교	105
<그림 4-5>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 IPA 분석	112

<그림 4-6>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분야 IPA 분석	114
<그림 4-7> 농식품 수출 확대 분야 IPA 분석	116
<그림 4-8>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분야 IPA 분석	118
<그림 4-9> 외식산업,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분야 IPA 분석	120

제5장

<그림 5-1> 제3차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안)	130
<그림 5-2> 식품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2010-2015)	131
<그림 5-3> 식품산업의 고용 추이(1993-2016)	133
<그림 5-4>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와 목표	135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시장개방과 농식품부 출범에 따라 식품산업정책 추진의 필요성 대두

- 1993년 UR 체결 이후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음.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정(1992), 농식품부 가공산업과(1994) 및 식품산업과(1999) 신설

-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어업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과 연계 발전 등을 목표로 식품산업 진흥이 농정대상에 포함되어 이에 따른 조직체계 출범, 법률 제정, 예산 확보 등이 이루어 짐.
 - 조직: 식품산업정책단 신설('08), 식품유통정책관실('09), 식품산업정책관실(정책과, 진흥과, 외식과, 수출팀)로 개편('11)
 - 법률: 식품산업진흥법('0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09), 식생활교육지원법('09), 김치산업진흥법(11), 외식산업진흥법('11)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원산지표시법, 유기식품관리법 등도 식품과 관련
- 예산: ('08) 4,807억 원 → ('12) 7,317 → ('14) 8,198 → ('16) 8,370

□ 2008년부터 식품산업 진흥을 목표로 1차 및 2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추진

- 2008년 식품산업진흥을 목표로 '식품산업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한식 세계화, 식품 R&D 투자확대('10.1 신설), 농식품 수출 확대(100억불) 등 중장기 정책과제 수립 및 시행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 그러나 '식품산업종합대책'은 빠르게 바뀌는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업과의 연계방안 수립이 미흡하다는 평가 등을 받았음. 따라서 기존의 종합대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2011년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종합대책'을 수정·보완한 2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으로 2012부터 2017년까지의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 비전으로는 '농어업을 이끄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제시
 - 주요 과제로 식품산업 인프라 증가, 농어업과의 연결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과제를 제시
 - 인프라분야: 식품 연구개발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 정보관리 강화 등
 - 농어업 연계강화: 지역기반식품육성, 지역식품가공 활성화, 농공상 융합 기업 성장도모 등
 - 글로벌 경쟁력강화: 농수산식품의 수출확대,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발효식품 활성화 등
 -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식생활 교육,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등
- 2차 기본계획은 2008년 수립된 식품산업종합대책과 비교해 볼 때 민간투자 확

대, 농식품기업지원, 농공상융합형기업 육성 등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었으며, 기능성식품 시장 및 연관산업의 활성화 지원정책 등이 새롭게 제시됨.

□ 국내외 식품시장여건변화에 대응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국내는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의 확대, 건강,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합리적 소비트렌드 지속 등 식품시장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세계 식품시장은 2012년 이후 연평균 3.2%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글로벌 식품기업 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미흡함.
 -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은 7% 미만
 - 한·중 FTA 효과 활용한 중국시장 공략 미흡(중국 수입식품시장에서 한국비중 1%미만)
- 식품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R&D 투자 부족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에 직면함.
 - 식품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 0.7%, 제조업(3%)의 1/4 수준
 - 국내 식품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

□ 식품산업의 신성장산업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필요

- 식품산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글로벌화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4차산업 혁명시대에 식품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 영역은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등으로 식생활, 식품유통등으로 소비자와 가까운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한 정책

지원도 필요함.

□ 여건변화 및 기존 식품산업 중장기계획의 평가에 기초한 새로운 중장기 식품산업진흥정책 방안 마련

- 식품산업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의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한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전망,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등
 - 기존 식품산업관련정책의 성과와 당면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분야별 방향, 정책과제, 과제 추진방안 제시
-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등의 경제정책에 부응하여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의 진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산업의 대내외 여건변화, 국내 경제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제 2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의 식품산업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 정책과제,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선행연구 검토

- 최지현 외(2009-2013)는 식품산업과 전후방 연계산업의 당면문제 도출과 발전전략을 제시하여 식품산업 연구와 관련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5개년에 걸쳐 식품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함.
- 1년차 연구인 최지현 외(2009)에서는 제조업과 유통업, 외식업 등 식품산업 업종과 제조업 부문별로 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식품제조업과 농업의 연계분석 등을 수행함. 식품산업을 크게 식품제조업과 식품유통업, 외식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국민경제에서 부가가치 기준 5%, 고용인원 기준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식품제조업은 종사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55%를 차지하는 등 영세한 특징이 있고 일반제조업에 비해 산업집중도가 높은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농산물 이용률은 대기업일수록 수입산 원료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떡류와 두부, 된장, 고추장, 쇠고기 등은 국내산의 품질경쟁력이 우위에 있으므로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소비를 확대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함.
- 2년차 연구인 최지현 외(2010)에서는 콩가공, 쌀가공, 과일가공, 인삼·약초 가공산업에 대한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 등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발전 전략을 제시함. 주요 연구대상인 이들 산업은 공통적으로 영세한 산업구조와 산업내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식품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부가가치율과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평가하였으며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함.
 - 국산원료의 안정적 사용기반 구축을 위해 국산원료 생산비 절감, 재배의 단지화 및 조직화, 계약재배 활성화

- 소비자 수요에 맞춘 새롭고 다양한 제품개발 및 국내 원료가공에 적합한 가공기술 개발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 소비촉진을 위해 영양학적 우수성과 건강기능성의 적극적 홍보
 - 원료와 가공품에 대한 품질관리의 과학화
 - 표시제도의 개선이나 조세제도 개편 등 정책적인 제도 개선
- 3년차 연구인 최지현 외(2011)는 국내 농산물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육가공과 유가공, 김치 및 천일염 가공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당면문제 도출과 발전전략 제시함. 해당 산업의 당면문제로는 ① 제품차별화 등 생산전략 미흡, ②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미흡, ③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와 인프라 부족, ④ 관련법·제도의 미흡 등이 제시되었으며 도출된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음.
- 국산원료 사용확대를 위한 계약재배 확대, 전략적 제휴, 계열화 등 품목 특성에 따른 다양한 연계 강화
 - 고품질 안전한 식품개발을 위한 정부의 R&D분야 지원확대
 - 김치는 한식세계화와 연계하여 공격적인 해외시장 공략 추진
 - 육가공제품 관리의 일원화, 염관리법의 입법화
- 4년차인 최지현 외(2012)에서는 외식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 농업과의 연계 등과 관련한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발전전략을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한식점 대상 국산식재료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쌀과 채소 등이 비교적 국산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국산 이용률이 더욱 낮은 것을 확인함. 외식산업과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언으로는 ① 대량거래가 가능한 지역 시군유통회사 또는 조합공동사업 법인과의 직거래, ② 소상공인 도매물류센터건립 등 영세 음식점의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창구 마련, ③ 품목별 산지유통조직 연계·육성, ④ 산지에서의 구체적,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⑤ 전처리시설 활용과 신기술 도입, ⑥ 우수한 식재료 전문 협력벤더 육성 등임.

- 마지막 5년차인 최지현 외(2013)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식품제조업의 국산 이용률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개발(R&D)사업과 컨설팅 사업, 해외판촉 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전통식품산업 등 정책성과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과제를 정리함.
 - 연구개발(R&D)사업은 연구비 수준을 10억 원 수준까지 높여 산업화, 실용화 성과를 제고
 - 컨설팅 사업은 성장단계별로 컨설팅과 교육수요를 구분하여 이에 대응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체계를 구축
 - 해외판촉 사업은 지원 혜택을 받은 수출업체의 매출액이 비수혜 업체 보다 2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규모의 확대가 필요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사업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보조금 집행 등 추진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과 지속가능성과 사업성을 염두에 둔 매뉴얼식 접근이 필요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은 효과가 분명한 정책으로 분석되었으나 불용률, 높은 금리,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있어 금리의 하향조정과 영세업체에 대한 저율혜택 등이 필요하고 식품가공원료 매입 및 시설자금 지원사업의 자금 지원 규모와 대상이 필요함을 주장
 - 전통식품산업은 사업당 예산수준이 낮아 세부사업의 통합조정과 사업당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
- 또한, 최지현 외(2013)에서는 1~5년차 연구를 종합하여 식품산업정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추진방안은 ① 정책 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산 확보, ②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의 정책형성을 위한 평가 강화, ③ 사업 중간관리 강화를 위한 환류시스템 마련, ④ 가공원료의 안정적 공급 구축 등임.
- 이용선 외(2016)는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모습을 전망하고 분야별, 지역별로 발전전략을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식품산업의 장기비전을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식

품산업 육성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② 안전한 농축산물 관리체계 구축, ③ 유통구조 개선, ④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및 해외협력 강화, ⑤ 로컬푸드·직거래 활성화, ⑥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 ⑦ 국민영양 및 식생활 교육 확대의 7대 전략과제를 제시함.

- 한편, 식품산업 육성 및 국산농산물 수요확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 식품·외식산업 인프라 구축, ② 식품 R&D 협의체 운영 활성화, ③ 전통식품 및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④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지원, ⑤ 한식 진흥정책 강화가 포함

○ 황의식 외(2014)는 식품산업부문과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 식품산업분야의 재정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구체적으로는 식품산업부문의 당면과제로 ① 영세한 산업구조 개선, ②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간의 연계강화, ③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제시하였으며 이하의 내용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 단기 용자중심의 지원보다는 식품기업의 애로요인을 해결하여 주는 컨설팅 지원이나 투자지원 등으로 다양화 모색
- 식품기업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신용력을 보완하는 대책 수립
-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정책자금을 통해 매입의무를 부여하기보다 사전 평가에서 매입실적을 반영하는 등 평가기능을 강화
- 식품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반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
- 식품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비 부담을 확대
- 기술집약형 식품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R&D투자 효율성 확대 및 창업 활성화

○ 박기환 외(2013)는 농식품 수출의 당면문제와 실태를 진단하고, 국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수출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함. 농식품 수출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물량의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수출품목 집중 육성, 수출국 다변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수출전용단지 제도의 정착방안, 가공식품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수출활성화 방안, 대중국 진출전략 수립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 수출전용단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출전용단지 지정품목을 수입보협제도 대상품목으로 실시 후 확대해 나가는 방안과 가격안정보협제도의 재도입 고려, 유류비나 종자(종묘)구입비 지원 검토 등
 - 가공식품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확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의 우선배당, 계약재배 시 농가에 세제혜택 부여, 인프라 지원형태의 지원체계 구축 등
 - 대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시장 세분화를 통한 표적 시장 설정, 검역제도에 따른 가공식품 중심의 진출, 주요 권역별 수출전진기지 건립과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등
- 홍석인 외(2009)는 식품산업 연구개발(R&D)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일류 식품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기술 분야로 ① 융·복합식품 기술, ② 고부가가치 식품소재 개발, ③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④ 식품안전성 확보를 제시함.
- 박민규(2012)는 대구지역의 식품산업 육성방안을, 국승용 외(2011)는 천안지역의 식품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등, 식품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단위의 연구도 수행된 바 있음.
- 박민규(2012)는 대구지역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적 지원, 마케팅 홍보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산업산학연관협의체 구성과 외식업, 문화분야와의 접목, 행정조직 개편, 유관기관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국립힐링푸드 연구원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
 - 국승용 외(2011)는 천안시의 교통, 도농균형, 향토식품자원 등의 여건을 살려 로컬푸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천안 북부권역의 과실주공동숙성사업과 향토식품산업 육성, 동남부 권역의 순대 클러스터와 소규모 식

품산업의 활성화, 남부권역의 특산물인 호두와 관련한 1,2,3차 연계발전 등을 제시

- 한편, 일본 농림수산업성(農林水産省)은 식품 산업의 미래비전(食品産業の將來ビジョン)을 책정하고 시행 중에 있음. 일본 식품산업의 미래비전은 ‘국내시장 활성화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개척’을 식품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과제와 행정의 역할을 정리함¹.
 - 일본 식품산업의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목표는 ① 2020년 식품관련시장 생산액 120조 엔 달성(2009년 96조 엔), ② 2020년까지 6차 산업화 시장 규모 10조 엔 달성(2010년 1조 엔, 2015년 3조 엔), ③ 2020년까지 농식품 수출액 1조 엔 달성, ④ 2020년까지 6조 엔 규모의 신사업 창출 등
- 본 연구는 기존에 정부가 수행한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5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님. 특히 다양한 계층의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를 기초로 성과를 평가하고, 주요정책별, 사업별로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¹ 일본 농림수산업성(<http://www.maff.go.jp>).

3. 연구범위 및 방법

3.1. 연구범위

- 본 연구는 제 2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향후 5년간(2018~2023)간의 제 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또한 식품산업정책 범위는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에 국한함.

3.2. 연구방법

- 관련 문헌 자료 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통계자료 및 선행 조사연구 등 활용
 - 해외 사례 파악을 위해 일본, 유럽 등의 정책 자료 및 데이터 이용
-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 식품산업 관계자 및 관계기관 방문조사, 주요국의 식품산업정책 추진 실태조사
 - 식품산업 진흥 계획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 정책 평가

- 관리의 적절성: 사업비 집행율, 사업모니터링 및 점검
 - 성과 평가: 성과지표 달성 정도,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및 요인분석
- 연구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분석결과 논의 등을 위해 업무관계자 수시 연구협의회 개최
 - 식품산업 각 분야별 전문가그룹 간담회(FGI) 실시
 - 전문가그룹 간담회(FGI)는 4대 분야 10여 개 분과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추진
 - 기본계획 수립(안)의 검토 및 추가 논의 사항 발굴 등을 위해 업계, 학계, 소비자 등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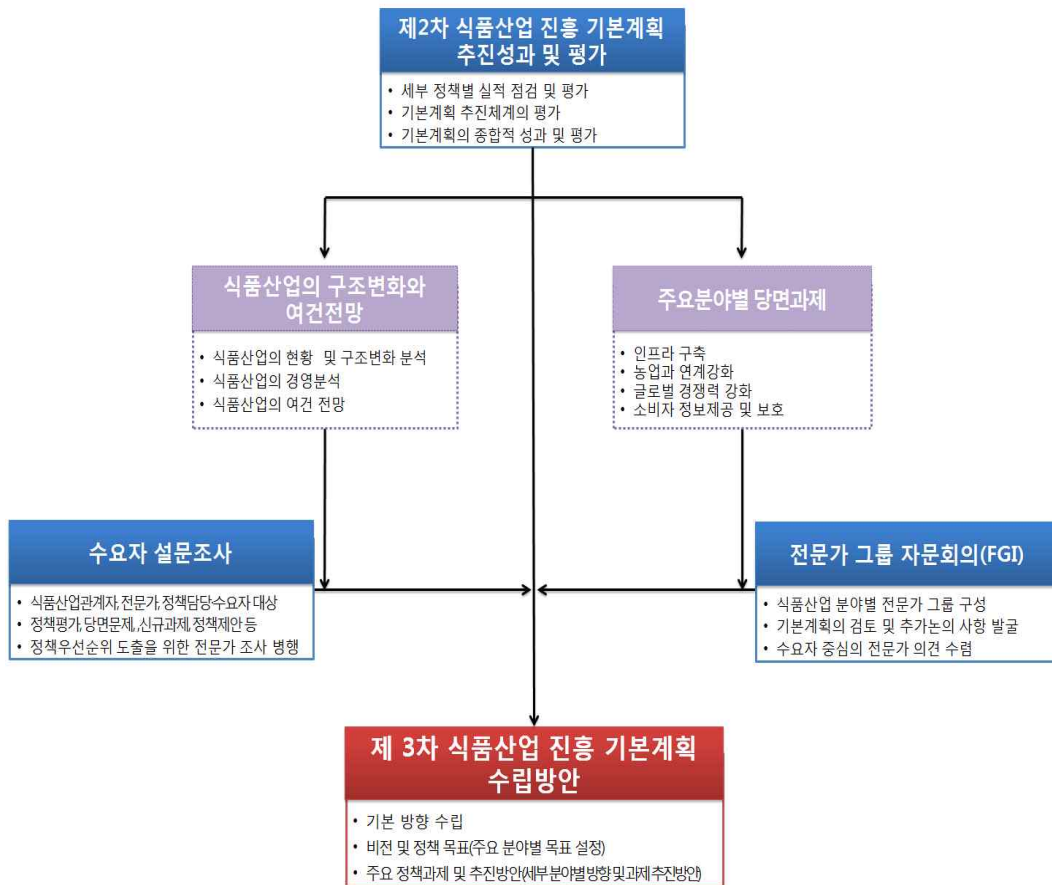
<표 1-1> 연구협의회 및 전문가 간담회 추진 현황

일자	주제	참석자
2017.06.16.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발주처 사전협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2017.06.23.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유관기관 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농협중앙회, 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진흥청
2017.07.19.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이정희(중앙대), 이병오(강원대), 안병일(고려대), 임동준(더바이어), 이주량(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08.10.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발주처 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2017.08.17.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상생협력 전문가 간담회	김범호 전무(SPC), 임석환 팀장(CJ), 박재범 대표(상하농원), 전대경 대표(미듬영농조합), 김희중 팀장(상생협력추진본부), 홍석구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2017.08.18.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R&D 전문가 간담회	홍석인 박사(한국식품연구원), 이주량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류영섭 실장(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김정년 부원장(한국식품과학연구원), 신현수 소장(일동

		후디스 중앙연구소), 홍성빈 대표(바이오믹스), 송진 연구관(국립농업과학원), 정찬민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2017.8.31.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소·전통식품 전문가 간담회	이관 센터장(aT 기업지원센터), 이충관 회장(신선편이식품협회), 고광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 정도연 박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2017.9.6.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발주처 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2017.9.8.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출 전문가 간담회	이원기 부장(aT 농산수출부), 정연수 부장(aT 식품수출부), 신학기 과장(농진청 수출농업지원과), 차우진 이사(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김상길 부장(NH무역 농산수출부), 송강섭 사무국장(한국과프리카 생산자 자조회)
2017.09.15.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유선미 과장(농과원 농식품자원부), 정충섭 과장(농진청 농촌자원과), 이원기 부장(aT 수출사업처), 이성복 부장(aT 식품산업처)
2017.09.20.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식품산업 전문가 간담회	남재작 실장(실용화재단), 홍석인 박사(한식연), 김성훈 교수(충남대), 김관수 교수(서울대), 안병일 교수(고려대), 이병오 교수(강원대), 양석준 교수(상명대)
2017.10.20.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식품산업 전문가 간담회	김성훈 교수(충남대), 이정희 교수(중앙대), 양석준 교수(상명대)

3.3. 연구추진체계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



제2장

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여건 전망

1. 식품산업의 현황과 구조 변화

1.1. 식품산업 현황

1.1.1. 업종별 현황

- 식품산업은 관련통계의 집계 방법 및 출처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지고 있으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음식점업(외식)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
- 2015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식품산업 총 매출액은 191.7조 원 수준이며 사업체는 전국적으로 53만 1,568개가 영업 중이며, 184만 1,239명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임.
 - 식료품 제조업 매출액 90.6조 원, 사업체 56,490개, 종사자 313,422명
 - 음료 제조업 매출액 11.3조 원, 사업체 1,464개, 종사자 18,142명

- 음식점업(외식) 매출액 89.8조 원, 사업체 473,614개, 종사자 473,614명
- 세부산업별로는 기타 식품 제조업의 매출액(30.7조), 사업체(37,735개), 종사자 규모(154,376명)가 가장 크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5.5조),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5,482개)의 규모도 큰 편임.

<표 2-1> 식품산업 산업분류별 현황

단위: 개, 명, 백만 원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식품산업 전체	531,568	1,841,239	191,690,260
식료품 제조업	56,490	313,422	90,626,328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243	42,894	15,451,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612	40,451	7,331,679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089	24,980	4,075,43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3,257	7,664	2,551,953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231	10,525	8,469,23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5,482	21,739	10,212,478
기타 식품 제조업	37,735	154,376	30,665,274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841	10,793	11,869,175
음료 제조업	1,464	18,142	11,260,398
알콜음료 제조업	955	9,123	5,485,651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509	9,019	5,774,747
음식점업	473,614	1,509,675	89,803,534

자료: 국가통계포털(경제총조사)<kosis.kr>

1.1.2. 종사자 규모별 현황

- 식품산업 전체를 종사자 규모별로 구분하여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을 구분하여 보면,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2~4명이 종사중인 사업체가 33만 6,152개, 63.2%로 다수를 차지함. 종사자 10인 미만(1~9명)은 51만 1,393개가 존재하며 전체의 96.2%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사업체 수 기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업체만을 조사하는 것임.

- 종사자 규모별로 몇 명의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역시 2~4명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중인 인원이 전체 45.9%를 차지하며, 10인 미만 사업체에 1백 34만 859명, 전체 72.9%가 종사하고 있음.
- 종사자 규모별로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2~4명 규모 사업체의 매출액이 42.7조 원, 22.3%로 다수를 차지하며 1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매출액과 유사함. 이는 498개의 100인 이상 사업체가 336,152개의 2~4명 규모 사업체의 매출액과 유사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

<표 2-2> 식품산업 전체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현황

단위: 개, 명, 백만 원

종사자 규모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매출액	비중
계	531,568	100.0	1,841,239	100.0	191,690,260	100.0
1명	113,520	21.4	113,520	6.2	4,634,555	2.4
2~4명	336,152	63.2	844,674	45.9	42,730,430	22.3
5~9명	61,721	11.6	382,665	20.8	32,170,545	16.8
10~19명	13,479	2.5	172,904	9.4	20,619,154	10.8
20~49명	4,840	0.9	142,524	7.7	26,344,005	13.7
50~99명	1,358	0.3	91,259	5.0	22,432,256	11.7
100~199명	368	0.1	49,396	2.7	18,613,981	9.7
200~299명	75	0.0	17,914	1.0	9,603,071	5.0
300명 이상	55	0.0	26,383	1.4	14,542,263	7.6

주: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음식점업을 합한 결과임.

자료: 국가통계포털(경제총조사)<kosis.kr>

- 식료품과 음료, 음식점(외식)을 구분하여 종사자 규모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식품산업의 영세성은 크게 다르지 않음. 식료품과 음료, 음식점(외식) 모두 2~4명 규모 업체 비중이 각각 54.5%와 48.5%,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식료품 제조업은 종사자 1인 사업체의 비중이 26.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표 2-3> 식품산업 부문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현황

단위: 개, 명, 백만 원

분류	종사자 규모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매출액	비중
식 료 품 제 조 업	계	56,490	100.0	313,422	100.0	90,626,328	100.0
	1명	15,004	26.6	15,004	4.8	611,880	0.7
	2~4명	30,807	54.5	70,800	22.6	4,645,931	5.1
	5~9명	5,793	10.3	38,903	12.4	7,586,848	8.4
	10~19명	2,242	4.0	30,474	9.7	8,574,754	9.5
	20~49명	1,763	3.1	53,927	17.2	17,742,388	19.6
	50~99명	546	1.0	37,144	11.9	17,649,792	19.5
	100~199명	239	0.4	33,372	10.6	14,855,380	16.4
	200~299명	57	0.1	13,588	4.3	7,607,315	8.4
	300명 이상	39	0.1	20,210	6.4	11,352,040	12.5
음 료 제 조 업	계	1,464	100.0	18,142	100.0	11,260,398	100.0
	1명	257	17.6	257	1.4	13,112	0.1
	2~4명	710	48.5	1,832	10.1	106,378	0.9
	5~9명	250	17.1	1,675	9.2	181,717	1.6
	10~19명	90	6.1	1,251	6.9	190,035	1.7
	20~49명	83	5.7	2,723	15.0	1,250,767	11.1
	50~99명	37	2.5	2,489	13.7	1,706,261	15.2
	100~199명	20	1.4	2,800	15.4	3,022,356	26.8
	200~299명	9	0.6	2,153	11.9	1,861,449	16.5
	300명 이상	8	0.5	2,962	16.3	2,928,323	26.0
음 식 점 업	계	473,614	100.0	1,509,675	100.0	89,803,534	100.0
	1명	98,259	20.7	98,259	6.5	4,009,563	4.5
	2~4명	304,635	64.3	772,042	51.1	37,978,121	42.3
	5~9명	55,678	11.8	342,087	22.7	24,401,980	27.2
	10~19명	11,147	2.4	141,179	9.4	11,854,365	13.2
	20~49명	2,994	0.6	85,874	5.7	7,350,850	8.2
	50~99명	775	0.2	51,626	3.4	3,076,203	3.4
	100~199명	109	0.0	13,224	0.9	736,245	0.8
	200~299명	9	0.0	2,173	0.1	134,307	0.1
	300명 이상	8	0.0	3,211	0.2	261,900	0.3

자료: 국가통계포털(경제총조사)<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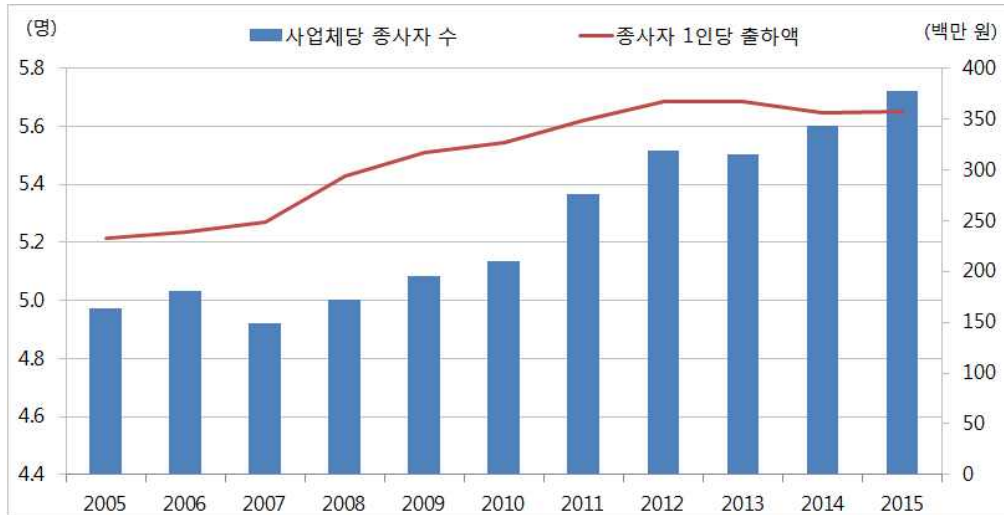
- 음료 제조업의 경우에는 2~4명 규모의 사업체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의 0.9%만을 점유함. 300명 이상 대기업 8개 사업체가 존재하며 여기에 종사된 인원이 전체 종사자의 1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또한 이들 8개 사업체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0%로 매우 높아 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2~4명 규모 업체 비중이 64.3%로 매우 높으며 식료품과 음료에 비해 종사자 규모별로 매출액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음.

1.2. 식품제조업의 구조 변화

1.2.1. 사업체 수, 고용 및 생산성

-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과거 3~5년 간 계속 증가하였으며, 노동생산성은 최근 정체되고 있음.
- 식음료제조업 사업체 수는 2010~2012년 5만 4,000여 개에서 계속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5만 8,000개 수준이 됨.
- 식음료제조업 종사자 수는 2011년부터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2015년에는 33만 명 수준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함.
- 종사자 1인당 실질출하액은 노동생산성 지표로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후반 이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종사자 1인당 실질출하액은 2012년 이후로는 3억 6,0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노동생산성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식음료제조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와 노동생산성 추이



주 1) 노동생산성 지표인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은 실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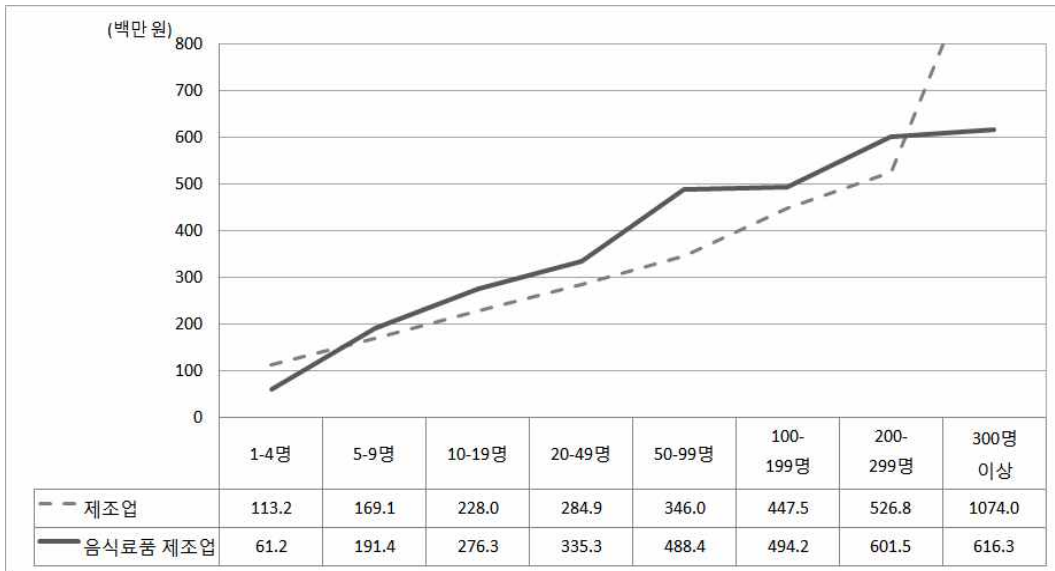
2)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종사자 규모 1인 이상 기준

3)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은 종사자 규모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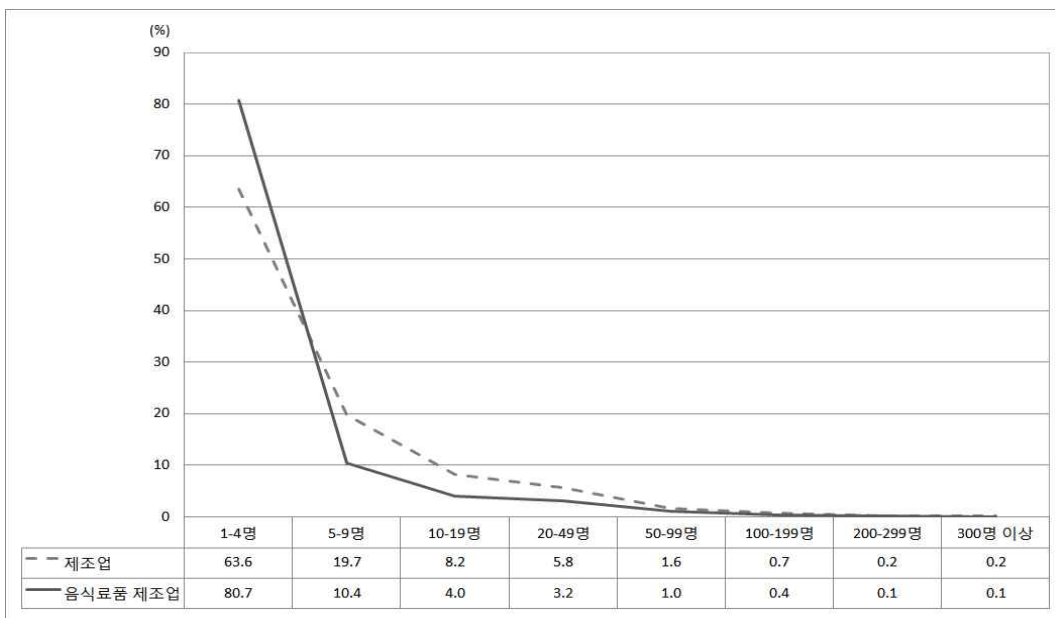
- 식품제조업은 종업원 규모가 5인 미만인 사업체 비중이 가장 커서 영세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제조업 전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 수 비중이 63.6%인 데 비해, 음료식품제조업은 80.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식품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영세규모 사업체에서는 제조업 평균보다 낮고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경향이 있음. 종사자 1인당 평균매출액은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규모에서는 식품제조업체가 6,100만원으로 제조업체 평균 1억 1,300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종업원 5~9명의 소기업 규모에서는 식품제조업체의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1억 9천만 원으로 제조업 평균(1억 6천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종업원 50~99인 규모의 식품제조업의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4억 8,800만원으로 제조업 평균(3억 4,600만 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

<그림 2-2> 종업원 규모별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자료: 국가통계포털(경제총조사)<kosis.kr>

<그림 2-3>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자료: 국가통계포털(경제총조사)<kosis.kr>

1.2.2. 출하

- 식품제조업 출하는 최근에도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됨. 음료식품제조업 출하액은 명목기준 2012년 64조 4,110억 원에서 2016년 75조 8,680억 원(추정) 수준으로 증가함.
- 음료식품제조업 출하액은 2008~2012년 간 연평균 8.0%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연 4.2%로 증가율이 감소함. 실질 기준 출하액 증가율도 감소함.
- 업종별 출하액은 육가공업, 수산가공업, 곡물가공업, 기타식품제조업, 음료업이 증가한 반면, 과실채소가공업, 유지업, 유가공업은 최근 정체됨.

<표 2-4> 식품산업 업종별 출하액 연도별 추이

단위: 십억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육가공업	7,346	8,956	10,169	11,066	10,820	11,092	12,588	13,483	14,477
수산가공	3,073	3,482	4,287	4,227	4,651	4,541	4,781	5,454	5,790
과채가공	1,836	1,988	2,081	2,311	2,412	2,723	2,803	2,974	3,175
유지	2,440	2,209	2,475	2,259	2,343	2,168	2,029	2,119	2,104
낙농품	5,880	6,629	6,111	7,119	7,403	7,544	7,981	8,009	7,827
곡물가공	4,238	5,129	4,831	5,626	5,999	6,103	5,675	5,982	6,216
기타식품	14,428	16,333	17,863	19,975	21,221	22,000	23,248	24,837	25,132
알콜음료	4,571	4,524	3,892	4,557	4,728	4,991	5,408	5,329	5,280
비알콜음료	3,487	3,338	3,865	4,018	4,834	4,847	4,999	5,403	5,867
계	47,319	52,538	55,574	61,158	64,411	66,009	69,442	73,500	75,888

주: 2016년 출하액은 업종별 출하지수와 물가지수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바탕으로 추정
 자료: 국가통계포털(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kosis.kr>

1.2.3. 부가가치

-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 및 부가가치율도 증가 추세임.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010년 14조 9,311억 원에서 2014년에 18조 2,927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20조 6,790억 원으로 증가함.
-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율(생산액대비 부가가치의 비율)은 2012년 34.7%에서 2014년에 36.1%, 2016년 36.8%로 향상되고 있음. 이와 함께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2%에서 2014년에 4.5%, 2016년에는 4.7%로 상승하였음.
- 이상과 같이 식품제조업은 최근 5년간 생산·출하 규모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율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였음. 다만 최근 실질노동생산성은 정체되고 있어 향후의 부가가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표 2-5>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 추이

단위: 10억 원(명목기준), %

구분	2005	2009	2010	2013	2014	2015	2016
제조업	234,696.9	300,036.5	351,770.6	403,656.7	408,510.2	423,651.7	435,937.4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12,307.8	14,482.0	14,931.1	17,234.3	18,292.7	19,810.6	20,679.0
비중(B/A)	5.2	4.8	4.2	4.3	4.5	4.7	4.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년도 식품산업 주요통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 식품제조업의 경영분석

2.1. 식품제조업 경영성과 추이

- 식품기업의 주요 경영지표를 분석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경영지표는 한국은행에서 발간되는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함.
 - 「기업경영분석」에서 조사대상으로 하는 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기준 식료품제조업체 11,369개, 음료제조업 653개 등 총 12,022개임.
- 분야별 경영지표로는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등이 있고,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등이 있으며, 재무안정성 지표로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등이 있음.
- 식품제조업의 성장성은 제조업 전체에 비해 크게 향상됨. 연간 매출액 증가율은 식음료·담배제조업이 2013년 2.1%에서 2015~2016년 5.0%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식품제조업의 성장성 지표는 2012년 이후 제조업이나 전체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식품제조업의 2013~2016년간 유형자산 증가율은 4~6%로 제조업 평균보다 다소 높게 유지됨.
- 식품제조업의 수익성은 2010년대에 향상되는 추세임. 식음료·담배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2014년 6.0% 수준에서 2015~2016년에는 6.5%로 상승함. 최근 식품제조업의 수익성은 제조업 평균(약 5.6%)보다 다소 높게 유지됨.

- 식품제조업의 재무안정성은 제조업 평균보다 뒤이지만 개선되는 추세임. 식음료·담배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11년 100%에서 2016년 91%로 낮아짐. 식품제조업의 재무안정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제조업 평균보다는 다소 뒤지는 상태임.

<표 2-6> 식품제조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단위: %

지표	업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 증가율	전산업	12.2	5.1	2.1	1.3	0.3	2.6
	제조업	13.6	4.2	0.5	-1.6	-3.0	-0.5
	식음료담배	12.0	9.4	2.1	3.7	5.1	4.9
	식료품	12.4	8.5	2.2	3.7	5.3	5.6
	음료	13.8	18.1	2.4	2.9	3.9	0.5
매출액 영업 이익률	전산업	4.5	4.1	4.1	4.0	4.7	5.5
	제조업	5.6	5.1	5.3	4.2	5.1	6.0
	식음료담배	6.0	6.0	6.0	5.9	6.5	6.5
	식료품	4.1	4.0	4.0	4.1	4.5	4.7
	음료	11.7	11.5	12.4	10.0	11.5	10.7
부채비율	전산업	152.7	147.6	141.0	134.5	128.5	121.3
	제조업	109.2	101.0	92.9	89.2	85.5	79.8
	식음료담배	100.3	97.5	94.0	93.7	92.2	90.6
	식료품	114.6	111.3	104.3	106.0	102.7	98.4
	음료	90.7	87.5	94.2	86.8	87.0	84.8

자료: 국가통계포털(기업경영분석) <www.kosis.kr>

2.2. 업종 및 기업규모별 경영성과 비교

- 식료품제조업체의 경영실적이 음료제조업체에 비해 양호함. 성장성은 특히 고기·과채·유지가공업과 기타식품제조업이 높은 반면, 곡물·전분가공·사료제조업과 알콜음료업은 낮게 나타남.
- 업종별 수익성은 기타식품제조업, 유가공업, 알콜음료제조업에서 높은 반면, 고기·과채·유지가공업, 곡물가공·전분·사료제조업에서는 낮음.

- 재무안정성은 고기·과채·유지가공업과 곡물가공·전분·사료제조업에서 낮은 반면, 유가공업, 기타식품제조업, 음료업에서는 양호함.

<표 2-7> 식품제조업 업종별 주요 경영지표 비교

단위: %

업종	2015			2016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 이익률	부채 비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 이익률	부채 비율
식료품	5.3	4.5	102.7	5.6	4.7	98.4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8.7	2.9	166.7	7.4	3.1	161.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2.2	4.5	41.9	3.2	5.5	40.2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사료 및 조제식품	-3.6	3.7	138.7	-1.0	4.3	114.6
기타 식품	7.0	5.9	87.5	7.1	5.9	86.1
음료	3.9	11.5	87.0	0.5	10.7	84.8
알콜음료	1.5	16.4	91.0	-0.6	15.1	83.6
비알콜음료 및 얼음	6.1	7.4	82.6	1.4	7.0	86.3

자료: 국가통계포털(기업경영분석)<www.kosis.kr>

- 중소기업 식품제조업체의 성장성은 높게 유지되나 대기업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으며,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우위에 있음.

<표 2-8> 식품제조업 기업규모별 주요 경영지표 비교

단위: %

업종	규모	2015			2016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 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 율
제조업	종합	-3.0	5.1	85.5	-0.5	6.0	79.8
	대기업	-6.2	5.4	70.3	-2.6	6.7	63.5
	중소기업	4.4	4.4	135.3	4.0	4.6	132.6
식료품	종합	5.3	4.5	102.7	5.6	4.7	98.4
	대기업	2.2	5.3	75.6	3.0	5.4	70.3
	중소기업	9.2	3.5	165.4	8.6	3.9	156.8
음료	종합	3.9	11.5	87.0	0.5	10.7	84.8
	대기업	3.1	12.4	81.3	0.1	11.6	78.7
	중소기업	8.7	6.4	136.0	3.1	5.4	136.2

자료: 국가통계포털(기업경영분석)<www.kosis.kr>

2.3. 식품제조업체의 경영 규모와 R&D 및 광고 활동

- 식품제조업체에 비해 음료제조업의 경영규모가 훨씬 큼. 음료제조업은 식품제조업보다 매출, 유형자산 등의 경영규모가 큰 장치형 산업
 - 업종 간 경영규모의 차이는 대기업에서 크고 중소기업은 적음

<표 2-9> 식품제조업 업종별 경영규모 지표(2016년 업체당 평균)

단위: 백만 원

업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손익	유형자산	총부채	매출액	영업손익	유형자산	총부채	매출액	영업손익	유형자산	총부채
제조업	12,078	724	4,995	6,133	740,321	49,842	309,885	346,995	4,167	191	1,683	2,430
식료품	7,912	371	2,517	3,429	450,107	24,133	136,964	177,332	3,751	147	1,252	1,798
음료	16,707	1,790	12,171	12,559	373,249	43,351	209,583	272,338	2,513	135	1,924	2,217

자료: 국가통계포털(기업경영분석)<www.kosis.kr>

- 식품제조업체의 R&D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는 제조업보다 낮지만 개선되는 추세임. R&D 활동은 식료품제조업이 음료제조업보다 활발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활발한 경향을 나타냄.

<표 2-10> 식품제조업 업종 및 기업규모별 연구개발집약도

단위: %

업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2011	2013	2015	2016	2011	2013	2015	2016	2011	2013	2015	2016
제조업	1.55	2.04	2.05	2.15	1.74	2.37	2.43	2.58	1.09	1.17	1.28	1.33
식료품	0.32	0.32	0.38	0.32	0.28	0.25	0.32	0.19	0.38	0.44	0.46	0.47
음료	0.15	0.12	0.15	0.18	0.08	0.08	0.07	0.12	0.45	0.42	0.61	0.53

자료: 국가통계포털(기업경영분석)<www.kosis.kr>

- 식품제조업의 매출액대비 광고선전비비율은 제조업보다 높지만 하락하는 추세임. 광고 활동은 식표품제조업에 비해 음료제조업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욱 치중하는 경향임.

<표 2-11> 식품제조업 업종 및 기업규모별 광고선전비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2011	2013	2015	2016	2011	2013	2015	2016	2011	2013	2015	2016
제조업	0.51	0.46	0.76	0.82	0.62	0.55	0.95	1.06	0.23	0.22	0.36	0.37
식료품	1.66	1.58	1.81	1.89	2.46	2.29	2.87	3.04	0.45	0.41	0.51	0.60
음료	5.65	5.44	7.21	6.65	6.24	5.93	7.90	7.42	2.27	2.11	3.28	2.08

자료: 국가통계포털(기업경영분석) <www.kosis.kr>

3. 식품산업의 여건 전망

3.1. 잠재성장률과 인구구조 변화

-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음. 한국은행(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에 연 3.7~3.9%에서 2011~2014년에는 3.0~3.4%로 하락하고, 2016~2020년에는 2.8~2.9%로 하락 추세임.
 -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최대 성장률(한국은행, 2017)

<표 2-12> 잠재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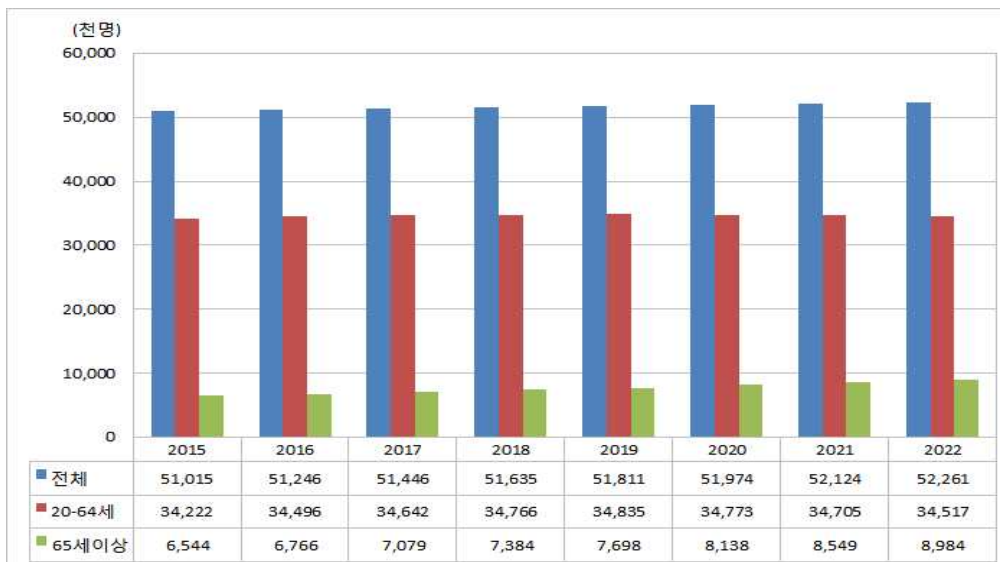
단위: %

기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4년	2015-2018년	2016-2020년
잠재성장률	4.8~5.2	3.7~3.9	3.0~3.4	3.0~3.2	2.8~2.9

자료: 한국은행, 2017. 경제전망보고서.

-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함. 정부는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을 통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목표로 함.
-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수는 2018년 5,164만 명, 2022년에는 5,226만 명으로 연 20만 명 이내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4> 연령대별 인구 수



주 1. 201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6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임.

2. 중위가정의 출생, 사망, 국제이동을 조합한 중위추계결과임.

자료: 국가통계포털(장래인구추계)<kosis.kr>

- 생산가능인구(20~64세)는 2015년 3,422만 명에서 2019년 3,484만 명으로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65세 이상 인구는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2017년에 약 7백만 명으로 총 인구의 13.8%를 차지하며, 가파른 속도로 증가해 2022년에는 17.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3.2. 식품산업의 여건 전망

- 산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향후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칠 이슈와 향후 산업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은 식품제조업 업계 및 전문가 310 인이며 웹기반 온라인조사 방식을 채택하였음.

3.2.1.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칠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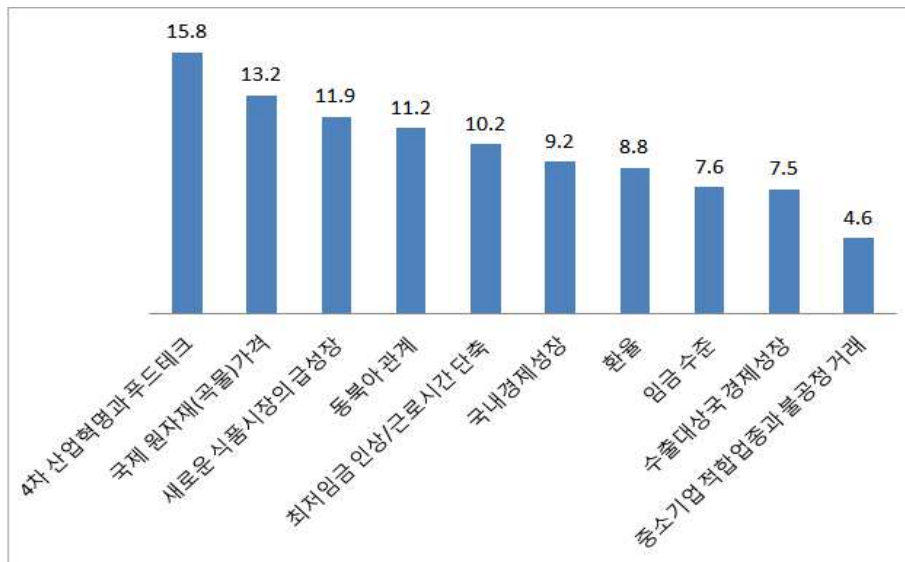
- 향후 5년간 식품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로 가장 많이 꼽힌 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푸드테크’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HMR(가정간편식) 등 새로운 식품시장의 급성장, 중국·북한 등 동북아 관계,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정책 방향 수립 등을 주요 이슈로 꼽음.
- 푸드테크(food technology)란 식품(산업)과 ICT(정보통신기술)이 접목하여 융합된 산업 분야임. 이정희(2017)에 의하면, 지금까지 푸드테크의 적용은 식품 제조, 가공, 포장, 유통보다 판매서비스(마케팅)에 치중되어 있으며, 외식업에서도 주로 음식 판매 및 배달 분야에 집중됨.

3.2.2. 업종별 전망

- 최근 5년 대비 향후 5년 생산액 증감률(%)에 대한 전망을 설문한 결과, 식품산업 전반적으로 생산액이 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간편식 생산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12.4%로 가장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남.
- 음료류, 소스류, 육가공산업, 제과/제빵업 커피류, 주류업의 생산액 증가율은 2.5~3.6% 정도로 식품산업 전반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남. 육가공산업 및 장류 산업은 생산액이 2% 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5> 향후 5년간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칠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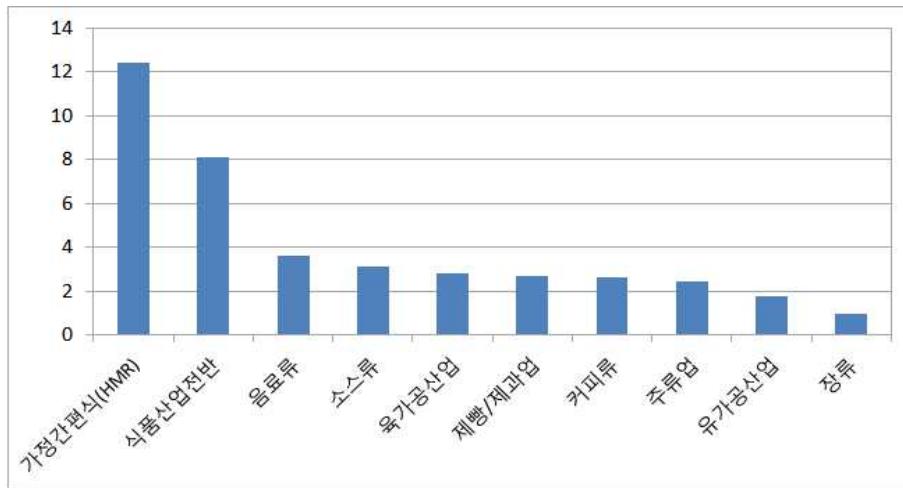
단위: %



주 1) 총 850개의 중복응답 수에서 각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그림 2-6> 최근 5년 대비 향후 5년 생산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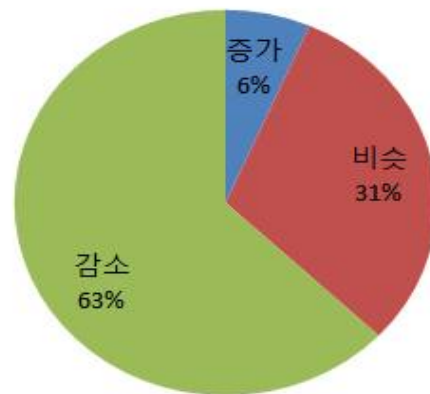
단위: %



3.2.3. 고용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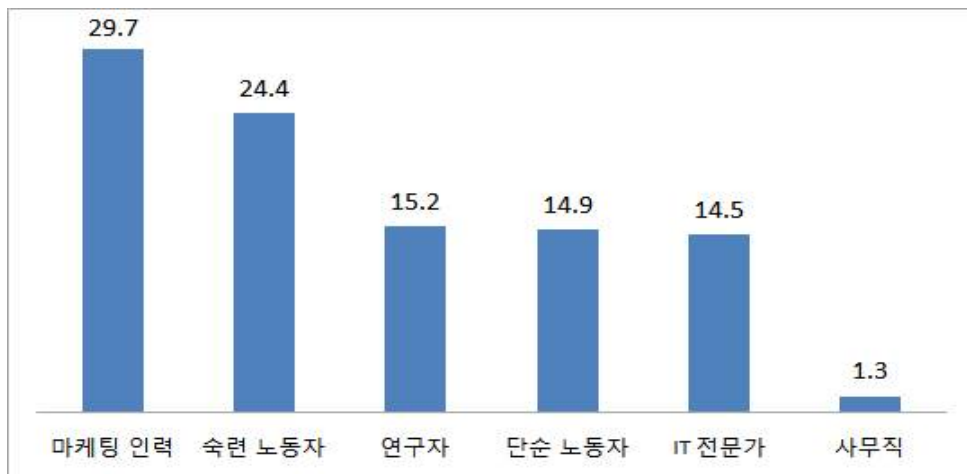
- 최저임금이 앞으로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되고 최대근로시간은 단축이 된다고 했을 때 고용이 올해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응답한 비중이 63%으로 가장 큼.
- 고용이 증가하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7%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는 ①미래를 대비한 인재를 확보·양성하기 위해(35.9%), ②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33.6%), ③정부의 정책 방향에 호응하기 위해(30.5%)로 나타남.
- 향후 5년간 인력 충원이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마케팅 인력 분야(3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숙련 노동자가 24%, 연구자, 단순 노동자, IT 전문가는 약 15%로 나타남.
 - 사무직의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응답한 비중은 1.3%로 매우 저조함.

<그림 2-7>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식품산업의 고용 영향에 대한 예상



<그림 2-8> 향후 5년간 인력 총원이 필요한 분야

단위: %



주: 총 응답자 수는 303명임.

3.2.4. 투자에 대한 전망

- 향후 5년간 식품산업 업종에서 과거 5년에 비해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에 대한 답변으로 과반 수 이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과거와 비슷한 추세를 유지할 것(34%)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상당수를 차지함.
- 향후 5년간 식품산업 업종에서 과거 5년에 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에 대한 답변으로 과거 추세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비중은 49%를 차지하며, 비슷한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42%로 높게 나타남.

<그림 2-9> 향후 5년간 투자 예상



4. 시사점

- 식품산업은 최근 3~5년 간 성장하였음. 식품산업은 최근 사업체수와 고용자수 모두 증가하였음. 식품산업은 그간 출하액과 부가가치도 증가하였음. 그간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R&D 투자도 개선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감소하고 생산인구도 감소함에 따라 식품 수요의 증가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큼. 식품업체의 투자 지표도 감소하고 있어 향후 식품산업의 생산·매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2013년 이후 식품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정체되고 있고 R&D 집약도도 정체된다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큼.
- 이상과 같은 여건 하에서 식품산업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경제 저성장 기조의 예상 하에서 식품산업의 무리한 성장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보다 선진화된 사회경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흥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즉 식품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선진적인 부가가치의 달성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달성하는 것 등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식품산업의 성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확충해야 함. 푸드테크 분야,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제도의 인프라 개선, R&D 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셋째, 식품산업의 중장기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인·촉진할 필요가 있음. 대규모 식품제조업체는 재무구조가 양호하지만 최근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나 연구개발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식품 대기업은 중장기 핵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소홀히 하는 반면, 단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광고선전비 지출이 많음.

- 넷째, 중소기업의 재무구조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와 분야의 발굴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중소 식품업체의 투자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이나 재무 구조는 개선되지 않는데, 이는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재무 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투자재원 조달 방식, 연구개발 추진 방식, 공동사업 추진, 마케팅 및 숙련노동 인력의 양성·조달 등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제 3 장

제2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추진성과와 당면과제

1. 2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제2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비전은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이었으며, 구체적인 지표로는 ① 식품산업 매출액, ② 농식품 수출, ③ 식품분야 고용으로 목표 지표를 설정함.
- 제2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목표는 ①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 ②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 정착, ③ 해외 시장개척 및 전략품목 육성으로 신시장 개척, ④ 소비자 보호 강화로 우리 농식품 신뢰도 제고임.
- 주요 정책과제로 4대 부문 23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의 <그림 3-1>과 같음.

<그림 3-1> 2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기본방향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요약본).

2. 주요과제별 성과와 당면문제

2.1.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2.1.1. 식품 R&D 확대

1) 사업성과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에 중점 투자함.
 - 2016년 소비자 맞춤형 식품 3-D 프린팅기술 및 개발, 당류 저감화 복합 천연 감미소재개발 및 상용화 등
- 식품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식품 R&D 지원의 실용 연구기반을 확대함.
 - 식품 R&D의 기업 주관비율 증가: (10) 39%→(14)62%→(16) 83%
 - 생산현장의 공정 최적화를 위한 현장애로기술, 시제품 생산 등 즉시 제품화가 가능한 과제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2) 당면문제

■ 식품 R&D 투자 미흡

- 국내 식품산업 R&D 투자는 전체 매출 대비 1% 미만으로 제조업 평균 3% 수준에 못 미쳐 전반적으로 R&D 투자가 미흡한 수준임.
 - 식품산업 R&D 투자는 전체 제조업의 약 1% 수준으로 식품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제조업 GDP 대비 12%)에 비해 크게 미흡

<표 3-1>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단위: %

산업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전체	2.38	2.56	2.56	2.83	2.96	3.02
농림수산업	8.47	7.02	7.14	6.85	5.69	8.07
광업	0.62	1.69	3.36	2.17	1.80	1.55
제조업	2.80	2.99	3.09	3.41	3.63	3.74
음식료품 및 담배	0.75	1.12	0.89	0.95	0.87	1.6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18	6.74	6.53	7.32	8.09	7.77
반도체 및 전자제품 제조업	6.08	6.66	6.29	7.13	8.05	7.66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 식품제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도 5.7%에 불과해 제조업 전체 12.1%보다도 낮은 수준임.

<표 3-2> 산업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 원, %

산업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10-15)
기업 전체	328,032	381,833	432,229	465,599	498,545	511,364	55.9
농림수산업	260	362	266	262	287	313	20.4
광업	188	219	351	253	208	234	24.5
제조업	287,373	334,254	379,604	412,540	443,282	458,224	59.5
음식료품 및 담배	3,037	4,034	4,709	4,625	4,890	10,029	230.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58,315	179,747	207,834	234,149	258,506	249,786	57.8
반도체 및 전자제품 제조업	122,129	141,030	164,973	187,255	211,468	204,216	67.2

주: 2015년도 식품분야 연구개발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CJ그룹 연구소 설립에 따른 비용이 반영된데 기인함.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 식품산업 R&D 투자는 대부분 대기업 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며, 중소기업의 경우별도의 연구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R&D 투자재원이 없어 농식품부나 중소기업청의 중소식품기업의 현장애로 해결형 단기과제에 응모하여 전략과제를 수행함.
- 농식품부의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과제 사업비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어서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함.
- 2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의 정부투자(안)이 4,063억 원으로 목표가 수립되었으나 농식품부 351억 원, 농진청 300억 원(추정), 한국식품연구원 578억 원 등으로 식품 R&D분야의 정부 예산은 약 1,229억 원에 불과해 목표에 크게 미달함.

■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연구소 부재

- 2차 추진계획에서 식품 R&D 확대를 2017년까지 선진국 대비 30~65%인 기술수준을 85%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이를 위해서 식품 R&D의 양적인 투자확대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식품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함.
- 국내에는 국책연구소인 한국식품연구원외에 네덜란드의 TNO 연구소와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책연구소가 없음. 식품연구원의 경우도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글로벌 연구소로 성장하기에는 역량이 미흡함.
 - TNO는 초기 100% 정부과제 수탁에서 점차 시장 수요에 맞춰 현재는 약 80% 자체 수입
 - TNO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30% 차지
 - TNO 유럽(5), 미국(2), 일본(2), 한국(1) 등 전 세계 14개 지사 운영

■ 식품 R&D 컨트롤 타워 부재

- 농식품부(농기평), 농진청, 식품연구원이 제각각 식품 R&D 연구를 기획하고,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식품분야 R&D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함.
 - 식품연구원과 농진청의 전통식품연구사업(전통주, 장류, 기능성소재 규명 등)의 중복성 논란
- 농식품부(농기평), 농진청, 식품연구원 이 제각각 식품 R&D 연구를 기획하고,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식품분야 R&D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함.
- 최근 농진청, 식품연구원 등이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적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사업방향을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음.

■ 과제 지원 및 평가시스템 미흡

- 정부에서 지정공모과제, 자유응모과제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 규모가 작고, 중소식품기업의 현장애로기술과제도 소액(5천만원 이내)이고, 기간도 3년으로 한정되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됨.
 - 기능성연구사업 사례: 3년 동안 인체시험까지 완료될 수 있는 연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가 있으나-대부분은 인체시험까지 3년 기간내 완료
- 다양한 분야의 과제 평가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자 풀이 구성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실시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2.1.2.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1) 사업성과

■ 투자유치목표 달성

- 매월 중견·관심기업 20개사 이상을 접촉하여 기업 애로 사항을 적극 대처하였고, 투자 잠재기업 발굴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16년 기업투자유치는 국내기업 18, 해외기업 11개사, 총 29개소로 당초 목표인 20개사를 초과 달성하였음.
- 양해각서(MOU)체결 이후 실질적인 성과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분할, 산학연 연계 R&D지원 등의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2016년 MOU 체결기업중 대다수의 기업이 실제 분양체결의 성과를 거둠.
- 사업계획상 다양한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전개를 통해 '16년 기업투자유치 목표인 20개사를 훨씬 능가하는 29개사의 실적을 기록
 - 1:1 기업방문,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유치관 설치, 국제식품박람회 홍보, 사이트 투어 등 다양한 사업 전개

■ 계획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등 추진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실용화 R&D 기술 수요조사,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수립 연구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수출 거점기지화 구축방안 등에 대한 사전조사,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기관간의 각종 간담회를 실시함.
 - '16년 기업의 R&D 수요해결을 위해 사전에 해외선진기술 소개와 공유에 필요한 해외 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18개) 및 기업니즈의 R&D 기술 수요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 정책수요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농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지원센터,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LH공사, 한국 전력 등과 합동회의 개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 투자유치 노력 경주

- 투자유치확대를 위해 투자유치 인력 증원, 경영성과평가에 투자유치 분야 배점을 확대하여 성과에 따라 성과금 차등지급 등의 추진방식을 도입함. 투자유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입주대상기업을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함.
 - 대기업 등 선도기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개 등 설명회 등
 - 중소기업 : R&D공동연구개발, 기업지원시설 장비 활용지원 등
 - 창업기업 : 벤처센터 입주 기회 제공(초기비용 및 운영비 절감)
-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고 협력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투자에 관심이 큰 해외기업에 대해 차별적이고 집중적 사업추진 설명 등으로 투자연결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을 하였으며, 자본력이나 인력 등이 부족한 식품벤처(창업)기업 등을 차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식품벤처 창업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함.

2) 당면문제

- 국내외 식품기업의 투자유치확대를 위한 계획이 나름대로 적절히 수립되었고, 적절한 정책수단도 동원되었으며, 차별화된 전략이 추진되었으나 국내외 영향력 있는 식품기업의 투자유치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홍보를 강화하여 투자유치를 제고시키고자 전북도 및 익산시와 자율협업과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평가할 만한 입증자료는 불충분함. 또한 전북혁신도시 입주예정인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그리고 지역의 국립 및 사립대학과의 R&D 협력 관련 등의 협이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기업의 제반입주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어야 함.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시스템 뿐만 아니라 주택, 자녀 교육 등의 생활여건도 고려되어야 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투자유치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여 정책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즉, 해외 글로벌기업 및 국내 선도식품기업의 유치 해외기업 11개사는 투자신고를 완료한 업체 기준으로 입주체결업체는 2개 업체에 불과(17.3)하고, 국내 기업 18개사 중 대기업은 1개소에 불과해 질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가 미흡함.
 - 식품벤처센터 창업기업 예비입주 대상업체 20개소

2.1.3. 식품인력 교육

1) 사업성과

■ 전문인력 양성교육

- 식품외식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코리아푸드잡, kfoodjob.kr)을 이용한 6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1,624명의 교육생에 대한 신직업·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함.
 - 이 밖에도 지역 강소식품기업 26개 업체에 558명이 참여하는 기업 연수 및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취업역량강화

- 강소식품기업 연수 프로그램, 해외진출기업 연수 등 청년의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당 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함.
 - 국내외 인턴 53명과 일자리 페어에 25개 기업 721명이 참여

■ 농식품미래기획단(YAFF) 운영

- 농식품 산업 청년취업·일자리 창출·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6년 기준, 전국 197개 대학, 2,856명(국내 2,030명, 해외 82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 식품제조·가공·외식·유통·수출·식자재·급식업체 임직원 및 농어민, 농어민 단체 대상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함
 - 장기과정, 중기과정, 단기과정, 사이버 교육 및 외부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국내 식품산업 인력교육기관의 Control Tower 기능과 역할을 수행

2) 당면문제

■ 생산직 인력 부족

- 식품산업 종사자는 기타 제조업에 비해 상용종사자 비중이 낮고 일용직이 높은 특징이 있음. 더욱이 생산직 일자리와 식품기계 조작인력 등 식품의 생산과 관계된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편임.

■ 정규교육기관과의 연계 미흡

- 식품산업은 정규교과 과정(식품공학, 식품가공학, 식품영양학, 식품조리학, 외식경영학, 외식조리학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 그러나 정규교과 과정을 마친 청년 인력들의 식품산업분야 취업은 낮은 수준임.

■ 4차산업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체계부족

- IoT, 3D 프린팅 등 식품산업의 혁신 제조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역량강화 및 연구개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관련 인력양성 체계가 구축되지 못함.

■ 각 부처 간 일자리 창출 및 인력·교육 프로그램 연계 미흡

- 식품산업의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외에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각 부처별로 사업이 존재함. 각 부처별 사업과 연계가 미흡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이 부족한 상황임.

2.1.4. 통계·정보관리 강화

1) 사업성과

■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

-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 운영으로 분산된 국내외 식품통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2013년부터 목표 접속자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함. 이를 통해 식품산업 통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표 3-3>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 접속자수 누계

단위: 천 명

구분	2013	2014	2015
목표	49	123	182
실적	111	169	203
달성률	226.5%	137.4%	111.5%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6. 성과보고서.

- The 외식(이상 atfis.or.kr),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net) 등 분야별로 특화된 개별 사이트 운영은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필요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는데 용이하다는 평가임.

■ 통계의 신뢰성 향상

-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가 2016년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진단 평가 결

과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승인번호 제 114047호) 외에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까지 2016년 국가승인 통계로 인정됨(승인번호 제114053호).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운영

-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에 의거하여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통계·정보의 생산을 촉진하도록 함.

-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업간 연계 정보분석
-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분석
-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및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실시
- 식품산업 포럼 운영 및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추진

■ 참여형 프로그램 도입

- ‘활용사례 모집’과 ‘대학생 우수논문 경진대회’등 이용자 참여프로그램은 식품통계·정보의 홍보와 결과 확산 그리고 분석을 통한 사회적 자산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당면문제

■ 통계 수치의 대표성 문제

- 표본조사를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통계들 중, 총량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유의하여야 함. 더욱이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있다면 두 통계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의 통계는 신뢰도가 저하되어 이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만일, 비교가능한 통계와 결과가 다르다면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예컨대, 통계청의 양곡소비량조사는 2015년 사업체 부문에서 제품원료로

사용된 쌀소비량을 575,460톤으로 발표하였으나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는 508,240톤으로 발표하여 67,220톤의 차이가 발생함.

- “양곡소비량조사”와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모두 국가승인통계이며 각각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체 2,900여개 사업체와 3,500여개 사업체를 표본조사하여 모수를 추정
- 특히,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는 농업과 식품산업관의 연계, 식품산업의 원료사용 실태, 유통구조 등 활용도가 높은 통계이므로 정확도 제고 차원에서 전수조사 또는 보고통계로의 역할부여 등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표 3-4> 식품산업의 쌀소비량 총량추정 통계치 비교

단위: 톤

구분	2013	2014	2015
양곡소비량조사 (사업체부문)(A)	526,140	534,999	575,460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B)	481,063	447,110	508,240
차이(A-B)	45,077	87,889	67,220

자료 1. 국가통계포털(양곡소비량조사)<kosis.kr>
2. 농림축산식품부(2016).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 통계자료의 관리체계 비연속성

- 담당인력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통계전담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되다보니, 관련 통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통계의 과거 자료가 유지되지 않는 일이 발생함.

■ 통계 원시자료 공개 미흡

- 정부 3.0시대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함을 원칙으로 함. 이로 인해 많은 행정자료까지 공공정보로서 일반 대중에게 자유롭게 공개가 되고 있음에도 조사통계의 원시자료의 이용이 제한적임.

2.1.5. 민간투자 유도(농식품 모태펀드)

1) 사업성과

- 2010년 250억원에 불과했던 농식품모태펀드를 2017년까지 최대 4,000억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함.
- 민·관 합작투자(Joint Venture) 형태의 새로운 투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식품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
 - ('10) 1개 투자조합 250억(정부출자 40%) → ('11) 2개, 360억 이상→ ('17까지) 19개, 최대 총 4,025억원 목표(정부출자 총 1,610억)
- 2011~2017년 9월까지 식품산업분야 모태펀드투자건수는 116건, 업체수 97개, 투자금액 1,543.4억 원이며, 식품제조기기, 유통물류, 포장재 등 식품연관산업분야의 투자건수 20건, 18개소, 248.3억 원에 달함.
- 2017년 8월 현재 모태펀드 5,317억원과 민간자금 4,108억원으로 9,425억원 규모, 57개의 투자조합이 결성되었고(농식품 49개, 8,105억 / 수산 8개, 1,320억), 결성액 중 5,132억원(380건, 287개 업체)이 투자 집행 되었음.

<표 3-5> 식품산업분야 모태펀드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

연도	투자건수	업체수	투자금액(억원)
2011	1	1	9.4
2012	9	8	159
2013	16	13	222.5
2014	28	21	404
2015	19	17	193.5
2016	21	19	284
2017.9말	22	18	271
합계	116	97	1543.4

자료: 농업정책금융보험원 내부자료

<표 3-6> 식품관련산업분야 모태펀드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

연도	투자건수	업체수	투자금액(억원)
2011	1	1	5
2012	6	4	123.3
2013	3	3	45
2014	1	1	10
2015	4	4	33
2016	4	4	22
2017.9말	1	1	10
합계	20	18	248.3

자료: 농업정책금융보험원 내부자료

2) 당면문제

- 식품산업분야의 농식품펀드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식품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

2.2.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강화

2.2.1. 지역전략식품산업

1) 사업성과

- 지역의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학·연·관 사업단의 역량을 극대화 시켜 농가소득을 안정화 시키는데 기여함.
 - 농식품경영체 육성을 통한 자립화로 영업이익률 상승 및 농가 소득 증대
 - 대부분 사업단은 상품의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기능성약선두유사업단, 소이푸드사업단은 체험 및 관광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연계를 추진 중임.

- 지역 농업경영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전략식품산업 지원 종료 후에도 사업단을 통해 상품을 직접 생산·유통·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농업경영체의 수익을 보장함.
 - 사업단 워크숍을 통한 사업단 정보 교류 및 컨설팅 지원
- 사업단의 평균 영업 이익률은 0.3%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목표치인 2.9%와는 차이가 있으나 2015년도 영업이익률이 -3.29%에 비해 3.6%p 상승한 수치임.
 - 비빔밥세계화육성사업단, 약선가공식품명품화사업단, 명계전략식품사업단이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 하였지만, 이들 3개 사업단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약 3% 영업 이익률 달성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 대학교 등의 전문가들이 매년 사업단 구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비 집행의 적합성,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조사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함.
 -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 연합회 마련 및 운행 중

2) 당면문제

- 첫째, 짧은 사업기간에 따른 사업단의 자립구조 실현에 한계가 있음. 제품 개발과 가공시설의 설립, 상품 홍보 등 사업단이 정상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기간인 5년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 초기 기반 시설 설립 비용과 시설 관리비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단 운영을 주저하고 있음.
- 둘째,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이 부족함.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기존 상품과 차별성이 높지 않아 제품수요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제품은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뚜렷한 목표시장을 정하지 않아 제품 판매가 부진하여 수익 실현이 쉽지 않음.

- 셋째, 사업단장의 역량이 미흡함. 사업단장은 경영마인드를 지닌 전문가를 채용해야하나 많은 사업단이 공무원이나 관직에서 퇴직한 인사를 채용해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2.2. 농공상 융합형기업 육성

1) 사업성과

- 중소기업청과의 협업 체계 운영으로 농공상융합형 중소 우수기업을 공동 선발하고 육성하여 당초 2017년 목표치 300개소를 초과 달성함.
 - 농공상융합협 중소기업 수: ('14년) 300개사 → ('16) 356
 - 유형별 지정: 전략적 제휴형 208개, 농어업인경영형 146개, 공동출자형 2개
- 농공상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전용판매관(농식품 찬들마루) 2개점을 개장하고 농공상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용산역 확장이전, 모란역 개장으로 우수기업 170개 업체, 900품목 입점

2) 당면문제

- 농업-제조·가공공업-유통판매업 관련 기업간 융복합 사례가 제한적이고 단순 지원사업처럼 운용되는 한계가 있음.
 - 자금, 컨설팅, 판로·홍보 지원 등 기업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용판매장 활성화를 통해 판로 확보에 중점
 - 지원 대상에 대한 직접 지원은 최소화하고 전용판매장 개점 및 입점 확대, 박람회 참가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우수업체 유치 노력, 우수 지정업체 대상 재지정 등 지정 관리 개선

- 컨설팅 사업은 공모와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절차가 느리게 진행되고 수행 과정에서 중도포기 및 평가 탈락으로 컨설팅 완료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 지원대상 사정자의 조기 선정, 불용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정 방식의 개선, 컨설팅사(컨설턴트) 풀 시스템 구성 등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편 필요
 - 식품제조·가공회사의 심층 컨설팅 지원분야를 식품기업이 주로 원하는 위생, 안전 등 주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1:1 멘토링 현장방문 컨설팅 일수를 확대
 - 상담회를 확대하여 대형유통채널 등 수요자와의 거래 기회를 성사시킴으로써 기업 활동에 근본적인 도움을 제공

2.2.3.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1) 사업성과

- 사이버거래소 식재료 거래규모는 2017년 목표치(1조원)를 이미 달성됨.
 - 사이버거래 규모: ('10) 1,000억 원 → ('15) 2조 4,444 → ('16) 2조 9,958
- 사이버거래소의 거래규모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 학교급식용 사이버거래 규모: ('10) 36억 원 → ('15) 2조 489억 → ('16) 2조 6,446억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국내산 식재료 구매도 증가함.
 - 지구 지정수(누적): ('12년) 5개 → ('14) 13 → ('15) 19
 - 지구내 음식점의 매출액('15년 기준)은 전년대비 4.5% 증가하고 국내산 식재료 구매액은 8.2% 증가

- 식재료 산지폐어 개최, 외식식자재 사이버몰 운영 등을 통해 식자재 거래를 촉진하였음.

- 산지폐어 거래: ('13) 2회 25억 원 → ('14) 8회 105억 → ('16) 9회 147억
- 식자재 사이버몰: ('16) 119억 원, 회원 수(구매 7,041, 소매 178)

2) 당면문제

- 사이버거래소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학교급식을 제외한 거래형태는 정체되고 있음.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과 금리 하락으로 한도거래의 장점 감소와 포스몰(POS-Mall)은 사업기반 조성 단계로 급격한 확대 어려움
- ICT 기반 신규 거래·사업 모델 개발 등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노력 필요

-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 사업이 '외식산업 육성'에 있고 타 분야나 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함.

- 지역농산물 소비 등 농업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
- 우수지구 육성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지구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 필요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구 단위의 발전가능성과 자발적 참여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의 유연성 확보 필요

2.2.4. 외식산업 육성

1) 사업성과

- 외식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우수 외식업지구의 만족도 조사결과, 종합 만족도는 77.4점으로 전년 대비 8.3점 상승하였으며, 목표 대비 112%로 초과하여 달성하였음.

-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농산물 직거래 산지페어를 추진하였으며, 외식 식재료 산지페어 직거래 계약액(2016년) 147억원으로 달성율은 초과 달성된 171%이었음.
 - 또한,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관련 필수 구비서류 가운데 ‘업체 고용인력 명부’ 제출을 폐지하는 시행규칙(제11조 2항 제1호)를 개정하였음. 우수 외식업지구 운영상황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외식상품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경영주의 의식 및 태도’로 개정 한바 있음.
- 이 밖에도 외식 식재료 사이버 전문몰 운영 활성화로 식재료의 거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유통비 절감에도 기여하였음. 외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NCS 분류체계(외식경영분야 신설) 정비를 추진하고, 외식관련 통계를 구축 하였음.

<표 3-7> 2015년 외식 및 한식관련 성과지표의 달성도

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도(%)
우수 외식업지구 만족도 조사(%)	68.9	77.4	112
외식 식재료 직거래 계약액(억원)	130	146.5	113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개정	개정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 당면문제

-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식업의 영세성은 여전히 남겨진 과제이며,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임.
- 외식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프랜

차이즈 관련 주무 부처와의 연계성이 다소 허약한 구조로 평가됨.

2.2.5. 1인 기업 창업지원

1) 사업성과

- 전국 69개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88 농가의 신규창업, 특허 55건, 상표 등록 113건의 성과를 거둠.
 - 특허: 생선회 향균소스 및 그 제조방법, 양파꽃김치 제조방법 등
 - 상표: 함양 ‘더함양’, 의령 ‘정선담은 미소’, 강화 ‘농가의 부엌’ 등
 - 시제품 개발 및 상품화 223건
 - 208 건의 창업교육 과정을 통해 총 8,740명 수료

<표 3-8>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현황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 역시
69	9	8	6	8	9	8	10	9	0	2

2) 당면문제

- 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함. 자가 생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소규모 가공사업 요구가 높으나,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 및 자본 지원 수준이 아직은 미흡함.
- 농가의 소규모 가공활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개별 농가단위 창업 시설 지원에 한계를 보임.

2.3. 글로벌 경쟁력 강화

2.3.1. 농식품 수출확대

1) 사업성과

-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써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희망업체를 모집하여 전시상담 부스 제공은 물론, 관련 부대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확대 및 시장개척을 유도함.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은 부스 임차비, 장치비, 기본비품 임차비 등을 100% 지원(대기업의 경우 임차비 30% 자부담)하며, 운송통관비는 신선농산물에 한해 200만원 한도내에서 100% 지원해줌.
 - 국제박람회 참가는 2014년 40회, 2015년 46회, 2016년 56회로 성과목표 대비 100% 달성되었음.

- 한류를 활용한 해외 수요확대 및 국가별 맞춤형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대규모 한국농식품 박람회인 K-Food Fair를 중국·아세안 등에 집중하고,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함.
 - K-Food Fair 개최 계획대로 달성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 7회 개최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11회 개최하여 초과달성하였음.

- 해외 바이어 초청 등 거래알선은 2015년 12회, 2016년 8회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 실적은 2015년 12회, 2016년 18회 실시하였음. 2015년은 성과지표 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2016년은 초과달성하였음.

- 중동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인증획득(품목) 수도 175개소 530품목을 목표로 하였으나, 220개소 699품목으로 목표대비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 GCC 수출실적은 2015년 3.8억달러에서 2016년 4.6억달러로 전년대비 22.0% 증가하였음.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수출에 따른 물류비 부담 해소하였으며, 수출보험·안전성·교육 등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음.
 - 더욱이 수출전문단지 지정 등 생산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도모하였음.
- 수출지원사업의 순조로운 지원으로 인해 당초 단위 사업별로 책정된 사업비를 대부분 준수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이 100%에 도달하였음.

<표 3-9> 수출지원사업 단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A)	결산액(B)	집행률(B/A)
2014	해외시장개척	33,100	33,100	100.0
2015	대중국수출유망품목육성	1,500	1,500	100.0
	수출인프라강화	37,955	37,955	100.0
2016	대중국수출유망품목육성	3,400	3,400	100.0
	수출인프라강화	50,097	50,097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국 청도 내 공동 물류 센터로 건립되어 수출업체들의 물류비 절감과 수출용 농식품의 선도유지에 기여하고 있음.
- 지표별 성과실적 이외에도 대중국 수출 경쟁력강화 특별 추진단을 구성·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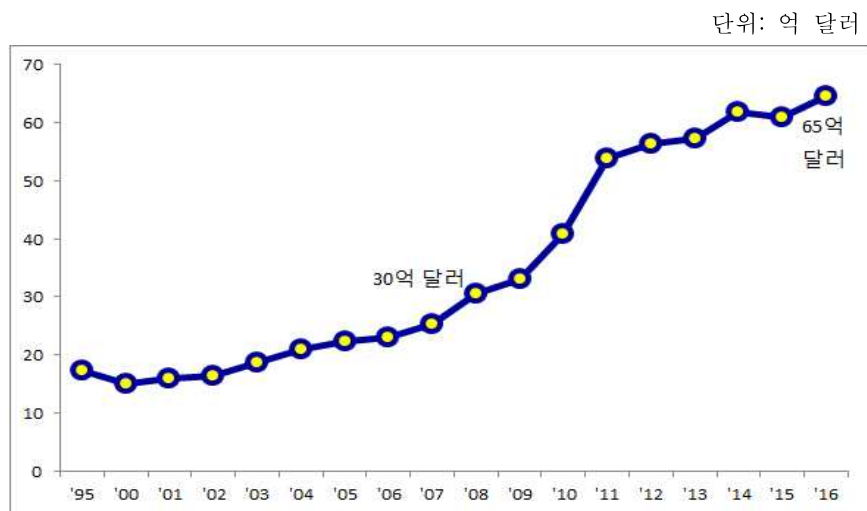
영하여 각 기관별·수출 단계별 매트릭스(목표, 계획, 일정 등)를 작성한 후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음.

- 유관기관 등과의 워크숍·업무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계획 단계부터 정책 수요자·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또한,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TF 운용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신규예산 반영·기존사업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켰음.
- 민관합동 농수산물 수출개척협의회를 통해 부처 협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출업체와 농가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

2) 당면문제

- 농식품 수출은 엔저 여파로 인한 대일본 수출 감소, 최근의 글로벌 경제 침체 등으로 국가 전체 수출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이어가 2016년에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65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당초 목표로 설정하였던 2017년 농식품 수출 200억달러 달성에 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음.

<그림 3-2> 농식품 수출 실적 추이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수출농산물의 생산 규모화를 위해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생산량 대비 수출비중은 평균 30% 수준에 불과하여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함으로써 생산량 대비 50% 이상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그렇지만 실제 수출전문단지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은 45% 정도로 추정되어 목표치의 90% 달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식품 수출기업의 육성 및 규모화 유도를 위해 100만불 이상 농식품 수출업체수를 2016년 700개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662개소로 목표 대비 94.6% 달성하여 목표치를 다소 하회하였음.
- 일부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계획대비 집행 실적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였음. 대표적으로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지원 사업인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이 저조하여 40~60%대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음.
 - 이는 시중금리가 4% 수준 이하로 인하됨에 따라 정책자금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고, 담보 설정에 대한 부담 등이 주요 원인이었음.
- 할랄식품산업육성 사업의 경우 기독교단체와의 면담이 해명자료 배포 등에도 불구하고 할랄식품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였고, 할랄인증 도축장 건립사업(용자)의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저하되었음.

<표 3-10> 수출지원사업 예산 집행 미달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A)	결산액(B)	집행률(B/A)
2015	가공식품수출지원(용자)	195,853	99,618	50.9
	신선농산물수출지원(용자)	353,362	153,571	43.5
2016	가공식품수출지원(용자)	185,783	114,032	61.4
	신선농산물수출지원(용자)	340,286	208,677	61.3
	할랄식품산업육성	9,500	3,793	39.3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현지 수입 바이어·유통업체 등 수요자를 통한 국내 농식품 수출확대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수입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정보교류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동일 수출시장에서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영세한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이 여전히 발생함으로써 수출단가 하락과 거래교섭력 저하 문제가 나타났음.
-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이 낮은 가공식품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공식품 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외부 지적이 있었음.
 - 가공식품 수출 비중: 2000년 52.1% → 2010년 77.9% → 2016년 82.8%

2.3.2. 한식 세계화 및 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1) 사업성과

- 한식의 우수성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한식의 우수성 규명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음식문화에 대한 콘텐츠 DB화 등을 시행하였음.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은 물론, 해외호텔 한식메뉴 보급,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 해외 한식당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였음.
 -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2013년 15개 도시 1,600여명, 2014년 16개 도시 2,684명, 2015년 14개 도시 2,072명, 2016년 15개 도시 1,915명
- 한류 열풍과 한식 수용도가 높은 미국, 중국, 동남아 등에 집중하여 한식 홍보를 추진하였음. 국내 한식박람회나 밀라노 엑스포, 스페인 마드리드퓨전 등 주요 국내외 음식행사 등과 연계한 한식 홍보를 강화하였음.
 - 식재료와 문화·관광자원이 연계한 음식관광 코스 개최, 전통식품명인 연계 음식관광코스 개발·보급 등을 시행한바 있음.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비는 당초 책정된 예산을 대부분 준수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이 거의 100%에 도달함.

<표 3-11> 한식진흥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A)	결산액(B)	집행률(B/A)
2014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50	150	100.0
2015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2,775	12,775	100.0
2016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0,732	10,609	98.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이와 같은 한식 세계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한식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증가하였으며, 해외 한식당도 확대되는 성과를 거둠.
 - 한식 인지도(뉴욕시): 2011년 24.2% → 2016년 64.3%
 - 해외 한식당: 2009년 9,253매장 → 2014년 11,905매장 → 2016년 31,000매장(추정)
 - 한식당 해외진출: 2012년 234점포 → 2015년 480점포 → 2016년 732점포

2) 당면문제

- 한식 전문 교육과정이 부족하며, 대상자 범위로 제한적임. 한식 교육수요가 적어 단독교육이 곤란한 도시(또는 국가)가 있으며, 한류 열풍이 강한 지역에서의 한식강좌 개설이 미흡한 상황임.
 - 해외 한식당에 대한 국내산 식재료 공급체계가 체계적 구축되지 않아 실제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정부의 한식 세계화 등의 정책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한식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한식 관련 예산은 계속 감소하여 홍보 기능 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한식 세계화 등에 관련된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추진보다는 기존의 정책과 관련 기관에서 추진되던 사업이 거듭 제시되는 경우가 많음.

2.3.3. 전통발효식품 육성

1) 사업성과

- 전통발효식품육성정책 추진으로 전통발효식품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함.
 - 전통발효식품 생산액: ('11년) 4.4조원 → ('12) 4.6 → ('13) 4.9 → ('14) 5.3
- 전통식품에 대한 잠재 수요층 발굴을 통한 전통식품산업의 성장 모멘텀 확보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전통식품 기업의 공동 판로망을 개척함.
 - 체험·관광을 연계한 전통식품 홍보를 통한 국내외 소비기반 확대
 - 농협하나로 마트내 명인관 육성,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공영홈쇼핑 입점 등 협업을 통한 판매망 구축 추진
 - 식품명인 종합체험 및 홍보관인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설치 및 운영
- 전통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증대시킴.
 - 내·외국인 대상으로 전통주에 대한 전시 및 체험, 판매 등을 제공하여 전통주를 체계적으로 상시 홍보할 수 있는 전통주 갤러리를 운영함.
 - 외국인론, 여행잡지, 박람회 등의 홍보를 통해 전통주의 관광산업화에 기여함.
 - 2016년 인쇄매체 보도 295건, 방송 25건, 블로그 홍보 719건
- 지역에 소재한 양조장을 관광과 체험이 결합된 명소로 육성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확대함.
 - 찾아가는 양조장: ('14년) 10개소 → ('15) 18 → ('16) 24
 - 방문객이 연간 약 17%씩 증가하며 매출액이 연간 약 8% 증가
- 전통주 품질향상을 위해 기존의 개발 및 특허 등록된 양조용 우수 전통누룩

17종과 효모 10종을 보급하였으며 2종의 신제품을 출시함.

2) 당면문제

■ 소비자 인지도 미흡

-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과 ‘전통주 갤러리’에 대한 홍보는 많이 추진되었으나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음.

■ 영세한 생산자 다수 차지

- 전통식품 생산업체들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지만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낮은 상태임.
 - 장류와 전통주의 경우 10인 미만 종업원을 둔 영세 업체가 80% 차지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10% 수준

2.3.4. 기능성식품 육성

1) 사업성과

- 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으로 18,230억 원으로 '11년에 비하여 33.2% 증가함. 수출액은 '15년 904억 원으로 '11년 대비 62.6% 증가함.

<표 3-12>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생산액	13,682	14,091	14,820	16,310	18,230
수출액	556	584	754	670	90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6)

-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특허 및 개별 인정형 원료를 등록하

였으며 제품 개발 및 생산으로 지원 기업의 매출과 수출이 증대함.

- ㈜홀리스틱바이오에서 인삼열매를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생산하여 미국으로 첫 수출함.

- 건기식 개발 3건, 특허출원 및 등록 총 10건

-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은 2016년 기준 총 580 건으로 '11년 기준 대비 49.5% 증가함.

<표 3-13>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단위: 건수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당해연도 건수	9	23	29	36	84	97	68	42	38	37	66	31	20
누적 건수	9	32	61	97	181	268	346	388	426	463	529	560	5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 당면문제

■ 기능성 식품 산업 전문성 확보 미흡

- 농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전문 입증 자료 부족과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전수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움.

■ 소비자들의 기능성 표시제도 이해도가 낮음

- 기능성 농식품 표시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가 낮으며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낮음.
 - 소비자 조사 결과, 영양 및 기능성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중이 37.9%에 달함(박성진 외, 2016)

2.3.5. 연관산업 활성화

1) 사업성과

- 2016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패키징센터를 설립하여 식품포장기술 개발과 식품포장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2) 당면문제

-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연관산업의 기술 수요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함.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식품연구원 등 연관산업을 모니터링하고 기술표준화하는 기관이 정해져있지 않아 정책의 진전이 없음.

2.4.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

2.4.1. 녹색 식생활 교육

1) 사업성과

- 바른 식생활 확립을 위해서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생활 교육 여건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식생활 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 추진체계 확산함.
 - 우수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15) 167개소 → ('16) 194

- 식생활교육기관: ('15) 55개소 → ('16) 57
 - 민간추진단체: ('15) 77개 → ('16) 84
- 식생활 교육기관과 식생활 체험공간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목표치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꾸준히 증가함. 또한,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통해 대상이 대학생, 농촌지역 고령자, 군대 조리사로 확대되고 가정, 학교,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됨.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면서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추진내용을 포함시킴.

2) 당면문제

- 지속적인 사업기반 마련 미흡
- 식생활 교육 대상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었으나 시범사업에 그치고 지속적인 사업 기반이 마련되지 않음.
 - '식생활교육전문센터'의 설립은 계획 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

2.4.2. 인증제도 개편

1) 사업성과

- 포장 농산물에 권장품질을 표시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국회에 제출됨(2014년 12월).
-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성과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한 점,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확대한 점,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도입한 점, 2년간 2회 이상 거짓 표시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점임.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2012년 16개 품목에서 2016년 20개로 확대됨.
-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2순위까지만 표기하던 수준에서 3순위까지 표기하는 것으로 확대됨.

2) 당면문제

■ 포장 농산물 기본정보 표시도입 추진 미흡

- ‘포장 농산물 기본정보 표시도입’ 사업의 경우 2014년 12월 국회과행 이후 법령 정비 추진이 미흡하였음. 이에 따라 포장 농산물 권장품질에 대한 표시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미흡한 점이자 당면과제로 판단됨.

■ 인증제 통합이 무리

- ‘농식품 인증제 개선’ 사업의 경우 첫째, 11종에서 6종으로 통합하려던 시도가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이며, 향후 6종으로 통합하려는 최초 계획을 고수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통합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통합할 수 있는 인증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농식품표준(KAS)제도의 도입은 유기인증을 제외한 모든 인증제도를 통합하는 것인데, KAS 한 가지 제도를 가지고 안전 특성, 품질 특성, 지리적 특성, 제조인 특성까지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3.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1) 사업성과

-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요구 증가로 인해 GAP 도입이 확대되고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농산물 GAP 인증농가비율은 6.8%에 달함.
 - 농가: (‘14) 46.3천명 → (‘15) 53.6 → (‘16) 73.9 (전체대비 6.8%)
 - 면적: (‘14) 58.7천ha → (‘15) 65.4 → (‘16) 87.4 (전체대비 5.2%)

- GAP 민관 추진협의체, GAP 유통 상생협의회 구축 및 운영
-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HACCP 제도를 98년에 도입한 이후, 농장부터 판매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도입함.
 - '00년 도축장, '07년 집유장에 대한 단계적 의무 적용 실시
 - 축산물 HACCP 적용 농장 중 운용이 미흡하여 조사평가 심사결과 부적합과 현장보완 판정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기술 지도
-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도축장 및 집유장 등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함.
 -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HACCP 시설을 평가
- GAP 관련 정책사업 관심이 증가하여 GAP 시설 보완사업 및 컨설팅 수요가 확대하고 GAP 인증농가 수가 '16년 68,345 농가로 전년도(53,583 농가)에 비해 27.5% 증가함.
 -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목표치인 20%를 훨씬 웃도는 수치
 -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체 마련,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농업인 대상 GAP 교육확대 등 농업인의 관심도 증대
- GAP 농산물의 생산여건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유통업체의 품질기준 상향조정 및 GAP 농산물 취급확대로 이어지고 급식업체에서도 GAP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상품을 개발함.
 - GAP 컨설팅: '15년) 140단체, 4,500호 → '16년) 150단체, 5,500호 (전년 대비 22% 상승)
 - 대형 유통업체(롯데마트, 홈플러스) 납품 농가의 농산물 품질 기준을 GAP 수준으로 상향
 - 급식업체 아워홈: '16년) 10억 (5개 품목) → '19년) 200억 (40개 품목)

상향 조정

- 농업인의 GAP 수용성에 대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GAP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자 인지도 현장조사를 실시함.
 - 생산자에게 GAP 미인증 이유와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 등 설문 조사 실시
 - 소비자들의 GAP 제도 인지도, 인지 경로, 신뢰도 등 조사
- 정책수요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GAP 제도 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 검토 회의(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식품안전연구원, GAP 협회 사무국장,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등), GAP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방안 회의(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농협 등 10명), 2016년 GAP 활성화 방안 회의(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농협,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교수 및 농촌경제연구원 등 15명) 개최
- HACCP 단속 현장의 조사 공무원의 의견 수렴 결과와 현장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농축산물 안전성 개선방안을 모색·마련함.
 - 농축산물 관리대상 유해물질 확대에 따른 검사 시스템 및 조사 시스템 개편,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강화된 기준 확립과 부실한 민간 검사 기관의 퇴출 방안 마련
- 생산자와 소비자의 GAP, HACCP, 이력추적제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함.
 - GAP, HACCP, 이력추적제에 대한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가 향상 되었으며 안전한 농식품의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
 -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 및 소비자 관심 제고 및 제도 인지도 확산 노력

- GAP, HACCP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생산자·소비자 교육

2) 당면문제

■ 소비자의 인지도가 미미

- GAP, HACCP 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여 이들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른 인증제도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실정임.
- 낮은 인지도는 인증제도의 확대에 걸림돌

■ 축산 농장의 항생제 내성균 확산

- 축산 농장의 HACCP 인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증을 반납하는 업체도 늘어가고 있음. 또한, 일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축산식품의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2.4.4. 유통단계 안전관리 구축

1) 사업성과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는 농식품 안전 관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데, GAP 정책사업과 병행하여 진행 중임.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이력추적관리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이력관리 농산물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생산자: ('13) 103.2천명 → ('14) 98.8 → ('15) 61.9 → ('16) 31.2
- 유통자: ('13) 980건 → ('14) 859 → ('15) 476 → ('16) 322
- 판매자: ('13) 710건 → ('14) 705 → ('15) 125 → ('16) 111

2) 당면문제

■ 이력추적관리 등록 감소

- 이력추적관리등록 내역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소비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낮고 가격 차별화가 없어 GAP 인증을 받거나 유통업체 등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 등록이 대부분을 차지함.
 - 생산자: ('13) 103.2천명 → ('14) 98.8 → ('15) 61.9 → ('16) 31.2
 - 유통자: ('13) 980건 → ('14) 859 → ('15) 476 → ('16) 322
 - 판매자: ('13) 710건 → ('14) 705 → ('15) 125 → ('16) 111

2.5. 주요분야별 당면과제

2.5.1. 인프라 확충

1) 식품 R&D 확대

■ 국가식품 R&D 예산 증액

- 농식품부의 식품 R&D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시켜 식품분야 핵심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기업에 새로운 기술이전을 촉진해야 함.
 - 중소식품기업의 현장애로기술관련 R&D 예산 우선 증액

■ 국책식품연구소의 시장 지향적 모델 도입

- 한국식품연구원의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식품기술 연구를 강화함.
 -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업지원형 연구개발 예산 지원 확대
 - NIZO, TNO 등 글로벌 식품연구소와 업무협약 등으로 공동 프로젝트 추진, 해외 지사 설립을 통해 식품 연구의 글로벌화 추진

■ 식품분야 R&D의 통합적 조정·공동기획체계 강화

- 농기평, 농진청, 식품연구원의 식품분야 과제의 기획단계부터 조정심의의 의무화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과제추진계획을 심의 조정함
 - 식품분야 R&D 전략수립, 미래기술예측, 중기계획, 기술 및 시장조사 등 공유
 - 장기적으로 식품R&D 분야 기획, 평가,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식품연구원과 농진청의 식품 R&D 역할 분담 필요함.
 - 식품연구원: 식품가공기술 응용분야
 - 농진청: 농산물소재 기능성연구 등 원천·핵심기술분야
 - 전통식품분야의 경우 품목이나 기능적으로 역할 구분 수행

■ 민간부문 R&D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

- 민간 R&D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있는 R&D 정책을 수행함.
- 식품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비 증액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R&D 지원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글로벌 식품 복합단지’로 육성
 - Targeting(규모, 업종, 국내외 권역 등)별 투자유치 추진

■ 국가 식품 R&D 과제 지원 방식 및 평가제도 개선

- 농기평에서 주관하는 지정공모과제, 자유응모과제의 사업비규모나 수행기간은 과제의 형식과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예: 현장애로기술과제 연구비 1억원 이상, 기능성규명과제의 연구기간 3년 이상 등

- 객관적인 과제 평가를 위해서 해당과제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전문 평가위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뿐 만 아니라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킹 강화도 필요하므로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과의 협력방안 모색이 중요한 선결과제임. 따라서 혁신도시 이전 관련공공기관인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과 식품분야의 핵심원천기술, 응용산업화 기술, 소재기능성 규명 등 해당분야별로 기관간 구체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함.
- 지속적인 식품기업 유치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함. 유치가 필요한 국내외 유망식품기업을 목표로 정하여 맞춤형으로 집중적인 투자유치 홍보가 필요함.
- 기업투자 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규모별, 업종별, 국내외권역별로 Targeting하여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식품인력의 체계적 양성

- 범부처적 협력관계 수립 및 차별화된 예비 식품인력 교육 프로그램 구축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의 관련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함. 이들 부처가 전체적으로 약 40조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능을 이에 포함하여야 함.
 - 정규교육기관의 현장 친화적 교과과정을 강화하고 교육부, 고용노동부와는 차별화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
 - 산업계와 정규교육기관의 지속적인 매칭 서비스 등
- 전문 교육기관 육성 및 자격증 도입

- 역량강화와 취업지원의 기본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자격증 제도 도입이 필요함.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관리하도록 하며, 산업계가 해당 교육기관과 연계성을 갖추도록 해야 함.
 - 식품산업 일자리 분야 민간주체(식품관련 협회 등)를 육성
- 클러스터, 지역산업단지(특화농공단지) 등과 연계된 취업·인력양성 체계 구축
- 클러스터, 지역산업단지 등의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식품인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현재 농공단지 등의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업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인력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임.
 - 예컨대, 구례 자연드림 파크는 아이쿱 생협이 농동단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농산물 활용도 제고와 500여 명의 현지 인력 고용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력양성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

4) 통계·정보관리 강화

- 정부 3.0 시대에 맞춘 통계자료 공개
- 현재는 ① 관리자에게 전화문의 → ② 신청서 작성 및 공문서 접수 → ③ 담당기관 승인절차 → ④ 발송 으로 진행됨.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복지패널조사, 재정패널조사, 노동패널조사, 식품소비행태조사 등 대부분의 조사통계는 현재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로운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나 간단 정보 입력 후 다운로드가 가능한 방식으로 서비스 하고 있어, 식품산업통계·정보의 조사통계 원시자료 공개를 보다 간편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통계의 수요조사에서 심층분석까지 일관된 통계정보서비스 구축
- 수요자 맞춤형 통계정보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 수요자가 누구인지, 수요자별 통계수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기본적인 통계수요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도출되는 결과는 실사를 담당하는 조

사업체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복잡한 시장상황을 일반화 시켜 설명할 만한 심층분석이 부족하고 정책적 시사점 또한 미미한 실정임.

■ 정책 환류를 위한 수혜자 실적보고 체계 확립

- 통계 등 증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은 세계적인 추세임. 농식품부의 자체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정책계획 수립 시 현장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사례분석을 통한 사전조사 항목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매 사업의 추진 시, 별도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특정사업의 효과 분석 등으로 지출되는 연구용역을 합하면 이런 통계 등 증거에 기반한 정책의 추진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임.
-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보고통계로 식품·의약품 생산실적 통계를 수집·발표함으로써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통계를 구축
- 식품·의약품 생산실적 보고와 마찬가지로 식품산업 정책 수혜자로부터 실적보고 체계를 수집한다면 정책 추진의 참고자료를 보유할 수 있음은 물론, 정책의 평가 등 증거에 기반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함.
 -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및 사업운영지침 작성 등 보고체계 마련 필요

5) 식품분야의 모태펀드 연계투자 확대

- 농정원 6차산업지원센터의 협업사례에서 보듯이 aT가 투자가능성이 있는 식품산업체를 발굴하여 모태펀드의 투자 연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정원, 6차지원센터 등과 협업하여 농식품경영체 발굴

- 식품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모태펀드 활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외식업체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함.

2.5.2. 농업과 연계 강화

1) 지역전략식품육성

■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 2015년부터 중앙정부의 사업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사업 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 및 집행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사업단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단 운영자,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의 참여 워크숍을 통한 정보 교류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단에 대한 CEO 선정, 제품개발, 홍보 등에 대해 농식품부의 점검 및 관리, 감독 필요

■ 사업단 자립화 전략 수립

- 사업단이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종료 후에도 컨설팅 및 사업단 관리 등 종합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함.
- 신규 사업단의 경우, 예비사업단으로 지정하여 사업 집행을 사전에 실시하며 사업 추진 방향 및 자립화 전략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이 필요함.

■ 특화농공단지과 융합한 지역식품클러스터정책 추진

- 장기적으로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 산업을 육성하고자 도입한 특화농공단지와 지역전략 식품산업 정책을 융합하여 지역식

품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토록 할 필요성이 있음.

- 2016년 기준 전국에 총 27개의 특화농공단지 지정되었으며 이 중 식품 가공 단지가 24개에 달함
- 현재도 특화농공단지 사업은 진행 중이며 대부분이 식품가공단지로 조성되어 지역전략 식품산업 정책과 연계 가능

2) 외식산업 육성

■ 외식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와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 외식용 원료 농산물의 계약 거래를 추진하여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 도모는 물론,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외식 식재료 공동 구매를 추진하고, 권역별 식재료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외식업체 협업화와 경영안정을 꾀하도록 함.

■ 외식산업의 공정성장 지원

- 타 부처와의 협조 관계를 통해 외식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근절되어 공정한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향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1인기업 창업지원

■ 기반 시설 확충 및 파일럿 플랜트 확대

- 지방 농촌진흥기관에 파일럿 플랜트 시설을 확충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하도록 지원이 필요함.
- 소량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별도의 가공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중앙 키친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 보급을 확대함.
-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지원기능이 제한적이며, 농업인 가공품의 판로가 제약

됨. 안전성 인증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와 창업보육, 지역단위 상품화와 판매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애로기술의 개발·보급 방안이 요구됨.

4) 국산원료 사용확대

■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가공적성 품종 개발

- 국내산 원료농산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이 부족함. 식품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의 조성 및 가공적성 품종 개발 및 이용 확대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국내산 원료농산물 조달가격이 높고 업체가 영세하여 국산 원료농산물 사용이 저조함. 5인 미만 식품업체 수가 식품제조업체의 81.3%를 차지하고 외식업체의 87.4%를 차지

2.5.3.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농식품 수출확대

■ 과도한 수출액 목표 설정 지양

-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악화로 국가 전체의 수출 감소세 전환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농식품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인해 목표대비 실적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
 - 농식품 수출에 대한 지나친 목표치 설정보다는 보다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정해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농식품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

- 농식품 수출의 80% 이상은 가공식품이며, 수출용 가공식품의 국산 원료 이용 비율이 높지 않아 수출지원으로 인한 혜택이 국내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수출지원사업이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농식품 수출확대로 이어지도록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신선농산물이나 국산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중장기적 관점과 다변화 지원정책 수립

- 해외홍보·마케팅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단발성 혹은 1회성이 아니라 대상 국가를 축소하더라도 유망시장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 대중국 전략품목 육성지원이나 할랄식품산업육성과 같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아닌 수출시장다변화를 전제로 하여 다양한 국가를 개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의 조건 완화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지원 사업인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률 40~60%대로 저조함. 이 때문에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중금리 이하로 이자율이 상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조건의 완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수출 인프라강화 사업 확대

- 수출보조인 수출물류비 지원은 그동안 수출에 따른 물류비 절감은 물론, 농식품 수출확대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나, 2023년 폐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출물류비 지원은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수출허용보조(Green Box)에 해당되는 수출 인프라 강화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한식 세계화 및 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 한식에서의 국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

- 한식의 국내외 인지도 향상과 해외 한식당 매장의 확대 등이 국내 농산물의 사용 비중을 높여 소비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외 진출 한식당의 국내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식진흥 및 세계화가 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한식테마관 활용 및 국내외 한식 행사 공동 주관 등 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관련 상품 수출의 확대 노력도 요구됨.

■ 한식 관련 홍보의 내실화

- 한식 홍보는 권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최근 홍보의 중심으로 부상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내실화를 기해야 함. 또한, 한식재단의 역할을 재정비함으로써 홍보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산 식재료 수출은 저조함. 올림픽, 한식페스티벌, 음식관광 등을 통해 국내외 한식 홍보를 내실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한식진흥법 조속히 제정

- 한식진흥법 제정을 통해 한식 정책의 목적이나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식당·종사자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함.

3) 전통발효식품 육성

■ 장기 대책 마련

- 전통발효식품의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전통발효식품산업육성방안 마련과 김치산업육성종합대책 마련

- 국내 김치시장은 수입김치에 의해 잠식되고 있어서 국내 수요 확대가 어렵고 전통주는 판매·영업망이 부족하여 판로가 제약됨. 김치와 장류의 해외수요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전통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술 연구 기능의 확충, 전통주 업체간 협업화 유도 방안이 요구됨. 아울러 식품명인 위상을 제고하도록 제도 및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함.

■ 전통식품 통계 확보

- 전통식품 생산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전통식품산업 규모 추정 및 전통식품산업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여 전통식품산업 정부정책 수립 방향 설정에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연례 산업현황 조사를 통해 전통식품 성장규모 파악
 -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를 통해 일부 전통식품(된장, 고추장, 간장, 한과류, 떡 등)에 대하여 개별 업체의 경영실태 및 현황에 대한 조사는 미 실시

■ 전통주 종합 지원 강화

- 전통주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탁주를 포함한 주종별 인증기준 개선 등 술 품질인증제도를 개선하여 보완함. 또한, 찾아가는 양조장을 추가로 선정하고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직접 판매를 확대해야 함.
- 전통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입 대체, 전통주 문화 계승 및 국내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전통주 산업 기반 조성, 우수제품 선발 및 집중 지원, 주류 제조와 관광의 연계 강화, 국내외 소비 저면 확대 등 종합 지원 필요
-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대한 업계와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지정 확대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4) 기능성식품 육성

■ 컨설팅 지원 강화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우수 기능성 소재 발굴, 과학적 연구 및 원료 등록 컨설팅 지원
 -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과학적 근거를 갖춘 원료의 등록을 지원하는 컨설팅 신규 추진 필요

■ 전문 인력 육성

- 기능성 원료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최종 제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기 까지 단계별 다양한 전문 인력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기능성 식품 육성법 법제화 및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 새로운 기능성 식품 표시제를 도입하여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이 필요함.
 - 미국과 일본은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
- ‘기능성 식품육성법’을 제정하여 기능성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R&D 투자 확대

- 기능성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R&D 체계 구축 확대가 필요함.
 - 미래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한 R&D는 단순한 연구개발이 아닌 산업화를 포함하는 R&BD 차원으로 접근 필요
 - 한정된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래 전략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연관산업 활성화

■ 식품연관산업 기초통계 구축

- 식품산업을 둘러싼 식품포장, 식품기계 등 식품전후방산업의 변화 발전은 미래식품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상품 유통이 세계화하고, 식품의 공급과 소비의 유통체인이 IT산업과 함께 발전함에 따라 식품포장 기술개발과 혁신은 급격히 성장
 - 식품기계에 대한 식품산업의 다양한 수요, 식품기계 수입시장 증가 등으로 식품기계산업의 성장 잠재력 풍부
- 식품포장, 식품기계 등 식품전후방 연관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기초통계가 전무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차질을 초래함. 따라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의 실태파악을 위한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함.
- 주요 조사내용은 업체 일반현황(인력, 매출액, R&D 등), 생산 및 유통현황, 정책지원여부, 애로사항 등

■ 식품기계의 성능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의 DB를 구축한 후에 식품기계 성능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수기계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함. 이를 위해 농업과학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2.5.4. 소비자정보 제공 및 보호

1) 녹색 식생활 교육

■ 식생활 교육 확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 국민에 맞는 정확한 식생활 교육을 위해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저소득층·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확대가 필요하고 식생활 교육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로 인한 정확한 정책사업 평가가 필요함.
- 영·유아, 어린이,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확대함.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영유아 식생활교육을 전국적 규모로 확산하고, 어린이 대상 식습관 학교 운영을 확대함. 교사(예비교사) 및 학부모 대상 식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여 식생활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지역아동센터(어린이 과일 제공사업 등) 등의 영양·건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식생활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함.

■ 지역단위 식생활 교육 추진

- 지역 단위 사업을 개발하고, 자발적인 민간단체/기업체 참여를 유도함.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공장·점포 견학, 제조·조리 체험, 농림어업 체험, 요리교실 개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식생활교육 활동을 추진함. 참여기업은 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기업 상품수요 확대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식생활·영양교육 관련 지자체 조례제정을 확대하고, 시·군·구 민간추진단체 운영을 확산함.

2) 인증제도 개편

■ 소비자 홍보 강화

- 표시/인증제 적용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 신뢰 증진을 위해 인지도와 이해도 증진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언론보도 및 광고를 활성화하고 학교 소비자교육 수업내용에 식품안전교육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함.

■ 모니터링 강화

- 표시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계절적·시기적으로 집중 소비되는 품목에 대한 기획 모니터링 추진해야 하고, 원산지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품목 등 주요 위반 품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인증제 품목 확대

-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대상품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소비자의 식생활에서 원산지 표시가 포괄하는 영역 비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인증제 적용 농식품 유통 확대

- 표시인증제 적용 농축산물 유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표시인증을 받은 농축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대형할인점 등 일반소매 유통사와 민-관 협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대형 할인점 내에서 소비자들이 표시인증제 적용 농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분된 코너 및 매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3)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 홍보 및 교육 강화

-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상승 시키고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인 GAP, HACCP에 관한 생산자 교육과 컨설팅 강화로 참여농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GAP, HACCP, 이력추적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인한 안전 인증 농식품 수요 확대가 필요

4)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 이력추적제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교육·컨설팅 강화로 이력관리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생산·유통자에 대한 시스템 활용 권역별 교육 및 이력정보 입력 컨설팅(대행 입력)을 추진해야 함.
 - 이력관리시스템 사용자 및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역별 정기교육(연 17회) 및 개별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하고, 인증기관, GAP시설 등을 시스템 사용자 현장 교육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홍보 강화

- 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이력관리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력추적관리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영상 제작·배부, 블로그, SNS 등 소비자 참여형 매체를 활용한 제도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 4 장

식품산업의 혁신성 및 정책성과 평가

1. 혁신성 평가

1.1. 산업혁신지표 분석의 개요와 분석방법

- 유럽연합은 2001년부터 회원국 간의 혁신성과를 비교·평가하여 결과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EIS)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 2004년부터는 EIS와 별도로 산업혁신지표(Sectorial Innovation Scoreboards, SIS)를 개발하여 산업혁신에 대한 국가별 비교를 시행하고 있음. Hollandsers& Arundel(2005)은 2005년 12개의 지표로 구성된 새로운 산업혁신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6)은 이를 토대로 국가간 산업간 혁신성 지표를 비교·분석함.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6)은 분석자료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한국기업

혁신조사' 자료를 이용함.

-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혁신 실태파악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관련분야 연구활성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
 - 10인 이상 제조업체 4,000여개, 서비스업체 4,000여개를 매 2년마다 조사하며 조사시점 이전 3개년 실적을 기준으로 설문이 구성
 - 승인통계(승인번호:395001)
- 산업혁신지표(SIS)는 크게 투입활동과 혁신성으로 구분되며, 투입활동은 교육자원과 투자자원, 기업혁신활동을 포함하고 혁신성화는 경제성과와 지적재산을 포함함.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6)은 Hollandsers& Arundel(2005)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국가간 비교분석을 하고자 모든 항목의 사용을 Hollandsers& Arundel(2005)과 동일하게 설정함.

<표 4-1> 산업혁신지표(SIS) 항목별 구성

구분	항목	비고	
투입활동	교육자원	고등교육을 받은 종업원 비율(%)	석사급으로 설정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비중(%)	
	투자자원	공공부문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 비중(%)	횃수 기준
	기업혁신활동	사내혁신 기업의 비중(%)	조직혁신 3문항 모두달성
		제휴혁신 중소기업 비중(%)	전체 기업, 횃수 기준
		혁신투자(총 매출액의 %)	산업별 평균값 이용
혁신성과	경제성과	신상품(시장최초) 판매 비중(총매출액의 %)	
		신상품(자사최초) 판매 비중(총매출액의 %)	
	지적재산	특허출원 기업 비중(%)	유무
		상표출원 기업 비중(%)	유무
		의장출원 기업 비중(%)	유무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한국의 혁신수준분석」을 토대로 저자가 재정리

- 본 분석은 국내 식품산업과 타 산업간 비교가 목적이므로 산업간 더 엄밀한 비교를 위해 산업구분이 불분명하고 혁신투자 항목과 중첩가능성이 있는 OECD자료(1개 항목)를 제외하였으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6)은 ‘고등 교육을 받은 종업원 비율(%)’항목에 대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고 밝혔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산업 세분류별로는 학력수준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상시 종사자 중 석사학위 이상 비중으로 대체하여 사용함.
- 분석에 사용한 모든 데이터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를 사용, 응답기업의 실적기준 연도는 2013~2015년임. ‘한국기업혁신조사’에서의 혁신의 개념은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품이나 공정, 조직운영, 마케팅 방법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이며 아래와 같이 혁신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함.
 - 첫째, 혁신 결과가 실행되어 매출, 비용, 품질향상, 효율성 등 기업운영 성과에 실제 영향을 끼친 것
 - 둘째, 조사대상 기업 입장에서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것도 무방)
- 분석의 결과는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SIS(Sectorial Innovation Scoreboards)의 방식과 동일하게 혁신지수(Innovation performance)를 계산하여 사용함. 혁신지수는 다음의 식(1)과 같으며 지표 항목별로 최고값을 1, 최소값을 0으로 표준화(re-scaling)하여 상대적인 차이를 산출함.

$$\text{- 식(1)} \quad x'_{ij} = \frac{x_{ij} - x_j^{\min}}{x_j^{\max} - x_j^{\min}}$$

- 식품제조업은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제조업으로 구분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구분하여 분석, 외식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숙박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총 표본 2,781개 중 음식점업 표본이 2,252개로

81.0%를 점하고 있어 사용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분석을 수행함.

1.2. 식품 제조업 혁신지수 분석결과

1.2.1. 제조업분야 고등교육

- 고등교육 항목은 2015년도 기준 상시종사자 중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종사자 비중을 혁신지수로 나타낸 것임.
- 고등교육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임. 식료품 산업은 0.5점 수준이며 음료 산업은 0.87점임.

1.2.2. 제조업분야 직무훈련

- 직무훈련 항목은 2013년~2015년 동안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품과 공정을 개발, 도입하기 위하여 내부 및 외주를 통한 교육훈련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혁신지수로 나타낸 것임.
- 직무훈련 항목의 혁신지수가 높은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전기장비’산업임. 식료품 산업은 0.37점, 음료 산업은 0.72점임.

1.2.3. 제조업분야 공공지원

- 공공지원 항목은 2013년~2015년 동안 수행한 혁신활동을 위한 자금의 조달

방법 중 정부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임(혁신활동 횟수 기준).

- 공공지원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음료’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가죽, 가방 및 신발’ 산업임. 식료품 산업은 0.26점임.

1.2.4. 제조업분야 사내혁신

- 사내혁신 항목은 2013년~2015년 동안 다음의 3가지 조직혁신을 기업 운영에 도입하였는지를 혁신지수로 나타낸 것임.
 - 첫째, 업무수행방식의 변화도입(공급사슬관리, 6시그마, 지식관리, 린생산방식, 품질경영 등)
 - 둘째, 업무유연성 및 부서간 통합성 등의 업무수행조직 변화 도입
 - 셋째, 외부조직과의 관계 변화 도입(제휴, 파트너십, 아웃소싱 등)
- 사내혁신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음료’산업과,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산업임. 식료품 산업은 0.03점을 기록함.

1.2.5. 제조업분야 제휴혁신

- 제휴혁신 항목은 2013년~2015년 동안 제품 혁신 및 공정 혁신을 위한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타기업 또는 타기관과 협력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혁신지수로 나타낸 것임.
- 제휴형식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음료’ 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가죽, 가방 및 신발’,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산업임. 식료품 산업은 0.2점임.

1.2.6. 제조업분야 혁신투자

- 혁신투자 항목은 2015년 산업별 평균 매출액에서 혁신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혁신지수로 나타낸 것임. 혁신투자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음료’산업임. 식료품 산업은 0.04점으로 나타남.

<표 4-2> 제조업 산업혁신지수 분석결과(1)

단위: 점

산업별	고등 교육	직무 훈련	공공 지원	사내 혁신	제휴 혁신	혁신 투자
식료품	0.50	0.37	0.26	0.03	0.20	0.04
음료	0.87	0.72	1.00	0.00	1.00	0.00
섬유제품(의복제외)	0.20	0.59	0.25	0.09	0.36	0.05
의복, 액세서리, 모피제품	0.28	0.52	0.31	0.12	0.48	0.11
가죽, 가방 및 신발	0.42	0.54	0.00	0.39	0.00	0.09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0.53	1.00	0.04	0.00	0.49	0.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37	0.26	0.84	0.14	0.35	0.20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0.00	0.20	0.27	0.00	0.00	1.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0.33	0.31	0.00	0.00	0.00	0.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0.59	0.35	0.67	0.18	0.59	0.0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1.00	0.97	0.42	1.00	0.73	0.1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0.21	0.09	0.93	0.24	0.47	0.13
비금속 광물제품	0.47	0.49	0.00	0.15	0.89	0.05
1차 금속 제조업	0.33	0.43	0.25	0.15	0.22	0.04
금속가공기계,가구 제외	0.27	0.03	0.37	0.03	0.30	0.09
전자, 음향, 통신	0.59	0.72	0.50	0.23	0.35	0.16
의료, 정밀	0.67	0.35	0.81	0.15	0.66	0.09
전기장비	0.48	0.00	0.11	0.11	0.20	0.12
기타 기계 및 장비	0.40	0.68	0.37	0.24	0.64	0.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0.34	0.27	0.24	0.05	0.76	0.13
기타 운송장비	0.35	0.75	0.46	0.11	0.39	0.09
가구	0.08	0.34	0.15	0.14	0.52	0.17
기타 제품	0.22	0.55	0.00	0.29	0.64	0.36

1.2.7. 제조업분야 신상품 판매(시장최초)

- 신상품 판매(시장최초) 항목은 2013년~2015년 사이 출시된 시장최초 혁신제품의 매출액이 2015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혁신지수로 나타낸 것임.
- 신상품 판매(시장최초)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가죽, 가방 및 신발’,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식료품’ 산업임. ‘음료’산업은 0.08점임.

1.2.8. 제조업분야 신상품 판매(자사최초)

- 신상품 판매(자사최초) 항목은 2013년~2015년 사이 출시된 시장최초는 아니지만 자사기준 최초인 혁신제품의 매출액이 2015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혁신지수로 나타낸 것임.
- 신상품 판매(자사최초)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기타 제품’임. 식료품 산업은 0.14점, 음료 산업은 0.56점임.

1.2.9. 제조업분야 특허출원

- 특허출원 항목은 2013년~2015년 사이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을 출원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혁신지수로 나타낸 것임.
- 특허출원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의료, 정밀’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임. 식료품 산업은 0.13점, 음료 산업은 0.69점임.

1.2.10. 제조업분야 디자인권

- 디자인권 항목은 2013년~2015년 사이 지식재산권 중 디자인권을 출원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혁신지수로 나타낸 것임.
- 디자인권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음료’산업이며 가장 낮은 항목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산업임. 식료품 산업은 0.18점임.

<표 4-3> 제조업 산업혁신지수 분석결과(2)

단위: 점

산업별	신상품 판매 (시장최초)	신상품 판매 (자사최초)	특허 출원	디자인권	상표권
식료품	0.00	0.14	0.13	0.18	0.24
음료	0.08	0.56	0.69	1.00	1.00
섬유제품(의복제외)	0.83	0.61	0.12	0.09	0.08
의복, 액세서리, 모피제품	0.22	0.91	0.18	0.26	0.31
가죽, 가방 및 신발	1.00	0.35	0.24	0.21	0.03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0.11	0.15	0.24	0.28	0.2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08	0.37	0.22	0.27	0.11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1.00	1.00	0.00	0.04	0.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0.33	0.33	0.25	0.00	0.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0.14	0.24	0.42	0.26	0.1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0.43	0.35	0.63	0.49	0.8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0.41	0.32	0.45	0.38	0.16
비금속 광물제품	0.50	0.43	0.24	0.19	0.05
1차 금속 제조업	0.34	0.29	0.38	0.24	0.15
금속가공기계,가구 제외	0.42	0.45	0.30	0.28	0.09
전자, 음향, 통신	0.33	0.43	0.54	0.22	0.17
의료, 정밀	0.29	0.28	1.00	0.29	0.24
전기장비	0.62	0.52	0.55	0.50	0.17
기타 기계 및 장비	0.30	0.24	0.72	0.15	0.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0.28	0.33	0.32	0.13	0.05
기타 운송장비	0.27	0.70	0.40	0.21	0.27
가구	0.62	0.33	0.43	0.31	0.10
기타 제품	0.21	0.00	0.54	0.36	0.12

1.2.11. 제조업분야 상표권

- 상표권 항목은 2013년~2015년 사이 지식재산권 중 상표권을 등록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혁신지수로 나타낸 것임.
- 상표권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음료’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임. 식료품 산업은 0.24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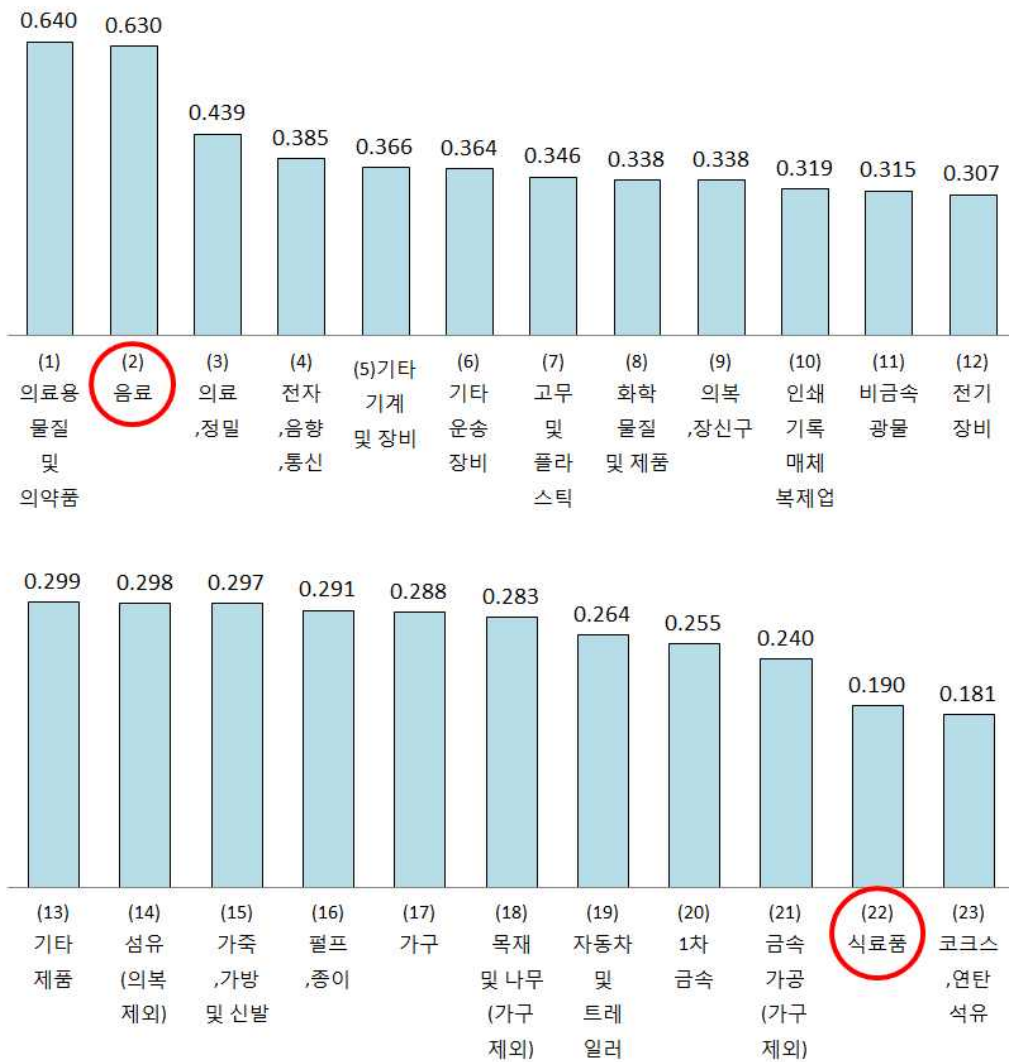
1.3. 식품 제조업의 혁신지표 평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6)과 동일하게 산업별로 모든 항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함. 이를 토대로 상호비교를 실시하고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높은 순위를 부여함.
-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산업으로 0.64점임. 음료 산업이 0.63점으로 후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의료·정밀 산업 0.439점, 전자·음향·통신산업 0.385점 순임.
- 분석의 목표였던 식료품 산업은 0.19점으로 나타나 분석대상 산업 중 가장 평균점수가 낮은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산업에 비해 단, 0.009점 높은 수준으로 23개 산업 중 22위를 차지함.
- 종합적으로 비추어볼 때, 혁신지수를 통해 살펴본 식료품 산업의 혁신성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반면, 음료산업은 23개 산업 중 2위에 해당할 만큼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혁신성을 나타내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6)에서는 식료품 산업과 음료산업이 합쳐진 식음료 산업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혁신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며, 두 산업을 분리할 경우 음료산업에 비해 식료품 산업의 혁신지수는 매우 낮은 상황임.

<그림 4-1> 제조업 업종별 혁신지수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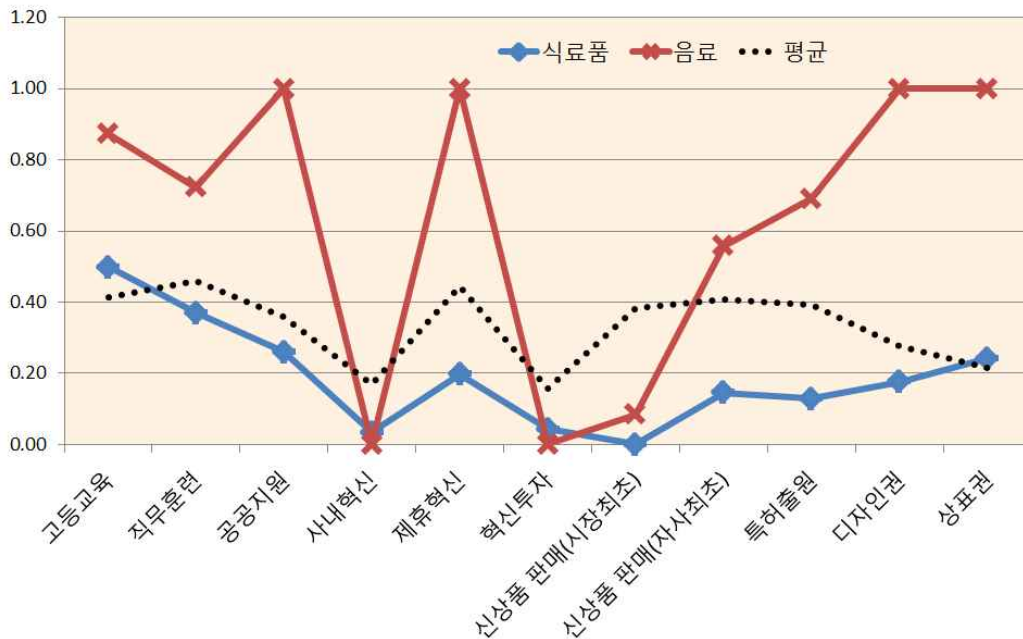


주: 11개 혁신지수 항목의 평균 점수임.

- 식료품 산업의 혁신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산업의 혁신지표를 제조업 평균치와 비교한 결과, 고등교육 항목과 상표권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사내 혁신 항목과 혁신투자 항목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신상품 판매(시장최초) 항목은 제조업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음료 산업은 사내혁신 항목과 혁신투자, 신상품 판매(시장최초) 항목은 평균 보다 낮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지원 항목과 제휴혁신, 디자인권, 상표권 항목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4-2> 식품 산업과 제조업(평균) 혁신지수 비교

단위: 점



1.4. 외식 서비스업(음식점업) 혁신지수 분석결과

1.4.1. 서비스업분야 고등교육

- 고등교육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임과 외식 서비스업(음식점업)으로서, 석사 이상 비중이 0.63%로 가장 낮은 산업임.

1.4.2. 서비스업분야 직무훈련

- 직무훈련 항목의 혁신지수가 높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임. 외식 서비스업(음식점업)은 0.49점임.

1.4.3. 서비스업분야 공공지원

- 공공지원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수리 및 기타개인’, ‘외식 서비스업(음식점업)’ 산업임.

1.4.4. 서비스업분야 사내혁신

- 사내혁신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외식 서비스업(음식점업)’ 산업임.

<표 4-4> 서비스업 산업혁신지수 분석결과(1)

단위: 점

산업별	고등 교육	직무 훈련	공공 지원	사내 혁신	제휴 혁신	혁신 투자
도매 및 소매업	0.35	0.67	0.33	0.08	0.31	0.00
운수업	0.16	0.83	0.30	0.26	0.33	0.02
숙박 및 음식점업	0.00	0.49	0.00	0.00	0.04	1.0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0.88	0.67	0.18	0.02	0.29	0.31
금융 및 보험업	0.79	0.97	0.00	0.02	0.39	0.06
부동산 및 임대업	0.00	0.83	0.00	0.21	1.00	0.25
전문, 과학 및 기술	1.00	0.46	1.00	0.30	0.38	0.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0.36	1.00	0.39	0.11	0.08	0.10
교육	0.74	0.75	0.49	0.06	0.17	0.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0.75	0.45	0.00	0.21	0.13	0.6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0.48	0.00	0.00	1.00	0.00	0.22
수리 및 기타개인	0.08	0.11	0.00	0.36	0.19	0.37

1.4.5. 서비스업분야 제휴혁신

- 제휴형식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 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임. 외식 서비스업(음식점업)은 0.04점으로 낮은 수준임.

1.4.6. 서비스업분야 혁신투자

- 혁신투자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외식 서비스업(음식점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임.

1.4.7. 서비스업분야 신상품 판매(시장최초)

- 신상품 판매(시장최초)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업’ 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 산업임. ‘외식 서비스업(음식점업)’은 0.88점임.

1.4.8. 서비스업분야 신상품 판매(자사최초)

- 신상품 판매(자사최초)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교육’산업임. ‘외식 서비스업(음식점업)’은 0.01점으로 낮은 편임.

1.4.9. 서비스업분야 특허출원

- 특허출원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외식 서비스업(음식점업)’ 산업임.

1.4.10. 서비스업분야 디자인권

- 디자인권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산업임. ‘외식 서비스업(음식점업)’은 0.02점으로 낮은 편임.

1.4.11. 서비스업분야 상표권

- 상표권 항목의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산업임. ‘외식 서비스업(음식점업)’은 0.02점으로 낮은 편임.

<표 4-5> 서비스업 산업혁신지수 분석결과(2)

단위: 점

산업별	신상품 판매 (시장최초)	신상품 판매 (자사최초)	특허 출원	디자인권	상표권
도매 및 소매업	0.42	0.33	0.36	0.29	0.36
운수업	1.00	0.18	0.13	0.10	0.05
숙박 및 음식점업	0.88	0.01	0.00	0.02	0.0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0.35	0.27	1.00	0.73	1.00
금융 및 보험업	0.43	0.08	0.09	0.00	0.00
부동산 및 임대업	0.00	0.98	0.00	0.65	0.01
전문, 과학 및 기술	0.42	0.19	0.64	1.00	0.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0.31	0.00	0.00	0.00	0.02
교육	0.14	0.00	0.00	0.06	0.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	1.00	0.00	0.00	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	0.87	0.00	0.02	0.49
수리 및 기타개인	-	0.39	0.07	0.05	0.05

1.5. 외식 서비스업(음식점업)의 혁신지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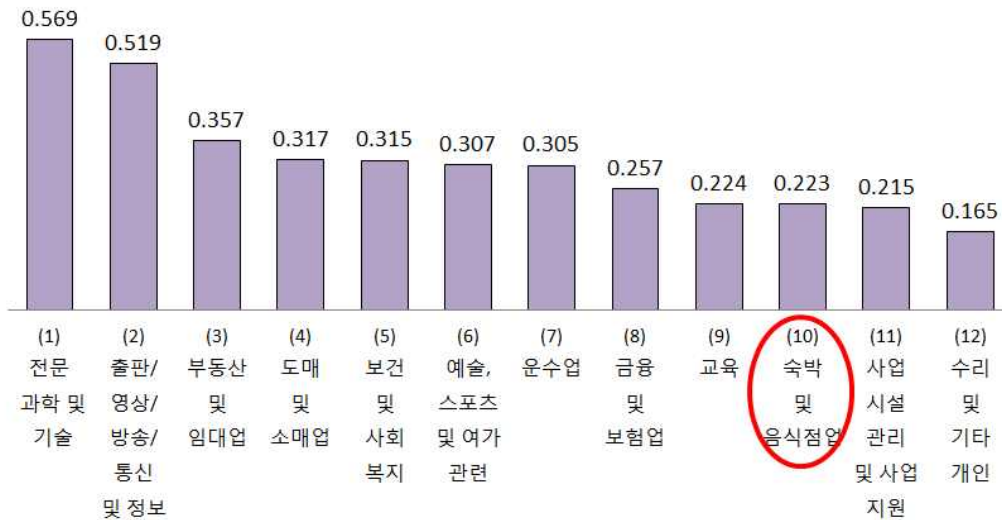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6)과 동일하게 산업별로 모든 항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함. 이를 토대로 상호비교를 실시하고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높은 순위를 부여함.
- 서비스업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산업으로 0.57점임.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산업이 0.52점으로 후순위를 기록하였으며, ‘부동산 및 임대업’ 0.36점 순임.
- 분석의 목표였던 ‘외식 서비스업(음식점업)’은 0.22점으로 나타나 12개 분석대상 산업 중 10위를 차지함. 가장 평균점수가 낮은 산업은 ‘수리 및 기타

개인(0.17점)’이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0.21점)’산업도 낮은 편임.

- 종합적으로 비추어볼 때, 혁신지수를 통해 살펴본 식료품 산업의 혁신성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반면, 음료산업은 23개 산업 중 2위에 해당할 만큼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혁신성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4-3> 서비스업 업종별 혁신지수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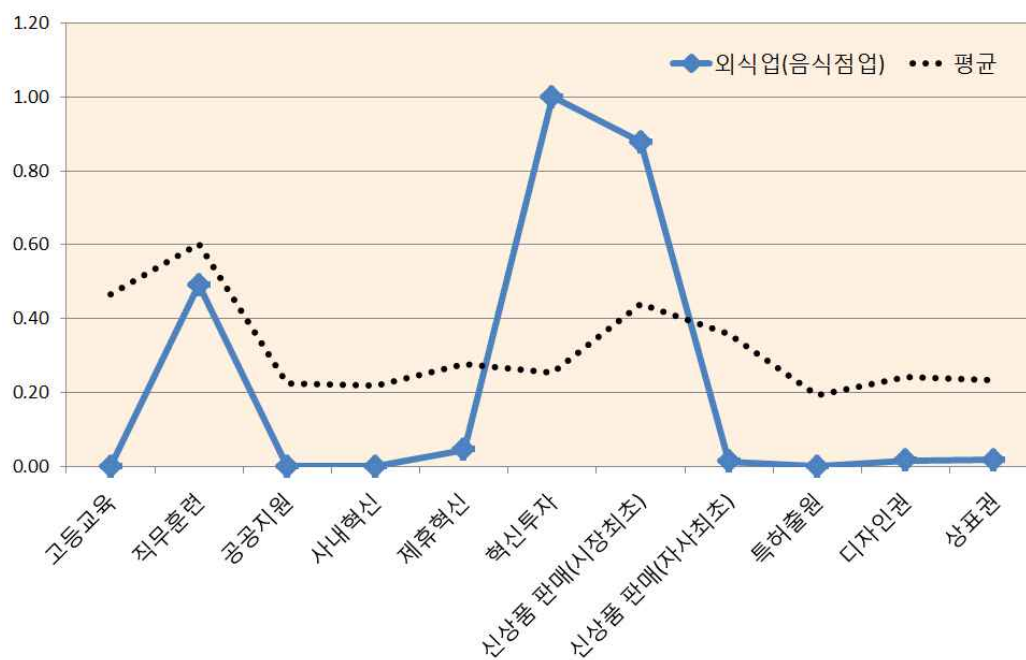


주: 11개 혁신지수 항목의 평균 점수임.

- 식료품 산업의 혁신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외식산업의 혁신지표를 서비스업 평균치와 비교한 결과, 혁신투자 항목과 신상품 판매(시장최초) 항목이 평균 보다 높고 나머지 항목들은 평균에도 못미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고등교육 항목과 공공지원 항목, 사내혁신 항목, 특허출원 항목은 최하 수준으로 나타나 평균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4-4> 식품 산업과 제조업(평균) 혁신지수 비교

단위: %



2. 정책성과 평가

2.1. 조사개요

- 제2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평가 및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정책수혜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농업계 기관 담당자, 대학교수, 정책담당자, 업계 전문가와 식품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의 수혜를 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총 1,423명에게 2017년 10월 18일부터 동년 11월 6일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분석팀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²
- 총 1,423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사용한 유효 표본은 312개로서 응답률은 21.9%로 나타남. 312개 표본은 조사대상자 별로 수혜자가 192개 61.5%, 전문가 120개 38.5%로 구성됨.

<표 4-6> 응답대상 구분별 유효 표본 수 및 비중

구분	빈도	비중(%)
수혜자	192	61.5
전문가	120	38.5
합계	312	100.0

- 분야별로는 식품제조가공 분야가 142개 45.5%로 다수를 차지하며, 연구소 38

² 정책수혜 업체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 아래, 해당사업 담당기관인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의 도움을 받아 실시함.

명(12.2%), 대학교수 34명(10.9%), 농산물 생산 29명(9.3%) 순으로 나타남.

<표 4-7> 분야별 표본 수 및 비중

분야 구분	빈도	비중(%)
농산물 생산	29	9.3
식품제조가공	142	45.5
식품서비스(외식 등)	15	4.8
대학교수	34	10.9
연구소	38	12.2
정책담당자	11	3.5
정부공공기관	13	4.2
수출	21	6.7
기타	9	2.9
합계	312	100.0

- 192개 수혜업체의 수혜 사업은 다음의 <표 >와 같음. 수출진흥과 관련하여 수혜를 받은 응답자 비중이 51.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R&D) 순임.

<표 4-8> 응답대상 수혜업체들의 수혜 사업 종류와 비중

사업 구분	빈도	비중(%)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활성화 지원	10	5.2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	8	4.2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12	6.3
전처리업체운영자금	2	1.0
시설현대화자금	3	1.6
국내산외식식재료구매촉진	6	3.1
국제프랜차이즈박람회참가	5	2.6
찾아가는양조장사업	12	6.3
기타전통식품진흥사업	13	6.8
수출진흥	98	51.0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23	12.0
합계	192	100.0

3.2. 분석결과

3.2.1. 제2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종합평가

- 전문가와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제2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평가 결과 과제의 달성도 측면에서는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수출확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순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과 ‘외식·한식진흥’ 분야는 낮게 평가됨.

<표 4-9> 제2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분야별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분야 구분	과제의 중요도			과제의 달성정도			향후 계속 추진 필요 여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4.37	4.34	4.42	3.37	3.36	3.39	4.43	4.38	4.49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4.13	4.20	4.02	3.26	3.33	3.17	4.19	4.26	4.10
농식품 수출 확대	4.27	4.39	4.07	3.47	3.48	3.46	4.31	4.43	4.12
전통·발효식품산업육성	3.79	3.78	3.80	3.22	3.13	3.34	3.83	3.82	3.85
외식산업,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3.86	3.85	3.89	3.22	3.18	3.27	3.87	3.83	3.93

주: 분야별 세부 과제의 평균값임.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과제에 따라 정책달성도는 정책수혜자그룹과 전문가그룹의 평가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는 전문가 그룹에서 과제 달성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정책수혜자그룹에서는 3번째로 높게 평가됨.

- 앞으로 중요하게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는 정책수혜자와 전문가 모두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수출확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순으로 중요도를 제시하였음.
- 각각의 주요과제별 세부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에서는 ‘식품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었는데 현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어 「3차 식품산업진흥계획」에서는 식품산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비중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분야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이 다른 세부과제보다 달성도에 대한 평가점수는 높지만 절대점수는 3.48로 높은 수준은 아님. ‘농산물가공플랜트 확충’, ‘1인기업 창업 지원’ 및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는 과제의 중요도와 미래 사업 필요성에 비해 정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이들 정책의 활성화가 요구됨.
- ‘농식품 수출확대’ 분야는 ‘박람회 지원’, ‘수출물류비 및 통관비 지원’, ‘관측행사 지원’이 상대적으로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남. 그러나 향후 필요한 과제의 중요성은 지금까지의 사업성과가 부진한 ‘유망업체의 수출상품화 지원’ 과 ‘수출시설현대화 지원’ 분야가 높게 평가되어 이들 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수출지원정책이 요구됨.
-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분야는 개별과제의 달성도에 대해 대체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점수가 3.3점 이하로 낮아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과제의 중요도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분야는 ‘소스산업센터 지원’으로 나타났는데 소스산업화센터는 현재 계획수립단계로 향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외식산업,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분야는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분야보다도 과제 달성도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았음. 세부사업별로 보면 ‘한식당 전문인력 양성’ 분야가 평가점수가 제일 낮게 나타남. 향후 과제의 중요도를 보면 ‘음식관광 상품 개발·보급 및 홍보’ 가 높게 나타나 3차 계획에서 음식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해서 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과 관련하여 ‘식품산업 혁신 인프라 확충’,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외식산업 내 공정 성장 지원’, ‘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및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주요정책분야로 선정하였음.
- 제시된 6개 정책과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식품산업 혁신 인프라 확충’,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외식산업 내 공정 성장 지원’, ‘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및 ‘농식품 소비자 신뢰 제고’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앞에서 설명한 2차 식품산업진흥계획의 평가 결과와 흐름면에서는 일치함.
- ‘식품산업의 혁신 인프라 확충’ 세부과제 중에서는 ‘수출 및 해외 진출 확대, 와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어 이들 사업에 대한 정책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과제 중에서는 ‘산지와 식품기업의 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의 식품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전용생산단지 조성, 가공적성이 높은 품종 개발, 상생 비즈니스모델개발과 시범사업 추진 등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식품·외식산업 내 공정 성장 지원’ 세부과제 중 ‘지역별·특성별 맞춤형 중

‘소기업 육성’ 과 ‘지역 특화식품산업 육성’ 이 주요 정책과제로 평가되었음. 따라서 기존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을 비롯해 중소식품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와 추진방식의 개편이 필요함. ‘유망분야의 선제적 육성’ 과제의 세부과제 중요도 비중은 4과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남.

3.2.2. 제2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세부분야별 평가

가.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는 식품 R&D 확대와 통계정보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임. 과제의 중요도 차원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과제는 식품 R&D 확대임(4.62점).
 - 수혜자는 전문가에 비해 전문인력 양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전문가는 통계정보 구축을 더 중요하게 평가
- 과제의 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식품 R&D 확대가 가장 달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3.60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은 3.22점으로 가장 저조한 상황임.

<표 4-10>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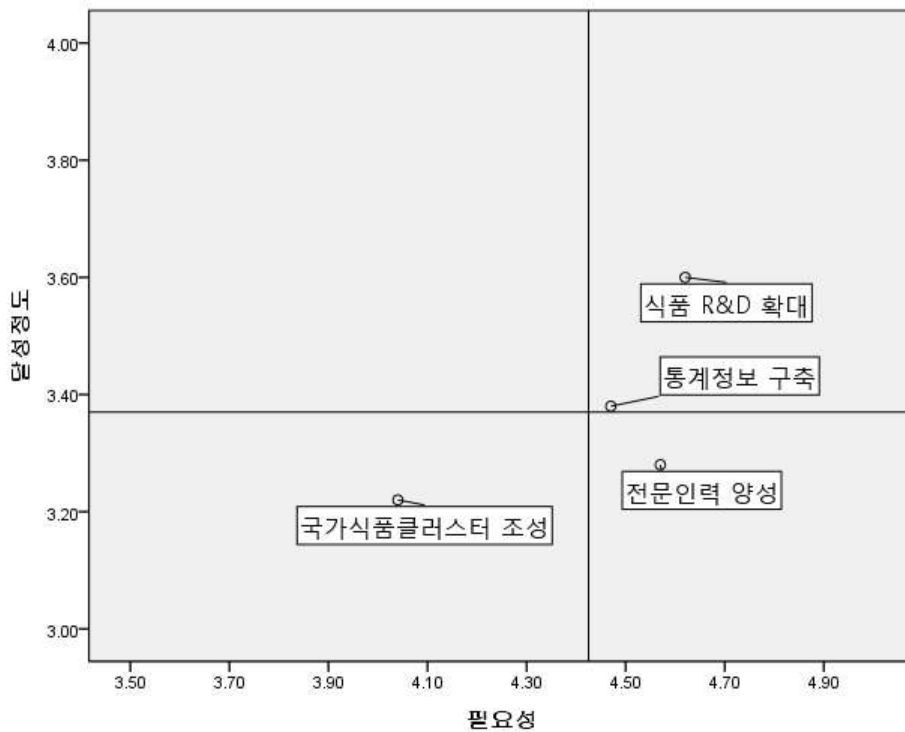
추진 과제	과제의 중요도			과제의 달성정도			향후 계속 추진 필요 여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식품 R&D 확대	4.62	4.61	4.62	3.60	3.60	3.60	4.62	4.62	4.61
통계정보 구축	4.39	4.24	4.62	3.38	3.39	3.38	4.47	4.33	4.69
전문인력 양성	4.51	4.54	4.47	3.28	3.31	3.24	4.57	4.53	4.61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3.97	3.97	3.97	3.22	3.15	3.32	4.04	4.03	4.04

주: 리커트 5점척도(①전혀 아니다~⑤ 매우 그렇다)의 평균 점수임.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향후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식품 R&D확대가 4.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전문가는 수혜자에 비해 통계정보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평가함.
- 평균점을 중심으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의 추진 과제들간의 IPA분석을 실시함. 식품 R&D 확대는 2차 계획의 달성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향후 필요성도 높은 과제임. 통계정보 구축 또한 평균점을 상회하기는 하나, 달성 정도에 비해 향후 필요성이 요구되는 과제임. 전문인력 양성은 달성 정도는 평균점 이하로 미흡하지만 향후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과제이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함.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은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달성정도도 미흡하고 향후 필요성도 높지 않은 평가임.

<그림 4-5>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 IPA 분석



나.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과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농산물가공플랜트 확충과 1인기업 창업 지원, 사이버거래소 활성화, 식품가공원료 매입 및 시설현대화 지원 등임.
- 과제의 중요도 차원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과제는 식품가공원료 매입 및 시설현대화 지원임(4.39점). 이는 수혜자 그룹에서의 높은 중요도 평가에 기인한 결과이며(4.58점), 전문가 그룹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4.27점)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평가함.
- 과제의 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이 가장 달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3.48점). 농산물가공플랜트 확충과 1인기업 창업지원은 3.07점으로 가장 저조한 상황임.

<표 4-11>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분야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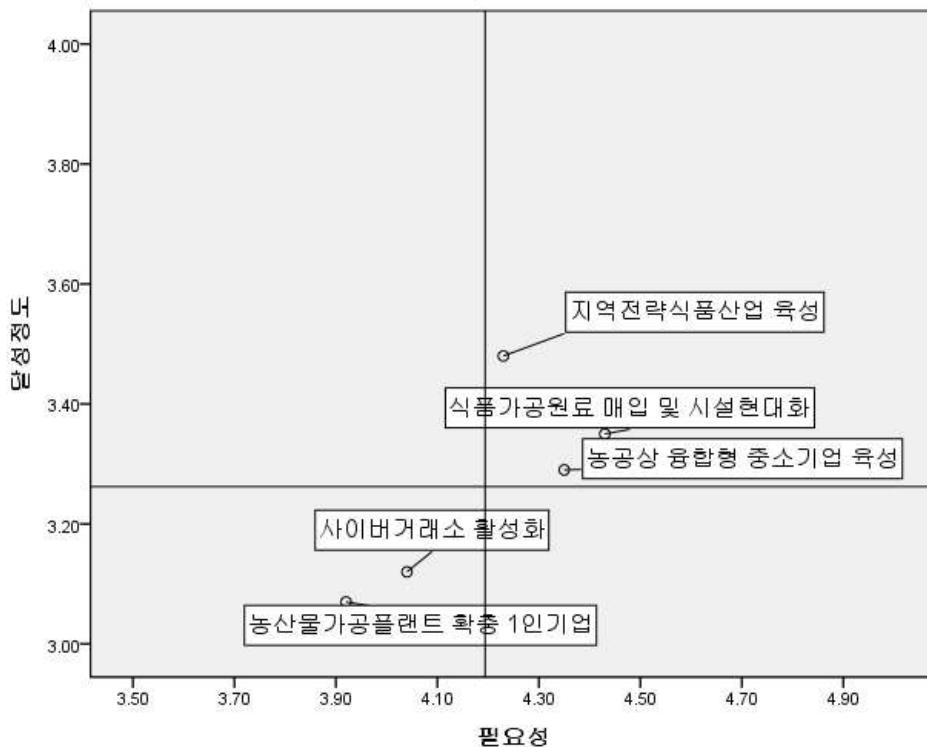
추진 과제	과제의 중요도			과제의 달성정도			향후 계속 추진 필요 여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역클러스터)	4.28	4.29	4.27	3.48	3.49	3.46	4.23	4.21	4.25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4.24	4.31	4.15	3.29	3.43	3.09	4.35	4.37	4.31
농산물가공플랜트 확충과 1인기업 창업지원	3.81	3.85	3.76	3.07	3.15	2.96	3.92	3.97	3.86
사이버거래소 활성화	3.91	3.98	3.81	3.12	3.17	3.04	4.04	4.12	3.91
식품가공원료 매입 및 시설현대화 지원	4.39	4.58	4.10	3.35	3.40	3.28	4.43	4.61	4.17

주: 리커트 5점척도(①전혀 아니다~⑤ 매우 그렇다)의 평균 점수임.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향후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식품가공원료 매입 및 시설현대화 지원이 4.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 또한 수혜자 그룹의 높은 평가에 기인한 결과이며, 전문가는 이보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추진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4.31점).
- 평균점을 중심으로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분야의 추진 과제들간의 IPA 분석을 실시함.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과 식품가공원료 매입 및 시설현대화 지원,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은 2차 계획의 달성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향후 필요성도 높은 과제임. 사이버거래소 활성화와 농산물가공 플랜트 확충 및 1인기업 창업지원은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강화 분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달성정도도 미흡하고 향후 필요성도 높지 않은 평가임.

<그림 4-6>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분야 IPA 분석



다. 농식품 수출 확대

- 농식품 수출 확대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는 수출업체 원료구입 자금 지원과 선도조직기반 조성, 수출상품화 지원, 수출물류비 및 통관비 지원, 수출보험 지원, 박람회 지원, 관측행사 지원, 수출시설 현대화 지원 등임.
- 과제의 중요도 차원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과제는 수출상품화 지원으로 4.48점임. 수혜자 그룹은 이보다 수출업체 원료구입 자금 지원의 중요성을 더욱 높게 평가함.
- 과제의 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수혜자와 전문가 그룹 모두 박람회 지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선도조직기반 조성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표 4-12> 농식품 수출 확대 분야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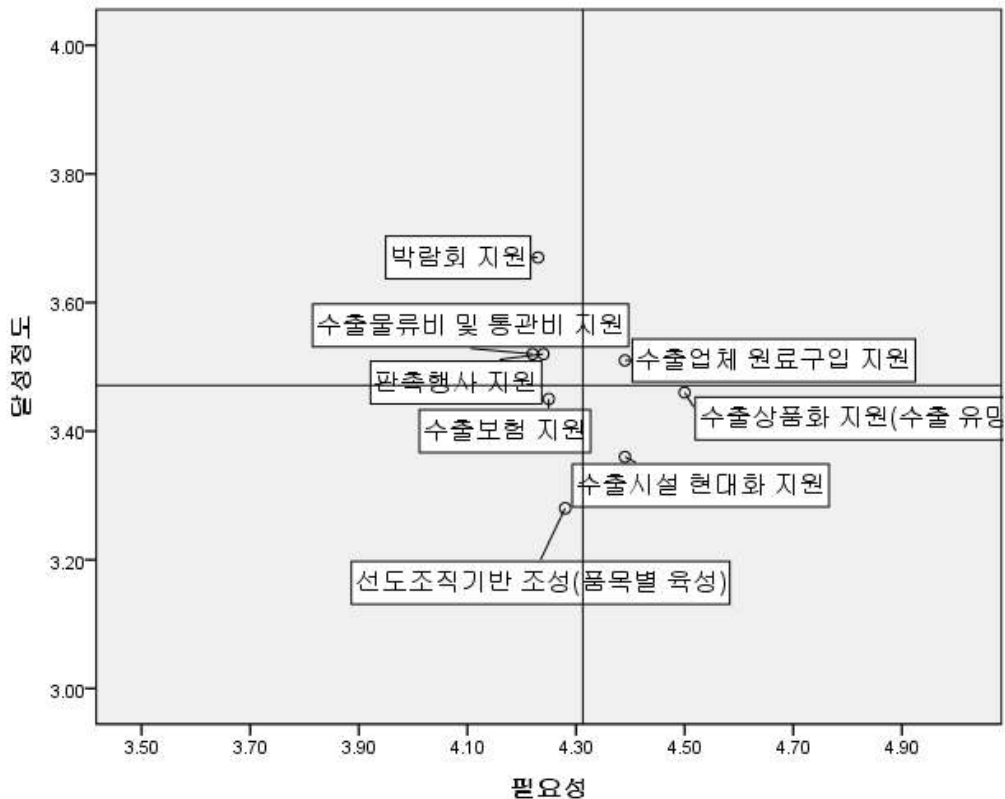
추진 과제	과제의 중요도			과제의 달성정도			향후 계속 추진 필요 여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수출업체 원료구입 지원	4.35	4.55	4.04	3.51	3.47	3.55	4.39	4.55	4.14
선도조직기반 조성(품목별 선도조직 육성)	4.16	4.06	4.31	3.28	3.27	3.30	4.28	4.21	4.38
수출상품화 지원(수출유망제조업체)	4.48	4.50	4.44	3.46	3.47	3.46	4.50	4.52	4.47
수출물류비 및 통관비 지원	4.24	4.45	3.90	3.52	3.54	3.50	4.22	4.42	3.91
수출보험 지원	4.23	4.35	4.03	3.45	3.49	3.40	4.25	4.35	4.08
박람회 지원	4.17	4.36	3.87	3.67	3.70	3.64	4.23	4.42	3.94
관측행사 지원	4.17	4.38	3.82	3.52	3.54	3.50	4.24	4.45	3.92
수출시설 현대화 지원	4.35	4.47	4.16	3.36	3.38	3.35	4.39	4.55	4.15

주: 리커트 5점척도(①전혀 아니다~⑤ 매우 그렇다)의 평균 점수임.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향후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수출상품화 지원이 4.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 또한 수혜자 그룹은 이 밖에도 수출업체 원료구입 지원, 수출시설 현대화 지원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평균점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 분야의 추진 과제들간 IPA분석을 실시함. 수출업체 원료구입 지원은 2차 계획의 달성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향후 필요성도 높은 과제임. 박람회 지원과 수출물류비 및 통관비 지원, 판촉행사 지원은 달성 정도는 높지만 향후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과제임. 수출상품화 지원과 수출시설 현대화 지원은 달성 정도는 평균점 이하로 미흡하지만 향후 필요성이 높은 과제이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함.

<그림 4-7> 농식품 수출 확대 분야 IPA 분석



다.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는 전통주산업 육성(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등)과 식품명인 육성, 전통식품체험홍보관 운영, 김치자조금 지원, 소스산업센터 지원 등임.
- 과제의 중요도 차원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과제는 식품명인 육성으로 3.94점임. 4점대를 상회하는 다른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중요도 평가임.
- 과제의 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식품명인 육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3.32). 그러나 후순위인 전통주산업 육성(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등/ 3.31점), 전통식품체험홍보관 운영(3.30점) 등과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

<표 4-13>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분야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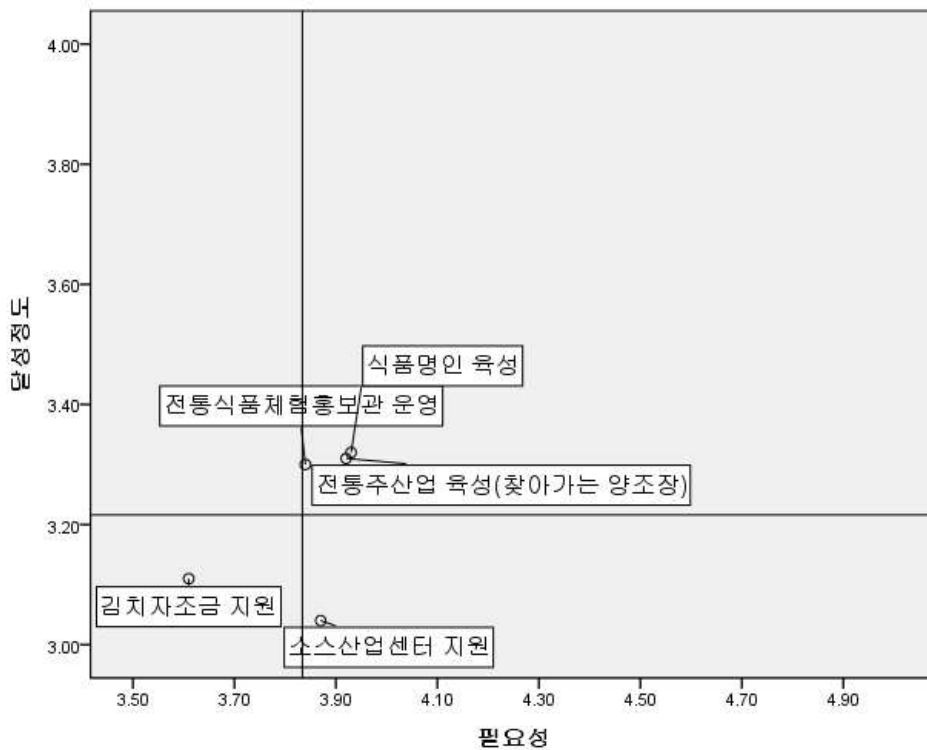
추진 과제	과제의 중요도			과제의 달성정도			향후 계속 추진 필요 여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전통주산업 육성(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등)	3.90	3.85	3.98	3.31	3.22	3.44	3.92	3.86	4.01
식품명인 육성	3.94	3.91	3.99	3.32	3.21	3.48	3.93	3.91	3.97
전통식품체험홍보관 운영	3.78	3.90	3.59	3.30	3.24	3.38	3.84	3.94	3.70
김치자조금 지원	3.55	3.54	3.58	3.11	3.00	3.26	3.61	3.61	3.62
소스산업센터 지원	3.76	3.71	3.85	3.04	2.98	3.12	3.87	3.80	3.97

주: 리커트 5점척도(①전혀 아니다~⑤ 매우 그렇다)의 평균 점수임.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향후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식품명인 육성이 3.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수혜자 그룹은 전통식품체험홍보관 운영의 필요성을, 전문가 그룹은 전통주산업 육성(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등)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평균점을 중심으로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분야의 추진 과제들간 IPA분석을 실시함. 전통주산업 육성(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등)과 식품명인 육성, 전통식품체험홍보관 운영은 2차 계획의 달성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향후 필요성도 높은 과제임. 소스산업센터 지원은 달성 정도는 평균점에 매우 못 미치는 수준으로 미흡하지만 향후 필요성이 높은 과제이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함. 김치자조금 지원은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분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달성정도도 미흡하고 향후 필요성도 높지 않은 편임.

<그림 4-8>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분야 IPA 분석



라. 외식산업,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 외식산업,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는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과 외식업체 국내 식재료 구매촉진, 외식업체 컨설팅 지원,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및 활성화 지원, 한식컨텐츠 개발 및 보급, 한식당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내외 한식 홍보사업 지원, 음식관광 상품개발·보급 및 홍보 등임.
- 과제의 중요도 차원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과제는 음식관광 상품개발·보급 및 홍보로 4.08점임. 전문가 그룹에서는 한식컨텐츠 개발 및 보급이 4.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과제의 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3.29). 한식당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가장 달성 정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3.10점을 기록함.

<표 4-14> 외식산업,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분야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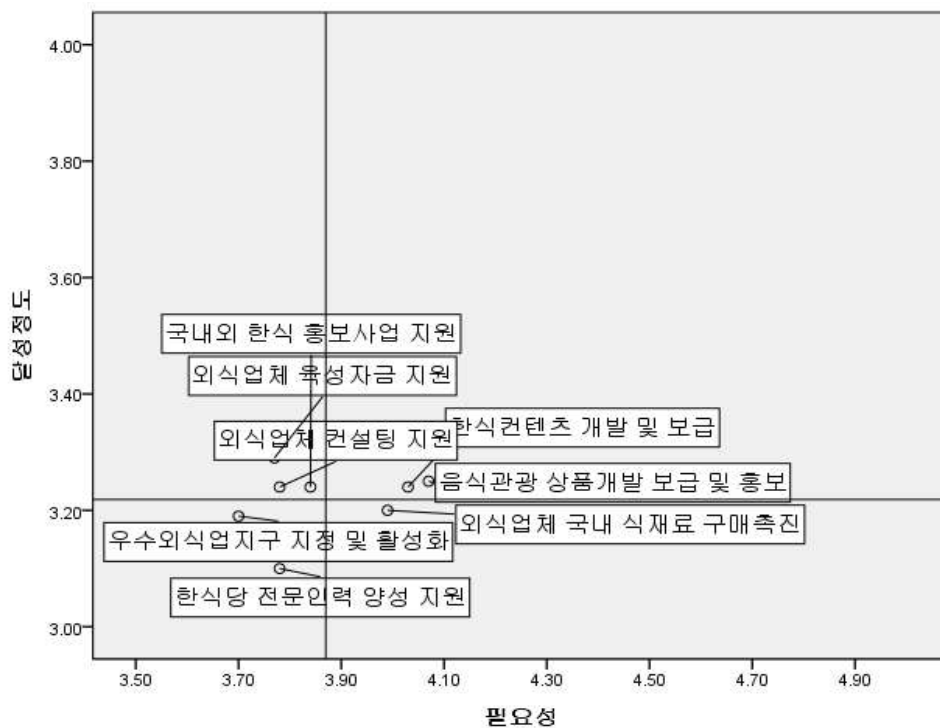
추진 과제	과제의 중요도			과제의 달성정도			향후 계속 추진 필요 여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전체	수혜자	전문가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3.74	3.74	3.75	3.29	3.20	3.41	3.77	3.75	3.80
외식업체 국내 식재료 구매촉진(산지 페어 지원 등)	3.98	3.92	4.06	3.20	3.21	3.19	3.99	3.95	4.03
외식업체 컨설팅 지원	3.76	3.69	3.85	3.24	3.17	3.32	3.78	3.70	3.89
우수외식업지구 지정 및 활성화 지원	3.64	3.72	3.53	3.19	3.14	3.27	3.70	3.68	3.73
한식컨텐츠 개발 및 보급	4.05	3.98	4.15	3.24	3.18	3.32	4.03	3.95	4.16
한식당 전문인력 양성 지원	3.81	3.74	3.91	3.10	3.11	3.08	3.78	3.70	3.89
국내외 한식 홍보사업 지원(한식문화관 운영 등)	3.84	3.91	3.74	3.24	3.18	3.31	3.84	3.90	3.77
음식관광 상품개발·보급 및 홍보	4.08	4.08	4.09	3.25	3.25	3.23	4.07	4.03	4.14

주: 리커트 5점척도(①전혀 아니다~⑤ 매우 그렇다)의 평균 점수임.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향후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음식관광 상품개발·보급 및 홍보가 4.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전문가 그룹은 한식컨텐츠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4.16점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 평균점을 중심으로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분야의 추진 과제들간 IPA분석을 실시함. 음식관광 상품개발·보급 및 홍보와 한식컨텐츠 개발 및 보급은 2차 계획의 달성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향후 필요성도 높은 과제임. 외식업체 국내 식재료 구매촉진은 달성 정도는 평균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미흡하지만 향후 필요성이 높은 과제이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함.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과 외식업체 컨설팅 지원, 국내외 한식 홍보사업 지원은 달성정도에 비해 향후 추진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과제이며 우수외식업지구 지정 및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달성정도도 미흡하고 향후 필요성도 높지 않음.

<그림 4-9> 외식산업,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분야 IPA 분석



3.2.3. 제2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식품산업 발전 기여도 평가

가. 농업과 연계로 인한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도

- 2008년 이후 수행한 식품산업진흥정책이 농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6.9%가 보통이상 기여한 것으로 응답함. 매우 기여했다는 응답은 8.5%로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수혜자(10.8%)가 전문가(5.0%)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4-15> 농업과 연계로 인한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도 평가

단위: %

구분	기여도				그다지 기여 못함	전혀 기여 못함	합계
	합계 (A+B+C)	매우 기여함(A)	어느 정도 기여함(B)	보통 정도 기여함(C)			
전체	86.9	8.5	49.5	28.9	12.5	0.7	100.0
수혜자	89.8	10.8	52.7	26.3	9.7	0.5	100.0
전문가	82.3	5.0	44.5	32.8	16.8	0.8	100.0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나. 식품제조·가공산업 분야의 성장에 기여도

- 2008년 이후 수행한 식품산업진흥정책이 식품제조·가공산업 분야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7.4%가 보통이상 기여한 것으로 응답함. 매우 기여했다는 응답은 8.7%로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수혜자(11.0%)가 전문가(5.1%)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4-16> 식품제조·가공산업 분야의 성장에 기여도 평가

단위: %

구분	기여도				그다지 기여 못함	전혀 기여 못함	합계
	합계 (A+B+C)	매우 기여함(A)	어느 정도 기여함(B)	보통 정도 기여함(C)			
전체	87.4	8.7	43.7	35.0	12.7	0.0	100.0
수혜자	88.5	11.0	46.7	30.8	11.5	0.0	100.0
전문가	85.6	5.1	39.0	41.5	14.4	0.0	100.0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다. 중소식품/전통식품산업 분야의 성장에 기여도

- 2008년 이후 수행한 식품산업진흥정책이 중소식품/전통식품산업 분야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5.1%가 보통이상 기여한 것으로 응답함. 매우 기여했다는 응답은 10.1%로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전문가 그룹은 5.9%로 높은 편은 아님.

<표 4-17> 중소식품/전통식품산업 분야의 성장에 기여도 평가

단위: %

구분	기여도			그다지 기여 못함	전혀 기여 못함	합계	
	합계 (A+B+C)	매우 기여함(A)	어느 정도 기여함(B)				보통 정도 기여함(C)
전체	85.1	10.1	46.3	28.7	13.9	1.0	100.0
수혜자	87.6	12.9	45.5	29.2	11.8	0.6	100.0
전문가	81.4	5.9	47.5	28.0	16.9	1.7	100.0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라. 외식산업분야의 성장에 기여도

- 2008년 이후 수행한 식품산업진흥정책이 외식산업분야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4.8%가 보통이상 기여한 것으로 응답함. 매우 기여했다는 응답은 4.8%로 다른 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4-18> 외식산업분야의 성장에 기여도 평가

단위: %

구분	기여도			그다지 기여 못함	전혀 기여 못함	합계	
	합계 (A+B+C)	매우 기여함(A)	어느 정도 기여함(B)				보통 정도 기여함(C)
전체	84.8	4.8	41.0	39.0	14.1	1.0	100.0
수혜자	89.6	5.8	42.8	41.0	9.2	1.2	100.0
전문가	77.8	3.4	38.5	35.9	21.4	0.9	100.0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마. 농식품 수출증대에 기여도

- 2008년 이후 수행한 식품산업진흥정책이 농식품 수출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3.5%가 보통이상 기여한 것으로 응답함. 매우 기여했다는 응답은 9.7%였으며, 수혜자(11.7%)가 전문가(6.7%)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4-19> 농식품 수출증대에 기여도 평가

단위: %

구분	기여도			그다지 기여 못함	전혀 기여 못함	합계	
	합계 (A+B+C)	매우 기여함(A)	어느 정도 기여함(B)				보통 정도 기여함(C)
전체	83.5	9.7	42.3	31.5	14.1	2.3	100.0
수혜자	85.4	11.7	45.8	27.9	12.3	2.2	100.0
전문가	80.7	6.7	37.0	37.0	16.8	2.5	100.0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제 5 장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방안

1. 계획수립 절차

-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자 의견 반영
 - 식품산업 관계자, 전문가(학계, 연구소), 정책담당자 등 정책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 자문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식품산업 각 분야별 전문가그룹 자문회의 실시(FGI, 4회)
 - 기본계획(안)의 검토 및 추가 사항 등을 위해 업계, 학계, 소비자 의견 수렴(3회)
 - 농식품부 수시업무협의회(5회)
 -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과 정책협의회(2회)

2. 기본방향

- 앞서 실시한 「제2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초로 「3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3)」 수립을 위한 기본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자 함.

2.1.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 경제·인구·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식품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향후 식품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의 심화, 건강지향성 등으로 고령친화식품, 건강기능식품, 발효식품의 성장이 전망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R&D투자 전략도 수립되어야함.
- 식품·외식산업은 향후 최저임금의 상승과 인력난 심화에 따라 식재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증가하는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가공 및 소재·반가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됨.
- 식품산업의 성장에 따라 식품기계 및 식품포장산업 등 연관산업도 크게 발전하였으나 그동안 정책대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음. 특히 식품기계 설계의 표준화 및 거래 활성화는 식품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함. 또한 식품기계 사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도 중요한 과제임. 식품포장산업은 식품가공 및 유통과 연계된 산업으로서 식품기계산업 및 소재용기산업과의 융합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으로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2.2.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식품산업의 산업혁신지표(SIS)분석결과 23개 비교산업 중 2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식품산업의 혁신성은 매우 낮은 수준임. 혁신항목 중에서 직무훈련이나 혁신(R&D) 투자와 같이 국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관련 지표도 포함되어 있어 식품산업분야의 혁신인력 양성과 관련교육기관 지정 등 지원이 필요함.
- 전문가와 정책수혜자 평가 결과에서도 보듯이 식품산업의 인프라 확충에 대해 정책우선순위가 1순위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인프라 관련정책 중에서 수출 및 해외진출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음.
- 식품산업은 농식품 수출을 늘리고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성장을 도모해야 함. 이를 위해 국내 식품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식품기업이 현지에 진출하여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따라서 정부는 관련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함.
- 식품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식품R&D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국내 최대의 식품산업전용단지가 조성되고 R&D지원센터가 설립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도 중요한 정책과제임.

2.3.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지원

- 앞의 설문조사결과에서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의 성장 지원 정책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과제와 함께 높은 정책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체는 종업원 5인 미만인 사업체수가 각각 81%, 87%에 달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지역별·유형별로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함.
 - 맞춤형 중소기업 육성이 정책우선순위 가장 높게 책정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및 식품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 성장도 식품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과제임.
- 2005년부터 추진한 지역식품클러스터사업은 2017년까지 82개소가 조성되었는데 투자규모면에서는 지역에서 가장 큰 농산물가공 지원 사업임. 그러나 클러스터사업단이 안고 있는 기술 및 경영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사업인 특화농공단지 사업 등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정상화를 도모해야 함.

2.4.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는 국내 원료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통해서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의 증대와 전통식품산업 등 지역의 농산물 가공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는 설문조사결과에서 보듯이 3차 식품산업진흥계획의 과제 중요도면에서도 인프라 구축 다음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 지금까지 국내산 농산물 원료이용 확대를 위해서 지역전략식품 육성, 농공

상 융합형기업 육성,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 기반 조성, 소규모(1인) 기업 창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식품기업의 국내농산물사용비율이 31%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그동안 산지가 식품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산 원료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공급기반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산 원료 이용의 제약이 있었음. 따라서 산지와 식품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설문조사결과에서 산지와 식품기업의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정책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책정
-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식품(전통주)산업과 한식의 진흥도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임.

2.5. 소비자의 신뢰 제고

-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는 국내외 식품의 소비 저변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임. 이를 위해서 원산지표시제도의 확대, 민간인의 식품감시기능 부여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농식품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 교육과 건전한 먹거리를 선택을 유도하는 맞춤형 식생활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농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의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함. 우리나라의 농산물 GAP 및 축산식품 HACCP 인증비율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이들 사전적 안전인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 농식품원산지표시제를 비롯한 각종 식품표시 및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 제고도 필요함. 한류, k-food 등으로 한국식품의 해외 인지도는 향상되고 있지만 해외 한식당의 인증제 도입, 서비스 개선, 해외 식품 인증 등을 통해서 한국 식품의 이미지를 한층 개선하여 해외 수요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비전 및 정책목표

3.1. 비전

- 「3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3)」의 비전은 ‘혁신’을 강조하여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로 삼고자 함.

3.2. 정책목표

- 정책목표① 식품산업 매출액 규모 확대
 - 전체/제조/외식 = ('15)210/102/108조 → ('22) 330/158/172조
- 정책목표② 국산농산물 사용량 확대
 - ('15)515만 톤 → ('22)690만 톤
- 정책목표③ 식품분야 고용 확대
 - 전체/제조/외식 = ('16)233/34/199만 명 → ('22)268/38/230만 명

<그림 5-1>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안)

비전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목표	<p>◇ 식품산업 매출액 규모 확대(전체/제조/외식) : (15) 210/102/108조 → (22) 330/158/172조</p> <p>◇ 국산농산물 사용(량) 확대 : (15) 515만 톤 → (22) 690만 톤</p> <p>◇ 식품분야 고용 확대(전체/제조/외식) : (16) 233/34/199만 명 → (22) 268/38/230만 명</p>

3.3. 목표치 설정 방법

3.3.1. 식품산업 매출액 규모 확대

- 영세한 업체까지 모두 포함하고자 광업제조업조사 자료가 아닌 경제총조사 매출액 자료를 이용
- 식품제조업은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을 합산하여 식품제조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외식은 ‘음식점 및 주점업’ 분류를 사용
- 그간 식품산업의 목표 설정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구호, 선언적 의미에서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함에 따라 이번 3차 계획에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담아보자는 것이 기본 방향임.

- 따라서 상승세에 있는 최근 추세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이 첫째 목표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0-2015년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함. 식품제조업은 연평균 6.5%씩 성장한 반면, 외식은 연평균 9.8%씩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음. 그러나 전문가 FGI 결과, 외식의 향후 5년 뒤 변화는 과거 추세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식의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 종사자 2-4명 규모 사업체의 증감률인 6.9%를 적용함.

<그림 5-2> 식품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2010-2015)

단위: %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3.3.2. 국산농산물 사용량 확대

- 국산농산물 사용량 확대는 원료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함. 조사내용의 변경으로 2010년 자료를 사용 할 수 없어, 2011-2015년 자료를 사용함.
- 국산농산물 사용비중은 2011년 31.6%에서 2015년 31.5%로 오히려 0.1%p 감소하였으나 사용량은 확대되어 물량은 4.0%가 증가, 분모와 분자를 이루는 전체 원재료 사용량과 국산 원재료 사용률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비중(%)으로는 식품제조업에서 국산 농산물 수요를 증대 시키자는 목표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사용량 지표를 사용함.
-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사용량 679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나 전문가들의 목표치 상향 요구와 주요 품목에 대한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주요 품목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총 사용량 690만 톤으로 결정함.
 - 쌀의 경우 0.6%이나 1.0%로 상향 조정하여 목표를 설정: 35만 톤 → 38만 톤
 - 밀의 경우에는 사용량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증가율은 매우 크게 나타나, 자급률 1%p 향상을 목표로 2015년 대비 2만 톤 추가사용을 목표로 설정: 43천 톤 → 63천 톤
 - 상기 3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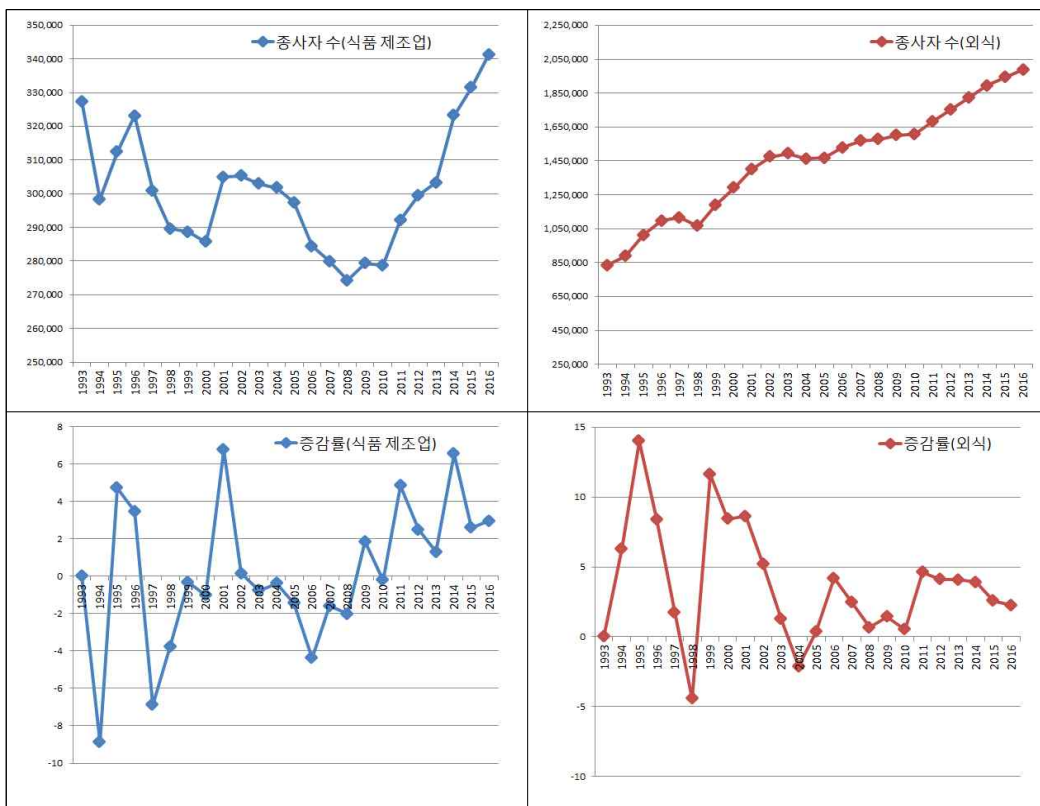
3.3.3. 식품분야 고용 확대

- 고용은 추세파악을 위해 전국사업체 조사의 8차 개정 조사와 9차 개정 조사를 연계하여 1993년부터 식품제조업과 외식 종사자 추이를 살펴봄. 식품 제조업의 변동성이 외식보다 크기는 하나 두 산업 모두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0년대 후반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0년대 중후반에 고용이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가파르게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외식은 식품제조업에 비해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고용악화가 크지 않은 편이며 안정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010년부터, 식품제조업과 외식 모두 종사자 수가 비교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며, 증감률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한 해는 없음.

<그림 5-3> 식품산업의 고용 추이(1993-2016)

단위: 명, %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이처럼 식품산업은 비교적 최근 들어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편임. 식품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8%씩 성장하였

으나 최근 5년 동안은 3.2%씩 증가, 외식은 10년 동안 연평균 2.7%씩 증가 하였으나 최근 5년 동안은 3.4%씩 증가함.

- 2016년~2011년 5년 동안 식품제조업 종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0.5%, 외식은 동기간 1.9% 증가에 불과

- 전문가 FGI 결과, 최저시급 인상 등 고용시장의 변화가 예상되어 향후 5년간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외식의 경우에는 4차 산업 혁명, 키오스크, HMR과 배달·테이크아웃 시장의 성장, 경기불황 등으로 식품 제조업에 비해 향후 증가세가 더욱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 5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반영하기 보다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사용함.
- 단, 외식의 경우 더욱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최근인 2016년 증가율(2.3%)와 2015년 증가율(2.6%) 보다도 높게 나타남에 따라 0.2%p를 추가적으로 디스카운트 하여 최종적으로 각각 연평균 1.8%와 2.5% 성장을 목표로 2022년 고용 목표를 산정함.

4.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과제 및 주요 내용(안)

4.1.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목표

-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①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②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③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지원, ④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⑤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제고의 5대 정책과제와 정책과제별 세부목표를 수립함<그림 5-4>.

<그림 5-4>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목표

정책과제	목표
①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미래 유망산업 선제적 육성 ▶ 연관산업 활성화로 전·후방산업의 동반 성장 도모
②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성장기반 마련 ▶ 청년 등 식품분야를 선도할 혁신인력 양성
③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단계별 맞춤형 중소 식품·외식업체 육성정책 마련 ▶ 지역별 특화된 식품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④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인센티브 확충 ▶ 전통식품(전통주) 및 한식 진흥을 통한 소비기반 확보
⑤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정책참여기회 확대로 소비자와 소통강화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4.2.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별 주요 내용

4.2.1.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가.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

■ 가정간편식(HMR)

- 가정간편식(HMR)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품질 유지 등을 위한 기초 기술에 대한 R&D를 지원함.
 - 관련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표준화 등을 위한 R&D 등 정책수요 발굴·지원
 - 품질유지를 위한 냉동 보존기술, 친환경 포장용기 등 연구·개발
-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제작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여 맛과 영양을 충족하는 가정간편식(HMR) 시장을 창출함.
 - 원료구매자금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
- 정기적으로 가정간편식(HMR)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제품개발을 유도하도록 함.

■ 고령친화식품³

³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고,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으로 저작·섭식·소화장애를 고려한 특수식품, 영양강화식 등’으로 정의함.

- 고령친화식품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책기반 마련함.
 -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 시장 확대를 위해 새로운 명칭 개발
 - 세분화된 단계별 표준 마련
 - 건강보험 적용 등 관련부처 정책 연계 검토
- 기업체 주도 R&D 지원 확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 고령친화식품 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함.
- 고령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최적 식이모델 등에 대한 사전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민간 부문의 고령자 맞춤형 제품 개발 지원을 강화함.

■ 기능성식품

-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과학적으로 효능이 검증된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자 책임으로 신고 후, 효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신고·표시제도를 도입함.
- 국내·외 기능성 농식품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능성 농식품 DB’를 구축하고 원료의 표준화, 제형·규격 설정 및 시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능성평가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함.
- 식품 소재의 안전성·기능성 규명 연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산 기능성 소재 이용 촉진을 위한 원료은행 구축을 추진함.

나.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

- 4차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해 10가지 ‘차세대 10대 식품기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R&D에 집중적으로 투자·육성함. 10대 식품기술은 아래와 같음.
 - ① 식품의 대사조절 원리 구명 및 바이오식품 개발 예측 시스템 구축

- ② IoT 기반 전통발효식품 공정제어 기술
 - ③ 개인맞춤형 식품 3D 프린팅 기술
 - ④ 미래형 대체식품 기술
 - ⑤ Robotics를 활용한 중소기업 식품생산기술
 - ⑥ 빅데이터 기반 개인맞춤형 바이오헬스 식품 기술
 - ⑦ 대사질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식의약 기술
 - ⑧ 인공지능 기반, 품질정보의 비파괴 신속 계측기술
 - ⑨ AI, VR/AR 등의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 포장기술
 - ⑩ 식품 스마트 안전유통 시스템 기술
- 식품산업분야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촉진하고, 배달어플리케이션 뿐 아니라 외식업 경영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푸드테크의 창업을 활성화함.
 - 푸드테크 스타트업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포럼을 발족('18)하고, 관련전문가·업계 등과 함께 발전방안 마련
 - 식품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4차산업혁명 도입의 시장분위기를 조성함.
 - 제조·유통·ICT 전 과정에 대한 융합형 인재양성 교육과정 마련
 - 정부는 공공 빅데이터 제공, R&D 지원 등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민간·기업은 혁신 주도
 -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함.
 - 규제발굴·상담 창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마련하고 업계·학계·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협의 추진

다.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 기존 식품가공업체, 지역 농협 등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소재산업·반가공업·식재료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충함.
 -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주던 것에서 더 적극적으로 판로를 연계·개척
 - 신선편이상품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과 품종개발, 기능성 용기 등 맞춤형 제품개발 지원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eaT)를 통해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지(공급업체), 구매기업(수요업체) 유치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함.

라.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 식품기계·포장 산업분류를 신설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추진전략을 도출함. 2017년 식품기계 및 포장업체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식품기계)과 2021년(포장재)에 본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뒷받침 하도록 함.
- 산업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패키징센터를 식품포장 기술개발 및 보급의 중심기관으로 운영함.
 -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기계의 국산화 도모

4.2.2.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가.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지원으로 혁신인력 양성

- 청년층에 대한 식품산업 취·창업 지원 등으로 식품산업 혁신을 이끌어 나갈 우수인력 양성함.

- 설비·공간 등의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창업관련 교육 확대
 - 푸드테크 등 관련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창업 컨설팅 등 제공
 - 식품제조, 단체급식, 외식체인 등 관련업체를 확보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과 연계하여 청년인턴 파견
- 식품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교육 지원을 확대함.
- 4차산업혁명 등 혁신역량 강화 관련 교육과정 신규 개설

나.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 R&D 기반의 혁신형 식품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R&D를 확대함.
- 혁신형 식품기업에 대한 R&D·마케팅·교육 등의 패키지 지원 필요
 - 중소기업 대상, 현장애로 기술 R&D를 확대 추진, 컨설팅과 연계
- 심사위원의 POOL을 다양화·전문화 하는 등, 심사과정을 개선하고, 식품 R&D 전과정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 사업성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과 사업화단계로의 발전을 위한 후속연구 지원 확대
-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과 강점분야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함.
- 식품 R&D 지원 협의체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체를 통해 식품분야 R&D 추진의 기본방향 설정 및 사업조정, 협업과제 발굴
 - 유관기관내 연구과제의 중복을 방지

- 국가 R&D뿐 아니라 민간의 R&D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 민간과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함.

다. 글로벌 역량 강화로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 농식품 수출확대

- 미국, 일본, 중국 등 기존 수출 시장 중심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국가 등을 중심으로 수출전략국가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신시장 개척해야 함.
 - 수출국가별 비관세장벽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라벨링 등록·상표권 출원 지원 등 애로사항을 해소
 - 파일럿 요원(aT), 시장개척단 등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하고 시장조사, 유망 바이어·유통업체 등 네트워크를 구축
- 신선농산물은 수출물량의 안정적 공급, 수출 농산물의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신선농산물 품목별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고 가공식품 수출업체는 수출 전문유통망을 활용하는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지원함.
 -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박람회·해외관측 및 해외인증시 국산원료 농식품 사용 업체를 우선 선정
- 해외진출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현지 유통채널 등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한국 농식품 상설판매관을 구축,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현지 물류망 활용도를 높여 현지 플랫폼화를 추진함.

■ 외식기업 해외진출

-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 해외 주요 진출국에 대한 시장정보 등 맞춤형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

- 글로벌 외식기업협의체를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식재료 수출 인증 지원 등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라.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의 업종·규모별 등 타켓을 선정하여 전담 매니저를 지정하고 관심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분양 체결을 유도함.
 - 해외소재 업체들은 KOTRA, aT 등 해외정보·네트워크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투자유치를 확대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 R&D벨트(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를 조성하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제품개발 등 애로사항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기업 투자유도와 입주기업 종사자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주거 및 교통 등의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
- 맞춤형 농식품 원료 및 지역 우수인력에 대한 중계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부지 확장(2단계) 및 푸드랜드 마크 추진 검토하도록 함.

마.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체계 구축

- 수요자별 다양한 수요에 부합되도록 정보를 다각화하고 목적에 맞는 맞춤형 조사·분석체계를 구축함.
 - 소비자 구매패턴 정보, 품목별 시장현황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정책수립·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분석을 담당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aT) 업계 대상 기초통계수집 및 생산 정보 확산에 주력

- 해외진출을 위해 아세안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DB를 확충하여 접근성을 강화하며, 수출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함.
-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SNS,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를 상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모바일 앱 개발, 통합사이트 추진 등).

4.2.3.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 지원

가. 중소식품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

- 기업 성장단계별(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차별화된 처방을 위해 시장조사·컨설팅·R&D 등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운용함.
 - 특히, 사회적 기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등에는 전담 멘토링 제도를 도입·시행
 - 한식연의 중소·중견식품기업 기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생산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함.
 - 우수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에 대해 ‘자율선택형 바우처’를 지원(업체당 1~2억원)하고 선도기업으로 육성
 - 자율선택형 바우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디자인 등 정책지원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업체당 1-2억 내외
 -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기업은

‘지역연계형 식품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정책지원 우대

- (주)농협식품 등 농협과 지역 내 식품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나. 외식업 협업화 지원 및 경영안전망 구축

- 외식업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구단위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우수 외식업 지구를 발굴하고 홍보함.
- 중앙정부 주도의 지구 육성을 지양하고, 지자체 및 민간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음식거리 발굴함.
 - 지역기반 외식업 육성을 위한 관련법령(외식산업진흥법) 개정 필요
 -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국산 식재료 구매 실적,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
- 우수지구 경진대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지자체와 지역 외식업소의 자발적인 협업 및 외식환경의 개선을 도모함.
 - 지자체소관 식품진흥기금이 외식업체 인프라 개선에 사용되도록 유도
- 외식업체의 창업준비 단계부터 경영·업종전환까지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조리시설이 갖춰진 매장을 무료로 임대, 직접 운영해볼 수 있는 외식창업인큐베이팅을 확대
 - 경영주의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자가 경영진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 지원
- 폐업·업종전환 등에 대비한 경영안전장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노란우산공제 등 기존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신규제도 발굴이 필요

다. 식품·외식업체 협력·발전모델 발굴 및 확산

- 식품기업 간 및 외식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건전한 협력모델 확산을 위하여 모범 협력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함. 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 또는 우선 선정토록 인센티브를 부여함.
 - 식품제조은 식품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협회 및 학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심사·발굴하고 언론 홍보를 추진
 - 외식은 외식산업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함께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 간 모범경영사례를 발굴
- 대-중소기업 간 역할을 분담한 건전한 협력모델을 확산함과 동시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불공정사례 접수창구를 마련, 불공정사례 파악
 -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식품업계 계도를 실시하고 불공정사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응
- 자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관리 및 영업 등을 협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을 유도함.

라. 지역별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 육성

■ 지역 인프라 연계·활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마다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산업화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역량강화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지역별로 식품산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 지자체의 식품산업정책 전달체계 등의 실태 조사·파악이 선결
- 이미 조성되어 있는 지역특화농공단지 및 품목별 연구소를 지역 특화 식품

산업 추진의 거점으로 활용함.

- 지역별 식품단지 입주업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교육 추진
 - 정부-지자체 연구소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R&D 수요를 파악하고 신기술 시범 적용
- 기존 사업단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도 필요하며, 지자체와 사업단이 매년 합동 워크숍을 개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신규 사업단 발굴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확산

- 스타트업 스쿨 및 보육매니저 등을 활성화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유도함.
- 농촌융복합시설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 조례제정을 독려하고, 지역 내 농산물 사용 등 지역 내 농업인과의 연계를 강화
- 기초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하고, 기반기술 개발·규제 개선·공동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합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 후보군을 선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확산체계 구축함. 이를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기초 인프라가 조성된 지역 및 품목을 특화산업 후보군으로 선정함.
- 제품 생산 및 체험·관광시설 등 기초 인프라 구축은 관련 정책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 등)을 연계·활용하여 지원
 - 지역 특화품목 생산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등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산업주체간 연계 도모

4.2.4.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가.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 식품제조업

- 영세 식품기업이 국산 원료 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이행 보증보험의 신규 도입을 추진함. 영세 식품기업이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시작하여 1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함.
 -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하되, 향후 외식업체 등으로 지원 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
- 식품업체와 생산자단체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생산자-기업 연계형 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식품업계 수요에 맞는 가공적성 품종을 개발함.
 - 생산자에게는 재배·수확 관련 기술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신제품개발·상품성 테스트 등을 지원하는 등 부가적인 지원도 필요
 - 기관별 분산된 가공적성정보를 통합하여 식품가공적성정보센터(fpdb.kr)를 통해 식품업체에 제공
- 기업의 국산원료 사용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규제를 발굴·완화하고, 기존 경진대회 개최와 사례집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지와 기업간 우수 협력 사례를 확산함.
 -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외식업

- 해외한식당협의체를 확충하고,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국내산 식재료 수출 증대를 도모함.
- 우수외식업지구를 중심으로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조직화를 유도하고 및 레스마켓 설치를 확대하여 농가 및 외식업체 동반성장을 도모함. 조직화 확산을 위해서는 물류비·저장시설 등의 지원을 추진함.

나. 농업인 가공 활성화 및 판매 플랫폼 지원

- 전국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가공센터를 중심으로 창업보육교육을 확대, 지역별·분야별 농산물 가공 연구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지원으로 농가 창업을 활성화함.
 - 신규 가공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기존 가공센터에 대해서도 HACCP 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고도화 추진
- 당류 및 나트륨 저감화, 유통과정 중 발효 제어기술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을 개발하여 창업농가에 보급하고 종합가공센터에서 많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표준 제조공정을 확립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함.
-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포장·디자인 컨설팅 및 안테나숍과 직매장 연계 등, 농업인 가공제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함.

다.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

- 전통·발효식품의 과학적 품질관리 및 산업화를 위해 토종 종균 및 유용 발효미생물을 발굴하고 표준생산공정 확립함. 장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고추장 등 장류 CODEX의 세계 규격화를 추진함.

- 소스산업화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등 기초 인프라 구축
- 김치중주국으로서의 위상 유지를 위한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김치 전방산업으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절임배추 및 김치양념산업을 육성하고 우수종균을 배양하여 품질 좋은 김치를 생산하는 등 수입김치와 차별화를 도모함.
 - 국가별 김치 수요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한국 김치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전통주는 전통주 업체의 제조·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여 견실한 성장을 돕는 한편, 지역특산주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맥주, 브랜디, 위스키 등도 전통주로 통합하여 육성함.
 - 한국술산업진흥원(가칭)을 설립하여 제조·숙성기술 R&D 및 양조용 발효제 산업화 등을 지속적 추진
 - 우리술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점을 발굴·홍보하고, ‘전통주해설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문화와 연계한 전통주 판매 유도
-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적 우수성 등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저변 확대함. 특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함.

라. 한식·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 한식진흥법(가칭)을 제정하여 한식의 정의, 산업실태조사, 연구개발, 한식당·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책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음식을 기반으로 음식관광을 활성화 함.
- 비만개선·대사질환 예방 등 한국 전통 식단의 과학적·영양적 우수성 규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고 향토·사찰·궁중·종가음식 등

의 조리법 체계화, 한식의 퓨전화를 통해 외국인 기호에 맞는 다양한 한식 메뉴를 한식당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함.

- 평창동계올림픽(2018), 도쿄 올림픽(2020),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 등을 계기로 관광객 대상 한식의 독창성·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함. 이와 함께 오프라인 위주였던 한식홍보를 온라인, SNS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추진함.
 - 국내·외 식품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보교류의 장(Food Summit) 마련

4.2.5.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가.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소통·협력의 장을 조성함. 유망 중소식품기업, 우수 외식업지구 등 정책 현장에 대한 소비자 팸투어를 추진하여 상호 신뢰 형성 기반 마련함.
 - 온라인, SNS 등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식품·외식분야 카드뉴스 등 정보제공 확대
- 소비자-생산자 공동 참여 프로그램(CSA)을 농업인 가공품 생산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등으로 다양화함.
 - Community Support Agriculture, CSA : 조직화된 소비자가 농가 경영비를 지불하고, 농가 체험 등을 통한 신뢰형성 및 농산물을 현물로 받는 협력 모델
- 우수 식품 선정(김치·전통주 품평회 등), 모범 협력사례 발굴 등 정책 추진 과정에 소비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와 정책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발굴함.

- 지역별 명예감시원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식품·외식분야 원산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대학생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하여 전자상거래 시장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나.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

- 식생활교육 추진체계 정비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제도의 확산 기반을 마련함. 지역 중심의 식생활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푸드플랜 연계 식생활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등 지역 인프라 확충을 추진함.
 -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확산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확대
- 어린이집·학교 등 보육·교육시설에의 어린이 식생활교육을 확대하고 연령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표준교재 개발 및 DB를 구축함. 국가표준식품성분 DB를 기초로 국민 식생활 관리에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전문 식생활체험 지도사를 양성함.
- 교육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농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 식품구입에 용도가 한정된 바우처를 지원하여 육류, 과일 등 양질의 식품 섭취와 섭취 품목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보건소 등의 영양·건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식생활 상담·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개인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다.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규모화된 재배지를 중심으로 GAP 실천마을(가칭) 조성을 검토, 안전성 검

사와 컨설팅 등을 통해 GAP 집단 인증 활성화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함.

- 유통·급식업체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 확대 및 홍보 강화를 통해 GAP 농산물의 지속적인 판로 확보
 - 내부관리자제도 신설을 통해 집단인증 단체의 자발적 관리 강화
-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는 2022년까지 HACCP 인증을 단계별 의무화하는 등 HACCP 인증을 확대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을 추진함.
- 의무화 사육규모는 소 100두, 돼지 200두, 닭 30,000수, 오리 5,000수 수준이 적절
 - 중요 인증기준 미 준수 시 1회 위반에도 HACCP 인증 취소, 잔류물질 검사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 2020년 식품 HACCP 적용 품목 확대에 대응하여 가공식품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영세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을 추진함.
- 2020년 HACCP 의무 적용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묵소시지, 음료, 즉석 섭취식품, 국수·유당면류, 특수용도식품, 순대

라.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 제고

- 해외식품 인증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내 식품의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함. 공신력 있는 해외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국제 공인연구소화 하고, 인증에 필요한 기초분야 공동연구 추진함.
- 할랄분야 국제 주요 인증기관인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BPJPH 등
- 기존 할랄, 코셔 이외에도 비건(vegan), 미국 수출식품 등으로 해외인증 취득 지원대상을 확대함.
- 현장심사 컨설팅, 식품 성분분석, 현지 시장정보 제공 등 지원

- 식품 안전과 관련된 美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및 라벨링 지원 병행
- 주요 수출국 대상 국가별 식품소비 특성 및 소비성향 등을 조사하여 한국식품 신뢰도 및 선호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외 한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식의 고품격화를 도모함.
 - 국산 식재료 사용, 서비스·위생수준 등을 기준으로 해외 우수 한식당을 평가·인증하여 우수 한식당모델 발굴·확산
 - 주요 한식메뉴에 대한 표준화된 외국어 표기법 보급 확대
 - 국내·외 한식교육기관의 수준을 제고하여 양질의 한식 전문인력 공급

4.3.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평가

4.3.1. 제3차 식품산업 진흥 계획 수립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안)의 세부과제를 포함한 5대 주요정책과제에 대해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함.

<표 5-1>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안)에 대한 우선순위

단위: %

주요 정책과제 (세부과제)	비중		
	전체	수혜자	전문가
①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18.4	17.9	19.3
②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성과중심의 R&BD 지원체계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혁신인력 양성 및 식품관련 교육 체계화,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수요자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25.0	25.1	24.9
③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지원 맞춤형 중소식품기업 육성, 외식업 협업화·경영안정화 지원, 식품·외식업체 협력·발전모델 발굴 확산, 지역별 특화 식품산업 육성,	20.7	20.7	20.7
④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전통식품 및 전통주산업의 성장산업화, 농업인 가공 활성화 및 판매 플랫폼 지원, 한식·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21.4	21.9	20.7
⑤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소비자 참여 확대,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해외 소비자의 신뢰 강화	14.4	14.4	14.4

주: 1~5순위 결과를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임.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이 수혜자와 전문가 모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지원,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제고 순임.
 - 전문가 그룹은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에 대해 수혜자 그룹보다 중요성을 다소 높게 평가

4.3.2.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안)의 세부과제별 중요도

가.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 전체응답자를 기준으로 유망분야 선제적 육성의 세부과제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27.8%)’로 나타난 가운데, 제시된 4가지 세부과제가 모두 20% 이상의 중요도를 기록함.
-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의 중요성을 32.1%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은 수혜자와 전문가 모두 25.0%씩 중요도가 나타남.

<표 5-2>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의 세부과제별 중요도

단위: %

세부과제	전체	수혜자	전문가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	25.0	25.0	25.0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27.8	31.4	22.3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	26.1	22.1	32.1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21.1	21.5	20.5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나.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 전체응답자를 기준으로 식품산업 혁신 인프라 확충의 세부과제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글로벌 역량 강화로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33.1%)’로 나타남. 수혜자 그룹에서 해당 과제에 대한 비중이 41.1%로 높게 나타나며, 전문가 그룹은 오히려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을 32.1%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전문가 그룹은 수혜자 그룹에 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체계 구축’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함.

<표 5-3> 식품산업 혁신 인프라 확충의 세부과제별 중요도

단위: %

세부과제	전체	수혜자	전문가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26.1	22.3	32.1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12.2	10.3	15.2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지원으로 혁신인력 양성	18.5	20.0	16.1
글로벌 역량 강화로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33.1	41.1	20.5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체계 구축	10.1	6.3	16.1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다. 식품·외식 산업 내 균형잡힌 성장지원

- 전체응답자를 기준으로 식품·외식 산업 내 균형잡힌 성장지원의 세부과제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중소식품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39.8%)’로 나타남. 뒤를 이어 ‘지역별 특화 식품산업 육성(29.9%)’, ‘외식업 협업화 지원 및 경영안전망 구축(15.3%)’ 순임.

- 전문가 그룹은 수혜자 그룹에 비해 ‘외식업 협업화 지원 및 경영안전망 구축’과 ‘식품·외식업체 협력·발전모델 발굴 및 확산’을 높에 평가하였으며, 수혜자 그룹은 전문가 그룹에 비해 ‘중소식품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 ‘지역별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 육성’에 보다 높은 중요도를 부여함.

<표 5-4>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지원의 세부과제별 중요도

단위: %

세부과제	전체	수혜자	전문가
중소식품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	39.8	43.4	34.9
외식업 협업화 지원 및 경영안전망 구축	15.3	13.2	18.3
식품·외식업체 협력·발전모델 발굴 및 확산	15.0	11.8	19.3
지역별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 육성	29.9	31.6	27.5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라.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 전체응답자를 기준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의 세부과제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51.5%)’로 나타남. 뒤를 이어 ‘전통식품 및 전통주산업의 성장산업화(23.9%)’, ‘농업인 소규모 가공 활성화 및 판매 플랫폼 지원(17.4%)’ 순임.
- 전문가 그룹은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에 대해 70.7%로 매우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으며, 수혜자 그룹은 전문가 그룹에 비해 ‘전통식품 및 전통주산업의 성장산업화(29.9%)’, ‘농업인 소규모 가공 활성화 및 판매 플랫폼 지원(21.9%)’에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함.
 - 한식·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도 수혜자 그룹(8.0%) 이 전문가 그룹(5.9%)에 비해 다소 높게 평가

<표 5-5>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의 세부과제별 중요도

단위: %

세부과제	전체	수혜자	전문가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51.5	40.2	70.7
전통식품 및 전통주산업의 성장산업화	23.9	29.9	13.8
농업인 소규모 가공 활성화 및 판매 플랫폼 지원	17.4	21.9	9.7
한식·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7.1	8.0	5.9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마.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 전체응답자를 기준으로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의 세부과제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36.3%를 기록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임. 특히, 전문가 그룹에서의 해당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48.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혜자는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를 34.9%로 더욱 중시함.

-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5.4%만이 중요하다 평가

<표 5-6>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의 세부과제별 중요도

단위: %

세부과제	전체	수혜자	전문가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29.2	34.9	20.5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	24.3	23.3	25.9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36.3	28.5	48.2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 제고	10.2	13.4	5.4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식품산업 수혜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부 록 1

주요국의 식품산업 정책동향

1. 일본의 식품산업정책

- 일본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하여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환경 변화 등에 따라 5년마다 변경하여 발표하고 있음.
 - 가장 최근인 2015년 3월에 발표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가운데 식품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도록 함.

1.1.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15) 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⁴

- 식품산업은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여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닌 지역의 주요 산업 중의 하나로써 지역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
- 이 때문에 수입식품과의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고령화 전개, 인구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 의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이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를 포함한 식품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함.

⁴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15.3.) 가운데 식품산업과 관련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을 정리한 것임.

1.1.1.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환경 조성

- 식품산업 사업자가 먹을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 속에서 리스크를 수반하는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향후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개호식품이나 먹을거리를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의·복·식·농(醫福食農) 연휴로 식품산업 사업자 등의 참여를 촉진함.
 - 이를 위해 새로운 개호식품(스마일 케어 식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방안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면서 향토요리와 결부된 개호식품 개발 등을 추진함.
 - 또한, 식품을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 레시피, 기능성 식품 등의 개발·보급과 함께 식품과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을 추진함.
 - 식품에 대해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면서 시장 확대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JAS 규격 등을 검토하여 제도화를 도모함.

1.1.2. 식품유통 효율화와 고도화

- 식품 유통 각 단계의 효율화와 기능의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신선식품 등의 유통기반인 도매시장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함. 또한, 그 기능을 재편한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시장마다의 입지조건이나 독자성 강화의 경영전략을 확립하고, 산지나 실수요자와의 연휴를 통해 생산물의 집하·판매를 실시함.
 - 청과물 등의 수출거점으로써 도매시장 활용을 목표로 새로운 방안 등을

마련하며, 농산물 선물시장의 시장 환경을 정비함. 또한, 배송의 공동화와 거래 전산화에 의한 식품유통 각 단계의 비용 절감, 다양한 소비자와 실수요자의 니즈에 대응한 다원적 유통 전개 등을 추진함.

1.1.3.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 가족경영 등 중소기업의 사업자가 많은 식품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확보 등을 위해 우수사례의 공유 등을 도모하는 관민 일체의 협의회를 설립하고, 로봇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함.
 - 또한, 지역 식품산업 사업자가 니즈에 맞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 기관 등과의 연휴도 도모함.

1.1.4. 환경문제 등 사회적 문제 대응

-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문제 등을 시초로 한 사회적 문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식품산업 사업자에 의한 온실효과 가스 배출 절감 등을 추진하고, 식품 로스 절감, 식품 유통과정에서 납품 기한 등에 관한 상관습의 개선 촉진, 소비자 보급개발 등의 국민운동 전개를 도모함.
 - 또한, 식품산업 사업자와 농업인과의 연휴로 식품 폐기물을 사료나 비료로 재생 이용하는 방안을 촉진함.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식료의 입수가 곤란한 소비자가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이동판매나 택배 서비스의 전개 등 식품산업 사업자와 지역 관계자 등과의 연휴도 추진함.

1.2.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15) 내 「글로벌 마켓의 전략적 개척」⁵

⁵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15.3.) 가운데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업무 중의 하나인 수출과 관련된 “글로벌 마켓의 전략적 개척” 부분을 정리한 것임.

-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식품 관련시장의 획득을 향해 성장이 현저한 아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보다 구매력이 높은 인구가 많은 구미시장도 중시하면서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식품산업의 글로벌 전개를 촉진함.

1.2.1. 관민 일체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촉진

가. 올 저팬(All Japan)에서의 수출 촉진체제 정비

- 지금까지 수출촉진 전략은 산지단위나 도도부현 단위에 머물러 특정 국가나 시기에 수출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올 저팬의 수출촉진 사령탑인 수출전략실행위원회가 품목별 과제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도록 함. 또한, 주요 품목별로 설립된 수출단체에 의한 수출확대 방안을 관계 부처 등이 제휴하여 추진함.
 - 수출전략실행위원회는 품목별 수출확대 방안인 수출확대방침을 매년 작성하여 검토하고, 물류효율화 등 품목횡단적 과제에 대한 정책을 검토함.
 - 품목별 수출단체는 국가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지원을 받으면서 당해 품목의 브랜드 확립, 산지 간 연휴, 수출대상국의 규제 등 업계 공통 과제의 해결할 방안을 마련함.
 - JETRO는 수출관련 정보 수집·발신 등의 기능과 상담창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박람회 출전이나 국내외 상담회 개최, 전문가 설치는 물론, 새로운 해외시장에서 판매촉진을 위한 거점 설치 등 수출사업자 등의 서포트 체제를 충실히 하도록 관계 부처와 제휴하여 추진함.

나. 수출저해요인 해소 등에 의한 수출환경 정비

- 수출대상국의 규제 등 수출촉진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대응 상황을 명확히 하여 수출환경과제 리포트를 매년 작성 후 공표하고, 수출환경과제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 계획적으로 추진함.
 - 수출대상국이나 사업자가 요구하는 HACCP, 할랄, GLOBAL GAP 등의

인증취득을 촉진함.

- 국제적인 거래에서도 통용되는 HACCP을 토대로 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규격·인증제도, GAP의 규격·인증제도 구축을 촉진함.
 -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물질로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지역에 대해 정부가 규제완화나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수출검역은 도매시장과 산지에서 수출검사를 실시하여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출을 목표로 한 사업자 등에 대해 외국의 검역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함.
 - 방일 여행자에 대한 수출가능품목의 정보 제공 등으로 농산물·식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
 - 국내 검역환경 정비와 함께 검역 상 수출 불가능한 국가나 품목은 중점 국가, 중점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검역협의를 전략적으로 실시함.
- 이러한 다양한 과제의 대응과 병행하여 개도국에 관민 연휴로 푸드벨류체인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푸드밸류체인(value chain) 전략(2014년 6월 책정)”을 근거로 국가 식품산업 해외전개를 통한 콜드체인과 유통판매망 정비를 추진함.
- 관계 부처가 연휴하여 국내 수출촉진을 위한 인프라(산지 시설, 도매시장, 물류망, 항만 등)에 대해 향후 환경정비 방안의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함.

다. 수출촉진 지향의 일본 음식·일본 식문화의 해외전개

- 일본음식(和食)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등록을 계기로 일본 음식이나 일본 식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바탕을 정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국내 일본 음식(和食)의 보호·계승을 도모하면서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촉진에 기여하도록 함.

- 밀라노 국제박람회나 올림픽·패럴림픽 도쿄대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일본 음식이나 일본 식문화의 해외전개를 전략적으로 추진함.
 - 해외 재외공관, 매스미디어 등을 활용한 일본 음식이나 일본 식문화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발신하고 브랜드화함. 민간단체에 의한 자격부여제도의 신설을 시작으로 일본 음식의 해외보급에 공헌하는 조리사 등을 육성함.
 - 국내에서는 외식 메뉴의 다언어화 추진 등으로 방일 외국인의 유입환경을 조성함. 이때 관민 합동의 협의회가 일본음식이나 일본 식문화를 효과적으로 해외에 보급하기 위한 전략을 책정하고, 관계자가 연휴하여 추진함.

1.2.2. 식품산업의 글로벌 전개

- 식품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현저한 아시아 등 세계 음식 관련 시장도 공략하여 그 사업기반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임. 이를 위해 일본음식이나 일본 식문화의 해외 보급을 도모하면서 식품산업의 해외전개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함.
 - “글로벌 푸드밸류체인(value chain)전략”에 기초하여 양국 간 정책대화나 경제연휴 등을 활용하고, 식품안전과 동식물검역 관련 규격이나 기준, 지적재산권보호 규제·제도 등 비즈니스 투자환경 정비를 추진하며, 관민 연휴로 푸드밸류체인 구축을 도모함.
 - 농산물과 식품에 관한 국제규격·기준을 국내 실태에 적절히 반영시키기 위해 그 규격·기준의 책정에 도달할 논의에 적극 참여함.
- 주요 국가의 HACCP 의무화 진전 속에서 국내 식품산업 사업자의 국제적인 거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대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에 의한 HACCP에 기초한 자주적 위행관리의 보급을 도모함. 또

한, 해외에서 평가되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사업자는 언어와 비용 면에서도 보다 쉬운 규격과 인증이 요구되므로 HACCP 관련 연수 실시 등 국내 HACCP의 보급을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함. 일본에서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HACCP을 기초로 식품안전관리 관련 규격·인증 전략을 구축하고, 관민이 제휴하여 추진함.
 - 사업자는 HACCP의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인재와 국제적 기준의 책정 과정에 참여 가능한 인재를 육성함.
- 해외 전개를 목표로 하는 식품산업 사업자는 사업검토 단계부터 현지 법인 설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서포트 체제를 도모함. 해외 진출 시 지식과 기술이 있는 현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의 대학과 연계하고, 식품가공·유통 관련 교육을 추진하도록 함.

1.3.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기반의 식품 관련 주요 세부지원책

1.3.1. 식품의 품질관리체제강화 대책사업

가. 배경

- 식품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식품의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재에도 식중독에 의한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HACCP 등의 도입을 통해 식품제조사업자의 위생·품질관리체제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HACCP 도입률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자의 HACCP 도입률은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나. 정책 목표 및 주요 내용

- 정책목표
 - 중소기업(연간 판매금액 1억~50억원) 식품제조 사업자의 HACCP 도입률 향상 2015년 35% → 2023년 50%
- 사업비: 169백만엔
 - 보조율은 정액이며, 사업실시 주체는 민간단체 등
- 주요 사업내용
 - HACCP, 위생관리, 품질관리에 관한 보급계발, 조사·분석 등 실시
 - : HACCP 도입이나 그 전제가 되는 고도화 기반정비의 정보, 수출대상국·지역이 요구하는 위생·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정보 등의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보급계발 자료의 작성·배포나 홈페이지 활용에 의한 정보 제공을 지원
 - 연수회 등 개최
 - HACCP 등 도입촉진에 관한 연수회 등 개최
 - : HACCP에 관해 책임을 지니고 추진할 수 있는 인재 및 HACCP 관련 지도가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회, HACCP 도입에 필요한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 연수회, 고도화 기반정비 연수회의 개최를 지원
 - 매니지먼트 체제 구축 등에 관한 연수회 등 개최
 - : 소비자 관점, 안전한 식품 공급을 중시하는 방침의 철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매니지먼트 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연수회 등의 개최를 지원
 - 수출촉진 지향 대응의 원활화에 관한 연수회 등 개최
 - : 수출 시 상대국가·지역에서 요구되는 HACCP의 위생·품질관리 기준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포함한 연수회 개최를 지원
 - HACCP에 관한 추적조사(Follow-up) 및 보급계발 실시
 - : HACCP에 의한 위생관리·품질관리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 HACCP의 보급개발 자료를 소매 현장에서 소비자에 배포하는 등 HACCP에 관한 소비자 이해촉진을 도모하는 전략을 지원
- HACCP 절차서 등 작성

1.3.2.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만들기 추진사업

가. 배경

- 건강식품(특정보건용 식품 제외)의 시장규모는 약 1조 2천억엔으로 추계되지만, 2015년부터 기능성표시식품제도가 시작되어 향후에는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이 때문에 건강관련 식품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지방의 생산 현장이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나. 정책 목표 및 주요 내용

- 정책목표
 - 2018년까지 기능성 농산물 및 6차산업화에 의한 가공식품의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을 새롭게 25억엔 창출
- 사업비: 173백만엔
- 주요 사업내용
 - 기능성 농산물 등의 음식에 의한 건강도시 만들기 지원사업
 - : 기능성 농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식품·식문화의 건강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 생산자, 식품관련 사업자, 대학·연구기관 및 소비자로 구성된 지역협의회가 시행하는 기능성 농산물 조리방법 개발, 지역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효과검증 등을 지원

- 사업비: 86백만엔, 보조율: 정액, 사업실시 주체: 지자체·민간단체 등에서 구성한 지역협의회
- 식품산업의 기능성 농산물 활용 촉진사업
 - : 기능성 농산물의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자나 중소기업 등의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이용 촉진과 관련된 환경정비 등을 지원
 -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노하우에 관한 연수 등 인재 육성
 - 식습관·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식생활 개선 툴 개발
 - 기능성 농산물 수요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수요처인 외식·중식 산업이 기능성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위탁비: 87백만엔, 보조율: 정액, 위탁처·사업실시 주체: 민간단체 등

1.3.3. 6차산업화 서포트사업 중 식품관련사업

- 6차산업화 추진의 전체 사업비: 2,287백만엔
- 6차산업화 추진 사업 가운데 식품과 관련되는 6차산업화 서포트사업의 주요 사업내용
 - 스마일케어 음식(새로운 개호식품)의 보급추진
 - : 스마일케어 음식(새로운 개호식품)의 상품개발·보급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스마일케어 음식의 이용에 관한 연수회 개최 등을 지원
 - 외식·중식 등의 국산 식재료 활용 촉진
 - : 외식·중식사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매칭이나 지역산 식재료 관련 정보공유체제 정비 등을 통해 외식·중식산업이 지역산 식재료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지원

1.3.4. 음식에 의한 방일 외국인(인바운드) 대응추진 사업

가. 배경

-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방일 외국인 여행자 4천만명, 이들 여행자의 소비액 8조엔을 목표를 설정한바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을 방문한 방일 외국인이 지역의 식품·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정비를 도모하고, 방일 외국인 수요를 농산어촌으로 유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 목표 및 주요 내용

- 정책목표
 - 방일 외국인(인바운드) 수요 증대와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확대 순환 실현(방일 외국인 여행 소비액 8조엔(2020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1조엔(2019년) 목표 달성에 기여)
- 사업비: 70백만엔
- 주요 사업내용
 - 지역 식문화자원 매력 활용·수요확대사업
 - : 지역 식품·식문화의 해외에서 브랜드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어촌지역의 농림수산물·식품, 식문화, 경관 등의 매력을 발굴하고, 지역 특유의 스토리텔링과 함께 영상화 작업을 지원
 - 사업비: 52백만엔, 보조율: 정액, 사업실시 주체: 민간단체 등
 - 음식 환대에 의한 방일 외국인(인바운드) 대응촉진사업
 - : 방일 외국인의 언어나 식습관 차이에 대응한 음식점을 확대하기 위해 가이드북 작성과 연수 실시
 - 사업비: 18백만엔, 보조율: 정액, 사업실시 주체: 민간단체 등

1.3.5. 식문화 발신에 의한 해외수요 프런티어 개척가속화사업

가. 배경

- 해외의 일본음식 레스토랑은 해외에서 일본음식·식문화의 이해의 장이며, 일본산 식재료의 판로로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을 일본산 식재료의 수출 거점으로써 활용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 목표 및 주요 내용

- 정책목표
 -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 확대(2015년 7,451억엔 → 2019년 1조엔)
- 사업비: 665백만엔
- 주요 사업내용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매력발신사업
 - : 탐 세일즈 실시, 일본 식문화 주간 개최, 재외 공관과 연계한 일본음식 매력발신을 추진
 - 위탁비, 위탁처: 민간단체 등
 - 일본음식·식문화 보급 인재육성사업
 - : 일본음식·식문화 보급을 담당하는 해외 인재 활용과 육성을 추진하고, 일본음식의 지식·기능 향상을 위한 초청연수 등을 지원
 - 위탁비, 보조율: 정액, 위탁처·사업실시 주체: 민간단체 등
 - 해외 일본음식 레스토랑 연휴·품질향상지원사업
 - : 요리사나 일본산 식재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해외 레스토랑 등을 리스트화하고, 연계·정보발신을 도모함으로써 일본음식·식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전달
 - 보조율: 정액, 사업실시 주체: 민간단체 등
 - 일본산 식재료 활용 네트워크 강화사업
 - : 일본음식 레스토랑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음식점 등에 일본산 식재료 공급체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지원
 - 보조율: 정액, 사업실시 주체: 민간단체 등

1.3.6. 농림수산업의 수출력 강화

○ 정책목표

-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 확대(2015년 7,451억엔 → 2019년 1조엔)

○ 사업비: 4,667백만엔

○ 주요 사업내용

- 수출전략의 실행체제 강화(사업비: 1,246백만엔)
 - : 수출전략실행위원회는 “농림수산업의 수출력 강화전략”의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
 - 수출전략실시사업(사업비: 141백만엔, 위탁비, 위탁처: 민간단체 등)
 - 수출력 강화 전략 실행 지향의 수출촉진체제 강화(사업비: 1,104백만엔, 위탁비, 보조율: 정액, 2/3, 1/2 이내, 위탁처·사업실시 주체: 민간단체 등)
- 수출종합 서포트 프로젝트
 - : 올 저팬 수출서포트·프로모션·브랜딩 기관 창설, 수출상담창구의 원스톱 대응, 전문가에 의한 지원, 할랄 등 새로운 과제 대응 세미나 개최 지원, 해외에서의 상담지원, 박람회 출전 지원, 마케팅 거점에서의 판매촉진 지원 등
 - 사업비: 1,601백만엔, 보조율: 정액, 사업실시 주체: JETRO
- 국제농산물 등 시장구상추진사업
 - :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인근의 도매시장 수출거점화를 추진하기 위해 청과물·화훼의 품질을 유지하여 빠르게 수출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거점화 구상의 책정을 지원
 - 사업비: 220백만엔, 보조율: 정액, 1/2이내, 사업실시 주체: 민간단체 등
- 식문화 발신에 의한 해외수요 프린티어 개척 가속화

- : 국산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탑 세일즈, 해외 일본 음식·식문화 보급을 담당하는 요리사의 육성, 해외 레스토랑의 일본산 식재료 활용 추진 등을 지원
 - 사업비: 665백만엔, 위탁비, 보조율: 정액, 위탁처·사업실시 주체: 민간단체 등
- 지리적표시보호제도 활용 종합추진사업
 - : 지리적표시(GI)의 등록 신청이나 지리적표시(GI) 보호제도 보급·활용 등을 지원
 - 사업비: 174백만엔, 위탁비, 보조율: 정액, 1/2 이내, 위탁처·사업실시 주체: 민간단체 등
- 식물품종 등 해외유출방지 종합대책사업
 - : 해외로 자국의 종묘 유출·무단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품종등록(육성자권취득)을 지원, 출원 매뉴얼 작성, 동아시아 식물품종보호 포럼 개최 등 지원
 - 사업비: 83백만엔, 위탁비, 보조율: 정액, 1/2 이내, 위탁처·사업실시 주체: 민간단체 등
- 해외규격과의 상호 인정, 일본발 규격 국제화
 - 사업비: 145백만엔, 위탁비, 보조율: 정액, 위탁처·사업실시 주체: 민간단체 등
- 수출촉진에 기여하는 동식물검역 등의 환경정비
 - : 산지에 대한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나 잔류농약기준에 포함된 기술적 서포트체제 정비, 수출검역협회의 신속화 도모를 위한 기술적 데이터 축적, 병해충 발생상황의 전국 조사, 가축질병대책 등을 지원
 - 사업비: 533백만엔, 위탁비, 보조율: 정액, 1/2 이내, 위탁처·사업실시 주체: 도도부현, 민간단체 등, 식물검역소, 동물검역소
- 식품산업 글로벌 전개 추진사업
 - 사업비: 188백만엔, 위탁비, 보조율: 정액, 위탁처·사업실시 주체: 민간단체 등

1.4. 시사점

- 일본은 관련 법률(「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식품산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별도로 책정하지는 않고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내에 포함하고 있음. 식품산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식품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HACCP 도입을 통한 식품제조사업자의 위생·품질관리체제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HACCP 도입률을 50%까지 향상시킬 계획임.
 -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HACCP 도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위생·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를 위해 HACCP 추진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건강관련 기능성 식품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기능성 농산물 조리방법 개발, 지역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효과검증, 인재 육성, 외식·중식산업의 기능성 농산물 적극 활용은 물론, 개호식품의 보급도 추진하고 있음.
 - 기능성·고령친화형 식품은 건강 중시 풍토, 노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중요한 식품산업 분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유망분야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됨.
- 일본의 식품산업 및 농식품 수출 관련 대책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식품·식문화 보급과 국산 농식품 활용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임. 즉, 농업과 식품과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여러 정책들이 제안되어 있음.
 - 우리나라도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문제가 상시 언급되는 과제이므로

식품산업과 농식품 수출 정책 수립 시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유럽의 식품산업정책

2.1. 네덜란드: 식품 R&D 투자로 식품연구소 육성

- 네덜란드는 농식품 부문에서 세계 제2위의 수출국이며, 각종 농산품 및 식품연구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농식품 생산액이 전체 GNP의 10% 수준을 차지하는 농업선진국임.
 - 농식품 수출은 2011년 농업총부가가치의 67.3%, 농업부문 고용의 67.7%를 창출하는 등 농업경제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 농업 부문 연구개발비용이 농업 GDP의 4% 이상
- 네덜란드는 농식품 R&D를 통해서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한 대표적인 국가임. 대표적인 식품연구단지인 푸드밸리(Food Valley)의 연간 매출액이 630억달러로 네덜란드 GDP의 10%를 차지함.

<네덜란드 Food Valley>

- 1997년 기업-대학-연구소간 시너지강화를 위해 와게닝겐 대학이 주도하여 조성함. 현재 약 1,440개 식품관련 업체와 70 여개의 식품과학 업체, 20개의 농식품 연구기관이 활동하고 있음. 총 종사자는 약 20만명임.
- 푸드밸리에는 H.J. Heinz, Nestle, Campina, Mead Johnson, Sobel, Heineken,

Givaudan, Grolsch, Monsanto, Abbott Laboratories, Numico Research 및 Royal Friesland Foods 등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2.1.1. TNO연구소

- 네덜란드의 TNO연구소는 1932년에 설립되었으며, 약 4천명이 근무하는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연구소임. TNO는 주로 식품 연구에서 에너지, 교통 등
- TNO는 과거 100% 정부 지원을 받는 국립연구소였으나 현재는 정부로부터 예산의 49%(지원금 + 정부수탁연구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51%는 수탁사업을 통해서 조달함.
- 2012년 기준 매출액은 약 9천원으로 추정되며, 짠맛 나는 저염식품 개발, 육지에서의 해조류 생산, 3D 식품 프린팅 등 미래지향적 식품R&D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TNO는 네덜란드 내 20개 지사를 두고 있고,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등 14개 해외지사를 운영하여 다양한 국가들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임. 이러한 글로벌시장 진출에 따라 TNO연구소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39%를 차지함.

2.1.2. NIZO 식품연구소

- NIZO 연구소는 1948년 200개 낙농업체가 출자해 설립된 식품연구소로 직원이 200여명에 달함. 초기에는 낙농업 위주의 연구를 수행했으나, 점차 식품 전체로 확대하였음.

- 식품분야는 맛, 가공, 안전 등 연간 600여개 과제를 수행함. 주요성과는 스위스 스타인즈치즈 개발, 박테리아를 이용한 발효유 개발, 등을 들 수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 상용화 파일럿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음.
- NIZO는 초기에 100% 정부수탁연구만 수행했으나 현재 예산의 70%를 민간으로부터 수탁하는 구조로 변화함. 해외지사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 4개지사를 운영하며, 수입의 60%를 외국업체와의 연구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음.

2.1.3. 시사점

- 네덜란드의 NIZO, TNO 연구소는 기업수요에 맞는 민간수탁과제를 확대하는 시장 지향적 모델을 도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 국내 식품 연구소는 대부분 정부수탁 과제에 의존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연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한국식품연구원의 민간수탁과제수를 늘리고, 해외 한국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LA 등에 한국식품 R&D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함.
 - 한국식품연구원의 민간기업 연구수탁 예산 비중 3%에 불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글로벌 식품기업과 글로벌 식품연구소를 다수 유치하여 국내외식품기업, 글로벌식품연구소, 국내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 식품산업 R&D 예산을 제조업 평균으로 증액하고 신성장동력산업기술에 식품 분야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국내 식품 제조업체의 1.7%만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 98.3%는 R&D 역량 없음
 - 연구개발조직을 보유한 식품기업의 '10~12년간 평균 매출액 증가는



30%, 전체 업체매출증가율 18%보다 1.7배 높음

2.2. 독일

2.2.1. 식품 전문교육시스템 구축(맥주전문교육 사례)

- 독일은 1,300여개의 양조장에서 6,000여종의 독특한 맥주를 생산, 매년 10월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에 700만명의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맥주 본고장임.
- 독일은 자국 맥주를 분석해 양조기술을 과학화하고 더 다양한 맥주를 양조하기 위해 독일 최고 공과대학인 뮌헨 공대와 베를린 공대에 ‘맥주구조학과’ 설립하였음. 두 대학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연간 약 150여명의 인력을 꾸준히 배출함.

<부표 1> 독일의 맥주 교육 연구기관

	<p>교육 과정</p> <p>① 브루마스터 양성 (7학기, 브루마스터 학위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조 기술 전수, 과학적 근거 교육 - 맥주 비즈니스 기본 지식 제공 <p>② 맥주 공학 (6학기 학사, 4학기 석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생산 분야 인력 생산 목적 - 맥주 제조 공정 및 장비 개발 교육(인턴십 이수 필요) - 생물, 화학, 제조학 등 기초과학 교육 <p>*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뮌헨 공대에서 ‘바이엔슈테판’ 양조장 인수 (독일명품맥주 바이엔슈테판 생산·유통 가능) - 연간 40~50명 배출
<p>뮌헨 공대 Brewing & Food Technology</p>	
	<p>교육 과정</p> <p>① 브루마스터 양성(4학기, 브루마스터 학위 제공)</p> <p>② 맥주 공학 (6학기 학사, 4학기 석사, 박사과정)</p>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공대 교수와 민간 양조장들이 1883년 VLB 설립, 현재는 양조 기술을 전 세계로 수출해 독일맥주 세계화 기여 <p>* VLB : 독일 맥주 전문 연구교육기관으로 삿포르(일본), 칭다오(중국), 하이트맥주(한국) 등 전 세계에서 교육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공대(연간 30~40명 배출), VLB(연간 40~50명 배출)
<p>베를린 공대 Brewing Science</p>	
 <p>되멘스아카데미 (DOEMENS Akademie)</p>	<p>뮌헨공대, 베를린공대와 더불어 독일 3대 맥주양조교육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루마스터 전문학교로 매년 20~40명 양성, 2년 과정 - 세계적인 맥주사업 컨설팅 기관 - '15.4월 한국 진출 (DOEMENS Biersommelier과정 개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식품산업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7가지 성공 키워드」, 2015

- 뮌헨공대는 독일 암연구소의 의뢰로 맥주 호프성분 중 항암효과가 있는 ‘잔토희몰’을 일반 맥주보다 10배 이상 강화한 ‘항암맥주’를 개발한 바 있으며, 베를린 공대는 2011년 일반맥주와 맛이 같은 무알콜맥주를 개발한 바 있음.

2.2.2. 급식·배달식 표준인증제도 구축

- 2008년 독일 농식품부(Bundesministerium fuer Ernaehrung und Landwirtschaft: BMEL)는 산하기관인 독일영양학회와(Deutschen Gesellschaft fuer Ernaehrung, DGE)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각 생애주기별 식생활 관련된 급식 표준화 제도(DGE-Qualitaetsstandard)를 추진함.⁶

<부표 2> 독일의 급식 표준인증제도



자료: 독일 inform 홈페이지<www.in-form.de>

- 특히, 2009년에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급식표준화와 인증시스템 “Fit im Alter- Zertifizierung(FIAZ)”, 2010년 재가노인을 대상으로한 식사배달서비스 (Essen auf Raedern, EAR)의 표준인증시스템을 추진하여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⁶ 독일은 농식품부에서 영양정책까지 관장하고 있으며, 독일영양학회(DGE)는 영양과 관련한 연구,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간행물을 발행하는 등의 역할을 주요 과제로 함. 농식품부를 통해 연간 예산의 70%를 지원 받고, 나머지 30%의 예산은 자문, 회비, 출판 등에 의해 충당하고 있음.

- DGE는 급식표준화 제도를 통해 조리과정, 시설 등 영역에 대한 관계자들과 급식 기관 및 업체들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급식제공을 위한 구성요건을 제시함. 또한 건강한 급식의 제공을 위한 식재료의 선택에서 부터, 식재료 급식빈도, 식단의 구성, 음식의 준비과정, 그리고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각각 설명하고 있음.

2.2.3. 시사점

- 국내에서도 2015년 충남발효식품고가 명칭을 한국식품마이스터고로 변경하였고, 영천상업고도 2016년부터 식품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국 44개 마이스터고 중 식품관련 마이스터고 2개에 불과함.
- 전문대학에서도 양조 관련 전공이 개설되는 등 초기단계이며 연구보다는 창업이 가능한 일반인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체계적인 주류 연구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 농식품부는 한국식품연구원,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대경대를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영동대 등은 자체적으로 주류 전문가 양성을 양성하고 있음. 그러나 독일과 같이 전통주인 막걸리 등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함.
 -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를 와인과 같이 기능성분에 대한 체계적 성분 규명과 생리작용 기전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없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전통주를 연구하는 곳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유일
- 막걸리의 경우 건강상 효능 관련 연구 결과 없어 중국 등 신시장에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막걸리의 효능 규명, 생막걸리 고유 맛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발효법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함.

- 또한 마이스터고에 식품관련전문학과를 확대하고 양조학과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여 향후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전통주 연구 확대를 위해 연구인력과 관련연구 예산 확대 지원이 필요함.
- 현재 농식품부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서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 급식·영양은 보건복지부(학교급식은 교육청)가 담당하고 있음. 향후 급식영역에서의 외식산업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관련 연구와 농식품부의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3. 프랑스

2.3.1. 농식품 차별화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제도

- 프랑스는 농산품과 식료품분야의 지리적 환경이 빼어난 품질과 차별적 특성을 지님을 고려하여 명칭을 법규에 의해 통제함으로써 프랑스 농식품의 명성을 보호하고 차별화를 추구하여 와인을 비롯한 식품시장을 주도함.
- 가장 먼저 종합적인 틀이 갖춰진 것은 와인이며, 1935년에 '와인의 원산지 명칭통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A.O.C(원산지명칭통제: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의 카테고리를 확립함.
 - 치즈는 1919년의 원산지명칭법에 의거한 법원의 판결과 1925년의 로크포르 보호법, 1956년의 쿵테·강탈 보호법 등으로 보호받아오다가 1990년 새로운 법으로 모든 농식품에 대해 AOC승인절차가 표준화되면서 AOC로 통합
 - 현재 AOC품목은 와인, 생수, 치즈 등의 유제품, 올리브유, 과일과 채소,

꿀 등

- A.O.C는 지명을 최상급 증표로 하여 'Appellation 원산지명 Controlee' 형태로 표시함. 예를들어 메독(Medoc)포도주의 경우 'Appellation Medoc Controlee'로 표시함.
- 프랑스는 품종, 농도, 맛 등 종합적 품질관리기준 적용) 포도재배 지역의 지리적인 경계와 그 명칭을 정하고, 사용하는 포도의 품종, 재배방법, 단위면적 당 수확량의 제한 그리고 제조방법과 알코올 농도, 생산된 와인의 맛과 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품질관리규정을 적용함.
- 2009년 8월부터 와인에 대한 유럽법규를 받아들여서 유럽공통의 최상위제 품등급으로 AOP(Appellation d'Origine Protegee)를 사용하고 있음. 프랑스 영향으로 와인을 자국의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각 나라마다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프랑스 AOC(Appellation d'Orgine Controlee)
 - 이탈리아 DOC (Denominazione d'Origine Controllata)
 - 독일 QMP (Qualitätswein mit Prädikat)
 - 캐나다 VQA (Vintners Quality Alliance)
 - 스페인 DOC (Denominación de Origen Controlada)
 - 포르투갈 DOC (Denomonacaode Origen Controlada)
- AOC와 관련된 사항들은 국립원산지명칭관리소(INAO)에서 담당함. INAO는 농림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AOC의 신청에 대한 승인절차를 관장하는 등 국가주도의 식품 품질관리를 추진함.

2.3.2 시사점

- 우리나라도 농산물의 명성·품질·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지리적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특정 지역 이름과 해당 농식품의 특별한 품질 및 명성이 결합된 경우로 ‘지명 + 품명’(예: 보성녹차)을 상표로 등록하여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품
- 그러나 동일지리적 권역내 저품질 생산자를 규제할 방법이 적절치 않고 지리적 표시 농식품에 대한 차별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지역권역내 일정 품질 수준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로 공동 출하하는 등 철저한 품질등급 관리를 통해 동일지역내 저급품에 대한 출하 규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등 유럽과 같이 지역내 농식품에 대한 다양한 품질등급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적 가치를 극대화
- 또한 지역내 생산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연합조직을 구성하여 품질규정에 대한 실천,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함.
 - 프랑스 포도주 ‘사업자 연합조직(Organisation Interprofessionnelle)은 농업, 세무, 보건 담당 행정조직, 포도생산농가, 포도주 생산자 및 산지유통업자로 구성하여 포도주산업 성공을 위한 자발적 노력 추구

3. 미국의 식품산업정책

3.1. 미국 식품 및 영양지원정책

- 미국정부는 70여종의 다양한 형태의 식품 및 영양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은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산하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이 관리·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산하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AOA)이 관리·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USDA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은 매년 “농업법(Farm Bill)”에 의거 승인·운영되는 프로그램과 기타 “아동영양법”, “영양법”, “러셀 국내학교 점심급식법”에 의거 승인·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음. 이들 프로그램은 USDA- FNS 사무소, USDA 지역사무소, 주정부 기관들(state agencies)이 연계하여 시행함.
- USDA는 보충적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노인 파머스마켓 영양프로그램, 상품형 보충 식품 프로그램(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CSFP) 등의 노인대상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부표 3> USDA의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

농업법(Farm Bi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적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 상품형 보충 식품 프로그램(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CSFP) • 신선과일·채소 제공 프로그램(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FFVP) • 노인 파머스마켓 영양 프로그램(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아동 영양법, 영양법, 러셀 국내학교 점심급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영유아를 위한 특별보조영양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 WIC 파머스마켓 영양 프로그램(WIC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 아동 영양 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점심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 - 여름 방학 중 급식 프로그램(Summer Food Service Program, SFSP) - 우유급식 프로그램(Special Milk Program) • 아동 및 성인 보호 급식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P)

자료: 이계임 외. 2012. 식품지원제도 활성화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 연방정부의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 가구, 아동, 임산부 및 영유아, 노인과 같이 영양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큰 예산지출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으로 2016년 708.7억 달러이며, 학교 점심급식 프로그램(NSLP) 135.3억 달러, 여성, 영유아를 위한 특별보조영양 프로그램(WIC) 63.5억 달러 순임.

- 최근 비만과 만성질환 발생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USDA의 식품 및 영양지원정책은 과거 식품 및 영양지원을 통한 영양부족 문제 해결에서 양질의 균형이 잡힌 식품지원을 통한 비만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방정부 지원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들은 식품관련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품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이계임 외, 2012).

3.2. 시사점

- 미국은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식품을 지원함으로써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식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원품목이 신선식품이지만 학교급식지원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소비도 늘릴수 있을 것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 농촌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식품지원프로그램은 국민 식생활 및 영양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산 농식품의 소비 확대 전략도 수립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한국의 혁신수준분석』.
- 국승용, 최지현, 조소현, 강혜정. 2011. 『천안시 식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기획재정부. 2017. “지표로 본 경제: 잠재성장률과 경제상황”. 『경제이야기』.
- 농림수산식품부. 2011.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요약본).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년도 식품산업 주요통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업정책금융보험원 내부자료
- 대한민국 정부. 2016. 『성과보고서』.
- 박기환, 김경필, 이병훈, 허성운. 2013. 『농식품 수출진흥 중장기 종합정책 마련 연구: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출시장 확대 방안 중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박민규. 2012. 『대구지역 식품산업 육성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박성진, 전창곤, 김동훈. 2016.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R7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 규모 동향 분석』.
- 이계임, 황윤재, 이동소, 김가영, 이윤나, 김기량. 2012. 『식품지원제도 활성화연구』. R6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선, 박미성, 한석호, 문한필, 박한울, 박지원, 박성진, 정도채, 정대희. 2016.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희.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식품산업 전망과 과제”. 『2018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자료집』.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 『식품산업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7가지 성공 키워드』.
- 최지현, 김병률, 김성우, 이동소, 김윤진, 차원규, 박재홍, 강혜정, 안동환. 2013.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5/5차연도): 식품산업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 이계임, 김경필, 국승용, 조소현. 2009.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1/5차연도): 식품산업의 구조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전창곤, 박기환, 김경필, 이동소, 차원규, 박재홍, 강혜정. 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4/5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전창곤, 이계임, 국승용, 한재환, 김동훈, 조소현, 이선령. 2010.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2/5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전창곤, 이용선, 장재봉, 조소현, 하홍근, 박규미, 전혜미, 박재홍, 강혜정. 2011.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3/5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활동 현황”. 『KISTEP 통계브리프』.

한국은행. 2017. 『경제전망보고서』.

홍석인, 한대석, 조용제, 이성훈, 박진성 외. 2009. 『식품산업 R&D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식품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황의식, 유찬희, 허주녕, 전지연. 2014. 『식품산업분야 재정지원체계 개편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문헌>

Hollanders, H. and A. Arundel. 2005. European Sector Innovation Scoreboards. European Trend Chart on Innovation. EC.

일본 농림수산성. 2015.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웹 사이트>

국가통계포털<kosis.kr>.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독일 inform 홈페이지<www.in-form.de>.

일본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